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 제1호

---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도 시행계획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 I

## 2022년 시행계획 요약

- I. 추진 개요
  - II. 그간 주요 성과
  - III. 2022년 시행계획 개요
  - IV. 202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붙임1] 2022년 시행계획 신규추진 사항
- [붙임2] 2022년 시행계획 종료과제
- [붙임3] 2022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내용
- [붙임4] 과제별 소관부처



## 목 차

I. 추진 개요 .....	5
II. 그간 주요 성과 .....	7
III. 2022년 시행계획 개요 .....	11
IV. 202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	13
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13
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17
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20
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24
[붙임 1] 2022년 시행계획 신규추진 사항 .....	27
[붙임 2] 2022년 시행계획 종료과제 .....	28
[붙임 3] 2022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주요내용 .....	29
[붙임 4] 과제별 소관부처 .....	36



# I

## 추진 개요

### 1

####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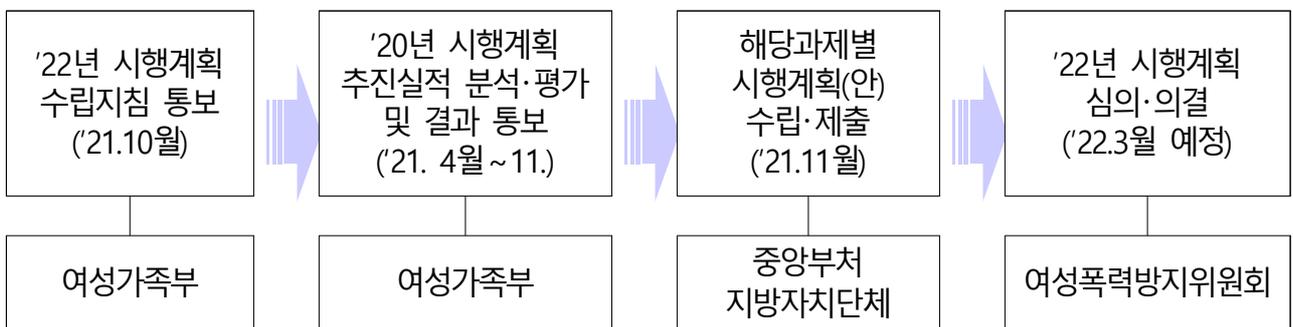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주재 여성가족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 수립(‘20.2.20)
-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3대 목표(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내실화, 여성폭력 근정 정책 추진기반 강화) 설정
-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과제\* 14개 정책과제 수립

\* 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②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③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④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2

#### 2022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년 시행계획(‘20.5) 및 ‘21년 시행계획 수립(‘21.3)
- 여성가족부 장관의 ‘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21.4~11.), ‘22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1.10)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22년 시행계획(안) 수립



< 제1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2020~2024) 체계 >

비전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3대  
목표

- ▶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한다.
- ▶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을 전문화, 내실화한다.
- ▶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전략  
과제  
및  
정책  
과제

4대 전략과제

정책과제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1.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
2. 신종 여성폭력 대응 강화
3.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4.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1.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
2. 형사사법체계의 2차 피해 방지
3. 재범 방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1. 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폭력 근절
2. 민간·공공부문 등 조직 내 여성폭력 근절
3. 여성폭력 피해 지원서비스 전문화
4. 여성폭력 예방·홍보 내실화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1.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
2.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 연계·협력 강화
3.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II

## 그간 주요 성과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20.4월) 및 추진
  - 처벌의 실효성 강화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을 강화·신설(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20.5월) 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신설(대법원 양형위원회, '21.1월)
    -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형법·성폭력처벌법, '20.5월)하고, 범죄수익 환수 근거 마련(범죄수익은닉규제법, '20.5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벌금형 삭제하고 징역형 상향하는 등 법정형 강화, '광고, 시청, 구입죄' 신설 등 처벌 강화(청소년성보호법, '20.6월)
  -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기반 마련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 신설 및 경찰의 위장 수사 특례 도입(청소년성보호법, '21.3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삭제 근거 마련(성폭력방지법, '21.1월) 및 선제적 모니터링 시행
    - 성적 영상물 유포협박죄·촬영강요죄 신설(성폭력처벌법, '20.5월)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13세 → 16세, '20.5월)
    - 청소년 대상 성착취 등 불건전 만남을 매개하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 매체물 지정('20.12월)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청소년 유인행위 감시 강화
  -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성폭력처벌법, '20.5월)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법적 용어 변경하여 사회적 경각심 제고(청소년성보호법, '20.6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추진('21년 하반기)

○ 피해자 지원 내실화

-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전자심의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에 대한 심의기간을 3일→24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유포 최소화('20~)
- 지역 내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21년 총 7개 지역)
- 성매매에 유입된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청소년성보호법, '20.5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20~)

□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맞춤형 대응체계 강화

- 교육, 문화·예술, 체육, 공공부문 등 분야별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 (교육부, 문화부, 고용부, 여가부)

- (교육) 스쿨미투 대응을 위한 시·도 교육청 소속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확대(5개 → 10개) ('20.8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 및 보급('20.9월),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기관평가인증 시 반영,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고등교육법」개정 '21.3.23, 시행 '22.3.24)
- (문화·예술) 문화예술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안내 통합페이지 운영,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계약해지 등 조항 명문화(대중, 만화, 출판 등 7개 분야) 등
- (체육)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보호전담기구(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20.8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사건의 신고접수와 조사, 치료·상담 등 피해자 지원,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육인 징계 이력 관리, 체육단체 등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점검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8.28)」 발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0.8.5) 등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20.1월),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 창구 개설('20.12월) 기관별 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및 대상 기관 단계적 확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개정, '2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고위직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실태 등 전수조사('21.3월~6월),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여성가족부장관의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권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 근거 마련(「양성평등기본법」개정 '21.4.20, 시행 '21.10.21)
- (신고자 보호)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성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포함되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자가 구조금 신청 가능, 신변보호 등 피해자·신고자 보호조치 강화(「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5.19, 시행 '20.11.2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 맞춤형 예방 교육, 가해자 제재 강화 등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 도모
  - (예방교육)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교육 확산, 폭력예방 교육 점검 및 컨설팅 실시로 공공부문 여성폭력방지 내실화(교육부, 문체부, 고용부, 국방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텐츠) 고위직 대상 특화교육(1종, 워크북 별도), 중고등 대상 폭력예방교육(3종),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디지털성범죄 및 2차피해 예방교육(2종), 초중고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17종), 공공부문 대상 여성폭력 2차피해 예방교육(1종, 지침서 별도), 수사기관 대상 여성폭력 2차피해 예방교육(1종) 등 개발</li> <li>■ (폭력예방교육) 교육 기회 및 접근성 취약 민간기업, 체육인, 대학(원)신입생, 사회초년생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학생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발달단계별 성인권 교육 추진, 예술인·교원·공무원·이주여성·외국인근로자·북한이탈주민 등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실시 등</li> <li>■ (규정)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화('20.6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21.2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li> <li>■ (점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후속조치 이행 및 컨설팅 실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지도·점검</li> </ul> <p>*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6만여개) 교육실적 점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21. 9월)</p>
--

- (가해자 제재)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 시 의무조항 신설\*\* (교육부, 인사처)
  - \* 성비위 교육공무원의 징계결과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보, 성매매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 조정(최소 '견책' → '정직'), 성비위 관련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담임보직에서 배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20.12))
  - \*\* 징계위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 1/3이상 포함 의무화(공무원징계령 개정)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내실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제도 개선(법무부, 여가부)

구분	기 존	개 선('21.1.21. 시행)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 응급조치로 가·피해자의 '분리'만 가능하여 격리가 어려움	▶ 유형에 '현행법 체포'를 추가하여 피해자 신속 격리
	▶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징역 또는 벌금 부과로 제재 강화
	▶ (긴급)임시조치 중 접근금지는 장소 기준	▶ 사람 기준으로 변경
가해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 피해자보호명령은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 관련 규정 없음	▶ 유죄판결 선고 시 수강·이수명령 병과 규정 신설
	▶ (가정폭력범죄 유형) 주거침입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 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추가
	▶ 관련 규정 없음	▶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 신설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도모

- 법령 개정을 통한 공공부문 사건 발생시 수사기관 신고·여가부 통보 의무,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제도화<성폭력방지법(‘21.7) 및 양성평등기본법(‘21.10)>

【 법령 개정 】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즉시 통보(‘21.10)
- 위력에 의한 사건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 중대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및 시정·보완 요구 근거 마련

□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 마련

- 국가적 책임하에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온라인그루밍, 스토킹 등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법률 제·개정 추진(법무부, 여가부)

개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li> <li>▶ 온라인그루밍 처벌 법제화(‘21.3.23)</li> <li>▶ 디지털 성범죄 대상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마련(‘21.3.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토킹, 온라인그루밍 등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시행(‘20.5.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근절,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적극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성착취 구조로부터 탈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추가(‘2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li> </ul>

- ‘2차 피해’ 개념 법제화,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의무화 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토대 마련(여가부, 법무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법·제도 개선 】

- (2차 피해)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규정, 국가·지자체의 2차피해방지지침 제정\*
  - \* 중앙행정기관(47개) : 제정(43), 제정중(5), 지자체 및 교육청(438개) : 제정(396), 제정중(42)
- (교육 및 피해최소화 의무) 검찰, 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의무화, 국가 및 지자체의 2차 피해 최소화 의무 규정(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 \* 경찰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해양수사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최초 실시, 2차 피해 예방교육 표준강의안(3종) 및 교재(3종) 개발, 온라인 강의 시연회(‘20.11월)
- (2차 피해 방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벌금 2천 → 3천만원) 등(‘20.10월, 성폭력방지법 개정)
  - \* (기존) 부당한 인사조치 → (개선)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대해 규정

### Ⅲ 2022년 시행계획 개요

#### 1 2022년 정책추진 여건

-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필요
  - 전통적 유형의 여성폭력과 함께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등 증가 추세
    - \* 성폭력 검거인원 : ('15) 27,166건 → ('20) 33,717건
    - \* 1366 스토킹 상담(건) : ('17) 634 → ('19) 1,294 → ('21) 2,710
  - 스토킹처벌법이 제정('21.4월 공포, '21.10월 시행)되었으나,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한계
  - 마약류 등 약물이용 성범죄 증가에 따라 선제적 예방을 위한 탐지 기술 개발 등 종합적 대응 필요
-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여성폭력 범죄 유형의 다양화 및 아동·청소년 피해 증가
  - 텔레그램, 메타버스 등 새로운 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진화하고, 그 방식 등이 다양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중 10·20대 비율 : ('19)39.5% → ('21)42.3%
- 종합적·체계적 여성폭력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필요성 증대
  - 정확한 여성폭력 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의 현황 및 실태 파악 중요성 증대
  - 여성폭력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여성폭력 통계의 체계적 구축 필요

## &lt; 중점 추진방향 &gt;

- ◇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 ◇ 분야별 조직 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처벌 실효성 제고 등 추진
- ◇ 여성폭력통계 구축 등 종합적·체계적 여성폭력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 2022년 시행계획 개요

- '22년 시행계획은 총 120개 과제로 관련 법 개정 등 과제종료에 따라 전년대비 2개 과제 감소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과기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여가부) 등 2개(붙임2)

4대 전략과제	중점 추진과제	과제수(개)	
		'21년	'22년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	8	8
	· 신종 여성폭력 대응 강화	6	5
	·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2	2
	·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	16	16
	<b>소 계</b>	<b>32</b>	<b>31</b>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	3	3
	· 형사사법체계의 2차 피해 방지	10	10
	· 재범 방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4	4
	<b>소 계</b>	<b>17</b>	<b>17</b>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폭력 근절	13	13
	· 민간·공공부문 등 조직 내 여성폭력 근절	11	11
	· 여성폭력 피해 지원서비스 전문화	8	8
	· 여성폭력 예방·홍보 내실화	9	9
	<b>소 계</b>	<b>41</b>	<b>41</b>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	18	17
	·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 연계·협력 강화	3	3
	·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 기반 마련	11	11
	<b>소 계</b>	<b>32</b>	<b>31</b>
<b>합 계</b>		<b>122</b>	<b>120</b>

- 부처별로 여가부 60개, 법무부 26개, 경찰청 27개, 고용노동부 9개 등 총 19개 기관에서 과제 추진(부처별 공동 추진과제 포함)

## 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①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

## ○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강화

-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신학기·하계기간 등 시기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근절 예방 활동\* 전개 △탐지기술 개발·보급 △불법카메라 점검 및 증거물 보안 등 현장대응지침 마련 (경찰청)

\* (신학기) △불법촬영 등 성폭력 예방 홍보 안내문 제작·배부 △예방 캠페인 등 (하계기간) △여름경찰관서 內 「성범죄전담팀」 운영 △다중이용장소 점검·개선 등

- 집중단속기간 운영 및 상시단속 체계 유지, 위장수사 활용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범죄수익 추적 및 국제청 통보 등 디지털성폭력 유통망 및 유통 사범 집중 단속 (경찰청, 여가부, 지자체)

\*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중점 단속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상 선제적 모니터링 실시 (여가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과 경찰청 ‘불법추적 시스템’ 연계를 통해 피해영상물 등록, 수사정보 및 심의결과 공유 등 협업 강화 (경찰청, 여가부, 방통위, 방심위)

##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치 강화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성폭력 범죄 및 불법촬영 위험도가 높은 지역 선정, 단속활동 전개 (각 시·도경찰청)
-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운영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

\* 공중화장실,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단체, 국철구간 주요 역사 등 수시 점검

## ② 신종여성폭력 대응 강화

### ○ 불법영상물 촬영에 대한 규제 강화

- 변형카메라 취급자 등록제 도입 및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등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 추진 (과기부)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목욕실,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 내 개인영상 촬영 금지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 ○ 불법영상물 유포 방지 관리체계 구축

-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고시,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와 관련한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방통위)
  - \* 주요인터넷사업자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등
- 「공공 DNA DB」\*구축·배포 등 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안정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방심위)
  - \*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음란 영상의 고유한 특징값(DNA값)을 추출하여 조치의무사업자 등이 차단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저장소

### ○ 약물이용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 현장·전문수사관용 탐지기\*와 일반 국민용 키트를 개발\*\*하는 등 대국민용 키트 상용화 추진 (경찰청)
  - \* 마약 7종 : 코카인, 몰핀, 헤로인,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알프로졸람, Fentanyl
  - \*\* 마약3종 :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THC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약물이용 성범죄 관련 신고, 대처방법 및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경찰청, 여가부)

### ③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외 공조
  - 인터폴 ICSE\* DB 활용 및 해외수사기관·IT기업과 직접 공조수사로 해외에 서버를 둔 아동성착취물 불법유포사이트 운영자 검거추진 (경찰청)
  - \* International Child Sexual Exploitation : 온라인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영상촬영지·피해아동 특정을 위한 인터폴 플랫폼
  - '22년 'UN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 등에 참여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논의 (법무부)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해외 공조
  - 해외성매매 사범 여권발급 제한, 인터폴 공조기반 강화로 해외성매매 알선 사이트 상시단속, 해외성매매실태조사 결과 공표 (외교부, 경찰청, 여가부)

### ④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

- 아동 성매매 근절
  - 성인 스팸 발송업체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위장수사\* 등을 활용, 아동·청소년 대상 SNS상 성매매 유인 행위 적극 수사 (방통위, 경찰청)
  - \* 기 배포('21.9)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도경찰청별로 선발된 위장수사관(17명) 활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우려가 높은 채팅앱, 불법 동영상 사이트 등 모니터링\*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구조, 상담, 치료회복 등 지원(여가부)
  - \* 방통위,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 병행('21년 1,360건)
- 1인 가구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확장 및 고도화를 통한 범죄취약지 불안 환경 개선 및 지자체 협업을 통한 시기별·테마별 집중예방활동 지속 추진 (경찰청, 지자체)

○ 장애인 대상 여성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 여성발달장애인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집중 실시\*,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모니터링 추진 (복지부)

\*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 67.8%(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대(7개소→8개소) 및 인력확충 (여가부)

○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조치 강화

- 일반국민 대상 이주여성 인식개선 홍보 및 국내체류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 예방 교육 실시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 외국인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및 성희롱 예방교육 취약의심 사업장 중점 점검\*(고용부)

\* 3,000여개 사업장 대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징계조치 여부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강화

- 현지사전교육 온라인 콘텐츠 마련 및 참여자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체계 마련 등 결혼이민예정자 교육 확대\* (여가부)

\* 현지사전교육 참여인원 : ('21) 866명 → ('22) 1,000명 이상

- 출입국·외국인청 별 고충상담관 지정 및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외국인 권리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법무부)

-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지원 내실화를 위한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 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개선 추진

\* 하나센터, 지자체, 여성폭력 지원 시설 등과의 연계 강화

## 1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

### ○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APO(학대예방경찰관) 증원 추진 등 가정폭력사건 대응능력 강화 (경찰청)

\*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구조 개선,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

-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가정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보고·점검체계 마련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 강화 (경찰청)

\* 가정폭력 발생 가정별 △신고 건수·주기 △사건처리 건수·결과 △임시조치 결정 여부 △가·피해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발 위험성을 수치화

#### [3중 보고·점검체계 주요 내용]

<1重> 3회 이상 반복신고에 대한 '112신고현황', 여청·형사 '일일사건보고' 표준서식 활용, 기능별 취합본 서장 全數 보고·결재 및 수사 지휘

<2重> 전일 근무 팀장은 3회 이상 반복신고건에 대해 '112신고·수사이력, 범죄경력' 등을 반드시 검토해 일일사건보고 기재·보고

<3重> 시도청 해당 기능별로 각 경찰서별·일자별 사건보고서 취합(3년 보관), 중요사건 발생 후 조치사항 확인 및 사후점검 등 체계적 관리

### ○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의 현장 대응 강화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 의무 통지 등 법 개정으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현장 법집행력 확보 (경찰청)

- 시범 운영 중인 스토킹전담경찰관 확대 및 정원 반영 추진, 스토킹 재발 위험 판단기준\* 마련 등 스토킹 대응체계 고도화 (경찰청)

\* 스토킹 유형(애정형, 망상형, 가학형 등) 및 행위자 위험성에 따른 보호조치 수준 판단

## 2 형사사법체계의 2차 피해 방지

### ○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여가부)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고용부)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12명), 진술조력인 확대 추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교육 강화 (법무부, 대검찰청)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경찰관 교육 강화 및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도입 (경찰청)
    - \* 피해자의 풍부한 진술 유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위해 AI 기술 활용 상담 챗봇 도입
  - 클라우드 저장매체에서 파일을 복제해 압수와 동시에 성착취물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매뉴얼 개정 (경찰청)
-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형사사법시스템(KICS)을 활용하여 피해 유형별·대상별 정보 제공 등 가정폭력 대응 쏘 단계에서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청)
    - \* 안내서 표준양식 마련,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안내서, KICS 활용 문자 전송
  -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매뉴얼 개발 및 1366 상담매뉴얼 개편 (여가부)
- 성매매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 ‘성매매피해자 표준식별모델’의 현장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신설 및 담당경찰관 교육 실시로 성매매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청)
    - \*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적극 식별하기 위한 표준 모델
  -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에 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상담원 배치 (비상근 통역사), 외국인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여가부)
    - \* 성매매업소로부터 구조, 출국 및 국내체류 등 상담·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2차 피해 방지
- 다누리콜센터-이주여성상담소-경찰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이주여성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 지원 강화 (경찰청, 여가부)
  - 이주여성 피해 사건 전담 수사관을 여경으로 지정·확대하고 AI음성 인식 시스템 활용하여 풍부한 피해자 진술 청취 (경찰청)

## ○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확대 (법무부, 대검찰청, 국방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대상) 검사, 군 수사기관(군경찰·군검찰), 경찰관, 사법경찰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해양수사경찰관, 근로감독관 등
- ▶(방법)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및 사이버교육 신설, 신입경찰교육과정에 교과목 편성, 현장방문교육 등

## ③ 재범방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성범죄자 관리 체계 강화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법무부)

△ 공개·고지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실제 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상시 점검

△ 주거부정·제출의무 불이행 등 소재불명자 집중 점검 및 경찰을 통한 진위확인 조치

△ 소재불명자, 미등록자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현행화 실시

- 신상등록시스템 연계 기능 강화 위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편입 준비 (법무부) \* 차세대 KICS 구축 준비 T/F 가동(2023년 구축 예정)
- 경찰-법무부-지자체 간 정보공유 등 협업체제 강화를 위해 '성범죄전력자 재범위험성 평가 다기관 협의체'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경찰청)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한 점검·확인 권한 등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시·도, 시·군·구 점검체계 안착을 위한 업무 지원 (여가부)
  - \* 취업제한 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자 자료 제출 불응 시 과태료 신설 검토

### ○ 성구매 재범방지 교육 내실화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 인지 행동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가해아동·청소년 부모 교육 실시 (여가부)

### 1 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폭력 근절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대학 내 폭력 예방교육 적극 실시 및 대학 구성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대학 자체평가 등에 반영 추진 (교육부)
  -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추진 및 학교 양성평등 교육 운영 가이드 개발 (교육부)
  - 소 학교 활용가능한 양성평등교육자료 제공(아카이빙 형태),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급 (교육부, 여가부)
    - \* 콘텐츠 내 수화 해설, 외국어 자막 삽입 등 장애인 외국인 대상 콘텐츠 확대
  - 시·도교육청 별 위(Wee)클래스 설치 확대\*, 피해학생 상담·치유프로그램 지원 강화,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배포 (교육부)
    - \* ('20년) 7,631개교 → ('21년) 8,059개교 → ('22년) 8,200개교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 조직 및 사안처리단 운영 강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전담기구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교육부)
    - \* 사안처리 직무연수 운영, 교육부·교육청간 협의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등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 시·도교육청별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여부 등 현황 모니터링 (교육부)
  - 연구과제 선정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됨을 협약서에 명시 (교육부)
-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시스템 마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권리보장법」 제정('21.9)에 따른 강화된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및 방지책 추진 (문체부)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9월)에 따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설치 및 신고상담센터 역할 강화\*
  - \* (증전) 상담, 피해지원 → (강화) 상담, 신고접수, 조사협조(조사: 문체부), 피해지원
- 문화예술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자치규약인 행동강령 개발 지원 및 문화분야 전문강사 활용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문체부)
-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등 명시한 표준계약서 확대 (문체부)
  -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분쟁 해결 절차 명시
- 체육 분야 여성폭력 근절 시스템 마련
  -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스포츠 인권 강화 (문체부)
    - \* 지역사무소 확대(3 → 5개소),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조사역량 교육 확대 등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추진 (여가부)

## ② 민간·공공부문 등 조직 내 여성폭력 근절

- 민간부문의 성희롱 피해자 구제절차 및 예방교육 강화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고용부)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관련 조치의무 이행여부 지속 점검 및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시행('22.5월)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사업장의 경우 차기년도 고용평등점검 사업장에 선정하여 2차 피해 발생 여부 점검 등 근로감독 강화 (고용부)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양성과정' 개설 (고용부)
  - 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 사회초년생을 위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화교육' 실시 확대 (여가부)
-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 공무원 성범죄 관련 소청 결정문 공개 확대, 성비위 사건 소청심사 시 주심 또는 부심 중 반드시 1명은 여성 위원 배정 (인사처)

- 국가인재개발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기본 교육과정 내 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과목 편성·운영 (인사처, 행안부)
- 성희롱 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교육운영기관 발굴·운영 (여가부)
- 기관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원의 인식, 제도 운영 등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권고 (여가부)
  - \*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실시, 권고 후 기관별 조치계획 제출 등 관리 강화

○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수사 역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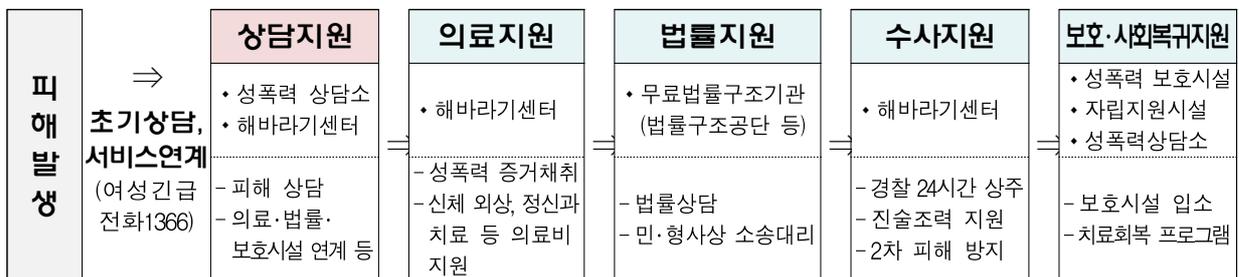
-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 추진 (국방부)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보장\*,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 민간 이관(군사법원법 시행, '22.7.1.)에 따른 민간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국방부)
  - \* 성고충전문상담관 : '21년 47명 → '22년 103명

- 군 내 주기적 성폭력 실태조사(연 1회)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국방부)

### ③ 여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전문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

- 피해자 지원 시설 간 연계를 통해 성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상담·의료·법률·수사·동행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종합형 서비스 지원 (여가부)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설평가 추진 및 현장점검 실시 (여가부)

-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운영, 피해전담경찰관 지정 (여가부, 경찰청)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디지털 성폭력 치유·회복프로그램 보급 확산 (여가부)
- \* 피해영상물 자동수집 기능(크롤링) 연계 사이트 확대, 통계관리 기능 추가 등

#### ○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사업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을 통합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여가부)
- \* 전국 시·도별(16개소) 지원센터와 장애인 특성화지원센터(1개소) 설치·운영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주거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지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자립역량 강화 (여가부, 국토부)

### 4 여성폭력 예방·홍보 내실화

#### ○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예방교육 취약기관 대상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실시, 기관장 폭력예방 교육 참여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여가부)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폭력예방교육, 사례중심 교육자료, 온라인 플랫폼 활용 교육자료 등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여가부)

####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콘텐츠 확산 및 범정부 협업 홍보,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 (여가부)
- 여성폭력추방주간 계기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여성폭력 추방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여가부)

## 1 여성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 정비

### ○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개선

-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 비동의간음죄 도입 등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법무부)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 및 배포,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및 상담체계 내실화 등 기능 강화 (복지부)

\* 의료기관 내 폭행 관련 의료법 벌칙사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제정 등 관련 법 변경사항 반영

###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이행 강화, 가정폭력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의 범위를 '가정구성원'까지 확대 추진 (법무부)

- 가정폭력 사건 수사 시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여가부, 경찰청)

\* 훈령 또는 내부 지침 시달 등을 통해 조서 작성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재차 묻지 않고 가해자 입건, 기소 등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개선

### ○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근거 지속 검토 및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 추진 (법무부, 여가부)

\* '아바타 법익'의 법적 보호법익 필요성 검토(법무부)

\* 온라인 그루밍 범죄 발생 인지 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무 신설 등 검토(여가부)

### ○ 온라인 그루밍 및 메타버스 상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동향 및 추세 등 모니터링 (여가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연구(매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22년 예비연구, '23년 본조사)

○ 성매매 관련 수요차단으로 정책 전환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직업소개사업소 등에 대한 단속 및 자치단체 협력 강화 (고용부)
- 성매매 플랫폼 변화에 맞춘 단속·수사 활동, 지방청 풍속수사팀 확대, 자금원 차단을 통한 성매매 재영업 억제 (경찰청)
- 지자체 중심으로 성매매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 집결지 등 점검체계 구축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점검 실시 (여성가족부)
-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으로 범죄 수익 박탈 (법무부)

**②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 연계·협력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역량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피해자 접근성 제고 (여가부)
  -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설치(1개소),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1개소)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역량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대상 직무역량강화교육,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등 실시 (여가부)

○ 공공부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활성화

- 기관장 사건 전담신고 창구 운영, 피해 유형별(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맞춤형 상담 제공 및 의료·법률 등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여가부)

### ③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기반 마련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 '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로 기본계획 과제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체계 구축 (여가부)

#### ○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운영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요정책 이행점검 등 여성폭력방지정책 이행력 제고 (여가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방지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지자체) \* 17개 시·도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21년)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수행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전담기구 운영 (여가부)

#### ○ 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

- 여성폭력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참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등 연계강화 (여가부, 시·도경찰청, 지자체)
- 여성폭력 피해 유형별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및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협업 활동 (지자체)

#### ○ 여성폭력 통계 구축 및 성과지표 개발

-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여성폭력 발생·피해·피해자 지원 관련 통계를 망라한 여성폭력 통계구축 추진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관련 하여 수집·산출·공표 가능한 여성폭력 통계 범위·목록 분류
- 여성폭력 통계구축 관련 가·피해자간 관계 세분화, 살인범죄에 대한 선행행위 유형별 통계 생산 등 범죄통계 관련 분류체계 개선 (경찰청)

**붙임 1**

**2022년 시행계획 신규 및 확대 추진 사항**

과제번호	과 제 명	주요내용	부처
1-1-1-②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	▶ 위장수사관 40명 선발 및 전문교육 실시	경찰청
1-2-2-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고시('22.1월)	방통위
1-2-3-①	약물이용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 현장·전문수사기관용 탐지기(마약 7종) 및 일반국민용 키트 개발(마약 3종)	경찰청
1-3-2-①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강화	▶ 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한 해외 성매매 경험 등 실태조사	여가부
1-4-1-①	성매매·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 강화	▶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 단속	경찰청
1-4-2-①	여성 1인가구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 무선통신기능을 이용한 IP카메라 탐지기술 개발, 현장활용	경찰청
1-4-3-①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 여성발달장애인의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집중 실시 *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67.8%)	복지부
1-4-3-③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확대(1개소) 및 추가인력 확충(5명)	여가부
2-1-1-①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 피해자보호조치 결정구조 개선,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 추진	경찰청
2-1-1-②	가정폭력 재범 방지 조치 강화	▶ 가정폭력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 재범방지를 위한 3중보고·점검체계 마련	경찰청
2-1-2-①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 스톱킹 대응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법원칙 잠정조치 결정 경찰 통지 의무화 추진	경찰청
2-2-1-①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성범죄 피해자 상담 시 챗봇 도입	경찰청
2-2-1-④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조력자 보호강화	▶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외에 조력자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고용부
2-3-1-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성범죄전력자 재범위험성 평가 다기관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추진	여가부
3-1-1-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대학구성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대학 자체평가에 반영 추진	교육부
3-1-1-②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	▶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추진 및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가이드 개발	교육부

과제번호	과 제 명	주요내용	부처
3-1-3-②	문화·예술계 여성폭력 예방조치 내실화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9월)에 따른 예방교육 확대 추진	문체부
3-1-4-①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 지역사무소 확대 개설(3 → 5개소), 인권감시관 활동 확대(월 1회 → 2회)	문체부
3-2-1-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이행력 제고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 의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시행('22.5월)	고용부
3-2-2-①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 성비위 사건 소청 심사 시 주심 또는 부심 중 반드시 1명은 여성위원 배정	인사처
3-2-2-①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조성	▶ 국가인재개발원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예방교육 교과목 편성 실시	인사처
3-2-3-①	군 성폭력 예방 강화	▶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연 1회)	국방부
3-2-3-②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운용(47명 → 103명)	국방부
3-3-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해바라기 센터 신규 설치(각 1개소)	여가부
3-3-1-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설평가 추진	여가부
3-3-1-③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스톱폭력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여가부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 여성폭력 발생·피해·피해자 지원 관련 통계를 망라한 '여성폭력통계' 구축	관계기관

## 붙임 2

## 2022년 시행계획 종료과제

과제번호	과 제 명	주요내용	부처
1-2-2-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 AI 기반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다채널 모티터링 기술개발 및 민간이전 ▶ 이미지 유해성(음란성) 검출을 위한 이미지 학습 및 분류엔진 생성기술 및 경량화 유해미디어(음란성) 분석기술 민간이전	과기부
4-1-5-②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규정	여가부

□ 주요내용

○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공중화장실·지하철·공중위생영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카메라 수시 점검
- CCTV 안전망 구축,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 추진

○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

-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

-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해바라기센터,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으로 피해 지원

\*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긴급구조, 상담 및 의료·법률, 치료·회복, 자립·자활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 서비스 지원('21년 신규 전국 17개)

- 성폭력·가정폭력 치료회복 프로그램,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여성 직업전환 생계비 등으로 치유·자립 지원
-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

-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별 시책 심의·조정
-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 여성장애인 폭력실태 조사(대구), 성매매 실태조사 연구(광주)

○ 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

- 지역별 여성폭력 취약 지역 분석 및 환경 개선 조치 시행

**[환경개선 조치 사례]**

(서울)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위 운영,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환경 조성 등  
 (대구) 여성안전캠퍼스 환경 조성, 여성1인 가구 안심환경 조성사업  
 (인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등  
 (강원) 여성폭력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단위 : 백만원)

시도	예산	시행계획 주요내용
서울	34,622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디지털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온라인 그루밍 예방, 아이두 캠페인 등</li> <li>○ 온·오프라인 성매매 감시, 1인가구 안심택배함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li> <li>○ 폭력 피해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강화 등</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여성안심마을 운영,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환경 조성</li> </ul>
부산	15,670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감시단 운영, 특화상담소, 피해아동·청소년 1:1 동행서비스 지원</li> <li>○ 공공기관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담기구 운영, 온라인 고충상담창구 개설</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li> <li>○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마을 조성, 1인 가구 안심홈 세트 지원, 심야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추진 등</li> </ul>
대구	9,794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 점검, 여성1인 가구 밀집지역 안전 환경 조성 등 여성폭력발생 예방</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예방 기본계획 수립(직장 내, 공직유관단체), 폭력예방교육 방식 및 콘텐츠 다양화</li> <l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li> <li>* (신규)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개소,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개소</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li>○ 여성장애인 대상 성추행, 성폭력 피해 현황 등 여성장애인 폭력 실태조사</li> </ul>

시도	예산	시행계획 주요내용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안심캠퍼스 환경조성, 여성1인 가구 안심환경 조성사업 등 여성폭력 취약 지역 분석 및 환경개선</li> </ul>
인천	11,615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 점검, 디지털 성범죄 예방·지원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치 강화 *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운영</li> </ul> <p>[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홈,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 사업 운영</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 여성안심드림 멘토링 사업,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사업(신규)</li> <li>* (신규) 가정폭력상담소 1 개소 지원</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택배서비스 운영,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스마트 안심길 청사초롱 구축사업, 안심거울길 조성,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자율방범대 운영 등</li> </ul>
광주	13,738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치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카메라 수시 점검</li> </ul> <p>[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기본계획 관련 시행계획 수립, 여성 심야 귀가 안전동행단 확대 운영</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li> <li>○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및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신규 설치·운영</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li>○ 여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성매매, 폭력피해이주여성) 실태조사</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여성안전 취약공간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반영한 여성이 안전한 광주지역 조성, 여성 취약지 CCTV, 안심벨 설치,</li> </ul>
대전	3,794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및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li> <li>○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감사단 운영 및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대책 추진</li> </ul>

시도	예산	시행계획 주요내용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운영</li> <li>○ 젠더폭력 예방 청년 활동가 양성,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 여성 지원</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여성가구를 위한 안전장치 보급,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온라인 감시단 운영, 범죄예방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 추진</li> </ul>
울산	3,224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점검 강화, 여성 1인 등 취약계층 방범 물품 지원사업,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연계</li> <li>○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및 창구 운영</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길 안전벨,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운영,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취약지역 CCTV 설치 등 추진</li> </ul>
세종	3,593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청사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수시 점검 및 불법 촬영 탐지기기 대여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및 체육인 대상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실시</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 CCTV구축, 가로등 설치, 자율방범대, 세종엔 등 운영</li> </ul>
경기	16,887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별 피해자 지원대응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li> <li>○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li> </ul> <p>[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피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망 구축</li> </ul>

시도	예산	시행계획 주요내용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성평등옴브즈만 운영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기능 강화</li> <l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li> <li>○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li> </ul>
강원	14,146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 강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비상벨·안심스크린 등 설치</li> </ul> <p>[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담 상담인력 지정</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li> <li>○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율방범대 운영 등</li> </ul>
충북	7,795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치 강화</li> </ul> <p>[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기반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쉼터, 건가다가센터 운영)</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li> <li>○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대응기반 마련</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및 모니터링, 여성 생활안심 디지털 환경조성 등</li> </ul>
충남	2,862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여성폭력, 약물이용 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li> </ul> <p>[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1인가구, 장애인, 이주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재발 위기가정 집중관리를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사업(200명)</li> <l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li> </ul>

시도	예산	시행계획 주요내용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및 CCTV 유지·관리 등</li> </ul>
전북	4,451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예방조례 제정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li> <li>○ 디지털 지역특화상담소(프로그램) 운영으로 디지털 성범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기능 확대</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안심지킴이집 안심마크 제작 및 로고젝터, CCTV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방법시설 확충, 여성·아동 안전지킴이집, 여성 안전 피난처 운영 등</li> </ul>
전남	3,833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버스터미널,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등에 안심스티커 부착, 불법 촬영 카메라 감지기 보급, 수시점검 통한 성범죄 예방 조치 강화</li> <li>○ 사이버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전문교육을 통한 사이버아웃리치 활동가 양성</li> </ul> <p>[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대상 학대, 성범죄 피해 실태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장애인 인권침해 전수조사 등 보호지원 강화</li> <li>○ 이주여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생활법률 및 국제법률 교육, 인권감수성 교육 등</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li> </ul> <p>[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ul> <p>[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용 CCTV, 안심동행 앱,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등</li> </ul>
경북	6,250	<p>[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여성폭력방지 관련 조례 개정</li> </ul> <p>[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 지원 내실화 및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li> </ul>

시도	예산	시행계획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야간 및 주말 발생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 연계(1366 ⇄ 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li> <li>[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li>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경북 여성폭력(성폭, 가폭, 성매매, 성희롱) 실태 및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을 분석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실시</li> <li>[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li> <li>○ 안심귀가거리조성,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등</li> </ul>
경남	9,3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li>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한 특화상담소 운영</li> <li>○ 아동·성소년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성매매 범죄 피해 대응 강화</li> <li>[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li> <li>○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li> <li>○ 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li> <li>[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li>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li> <li>[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li> <li>○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등</li> </ul>
제주	16,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li> <li>○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 제주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신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li> <li>[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li> <li>○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통역인력 지원 및 상담소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내 폭력전담 상담 운영,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피해자 긴급조치, 2차 피해 예방)</li> <li>[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li> <li>○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 강화</li> <li>[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li> <li>○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민·관·경 협력 가정폭력 재발방지 모니터링</li> <li>[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li> <li>○ CCTV 안전망 구축,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 추진, 여성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심야 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li> </ul>

**붙임 4**

**과제별 소관부처**

과 제	소관부처(지자체)
<b>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b>	
<b>1-1.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b>	
<b>1-1-1.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강화</b>	
① 불법촬영 현장 대응역량 및 수사 전문성 제고	경찰청
②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	대검찰청 경찰청
<b>1-1-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제공</b>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법무부
④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검찰청 경찰청
<b>1-1-3.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치 강화</b>	
①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	경찰청
② 다중이용시설 수시 점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b>1-2. 신종여성폭력 대응 강화</b>	
<b>1-2-1. 불법영상물 촬영에 대한 규제 강화</b>	
①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b>1-2-2. 불법영상물 유포 방지 관리체계 구축</b>	
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③ 영상물 재유포 방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b>1-2-3. 악물이용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b>	
① 악물이용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과 제	소관부처(지자체)
1-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1-3-1.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외 공조	
①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법무부 경찰청
1-3-2.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해외 공조	
①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외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1-4. 대상별 맞춤형 대응조치 강화	
1-4-1. 아동 성매매 근절	
① 성매매 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②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여가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4-2. 1인 가구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①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대상 성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여성 안전 관점에서 선제적 범죄예방 및 경찰 대응체계 개선	경찰청
1-4-3. 장애인 대상 여성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①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보건복지부
② 장애인 거주시설 폭력예방 강화	보건복지부
③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④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1-4-4.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조치 강화	
① 사업장 대상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점검	고용노동부, 법무부
② 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③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 확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④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폭력피해 점검	법무부 경찰청

과 제	소관부처(지자체)
<b>1-4-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강화</b>	
①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정보접근성 확대	여성가족부 경찰청
② 이주여성 폭력피해 신고 활성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③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④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고용노동부
⑤ 폭력피해 이주여성 합법적 체류 허용	법무부
<b>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b>	
<b>2-1. 초기 현장 대응력 강화</b>	
<b>2-1-1. 가정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 강화</b>	
①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경찰청
② 가정폭력 재범 방지 조치 강화	경찰청
<b>2-1-2.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의 현장 대응 강화</b>	
①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
<b>2-2. 형사사법체계의 2차 피해 방지</b>	
<b>2-2-1.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b>	
①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경찰청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활성화	법무부
③ 2차 피해 방지 및 불법촬영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청
④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조력자 보호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b>2-2-2.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b>	
① 형사절차 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과 제	소관부처(지자체)
②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여성가족부
<b>2-2-3. 성매매 피해자 2차 피해 방지</b>	
① 형사절차 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② 수사 과정에서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 법무부
<b>2-2-4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2차 피해 방지</b>	
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b>2-2-5.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b>	
①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신설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b>2-3. 재범방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b>	
<b>2-3-1. 성범죄자 관리 체계 강화</b>	
① 재범억제를 위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법무부 경찰청
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제도 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③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b>2-3-2. 성구매 재범방지 교육 내실화</b>	
①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화	법무부
<b>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b>	
<b>3-1. 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폭력 근절</b>	
<b>3-1-1.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b>	
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②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 제	소관부처(지자체)
③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교육부
④ 초·중·고등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교육부
⑤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교육부
<b>3-1-2.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징계 강화 및 재발 방지</b>	
① 교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	교육부
② 재발방지 조치 강화	교육부
<b>3-1-3.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시스템 마련</b>	
①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② 문화·예술계 여성폭력 예방조치 내실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③ 문화·예술분야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④ 문화·예술계 전담 신고센터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b>3-1-4. 체육 분야 여성폭력 근절 시스템 마련</b>	
①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운영	문화체육관광부
②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 자격제한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③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여성가족부
<b>3-2. 민간·공공부문 등 조직 내 여성폭력 근절</b>	
<b>3-2-1. 민간부문의 성희롱 피해자 구제절차 및 예방교육 강화</b>	
①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여성가족부
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이행력 제고	고용노동부
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절차 내실화	고용노동부
④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등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b>3-2-2.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b>	
①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②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과 제	소관부처(지자체)
③ 기관의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b>3-2-3. 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b>	
① 군 성폭력 예방 강화	국방부
②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국방부
③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강화	국방부
④ 징계 절차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국방부
<b>3-3. 여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전문화</b>	
<b>3-3-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b>	
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③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여성가족부 경찰청
④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⑤ 성매매 관련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여성가족부
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b>3-3-2.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b>	
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②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및 피해 여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b>3-4. 여성폭력 예방·홍보 내실화</b>	
<b>3-4-1.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b>	
①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여성가족부
②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여성가족부
③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전부처
④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⑤ 지역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여성가족부
⑥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⑦ ‘성 인권 교육’ 전국 확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키우는 문화 확산	여성가족부
⑧ 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여성가족부
<b>3-4-2.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b>	
① 여성폭력 예방·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②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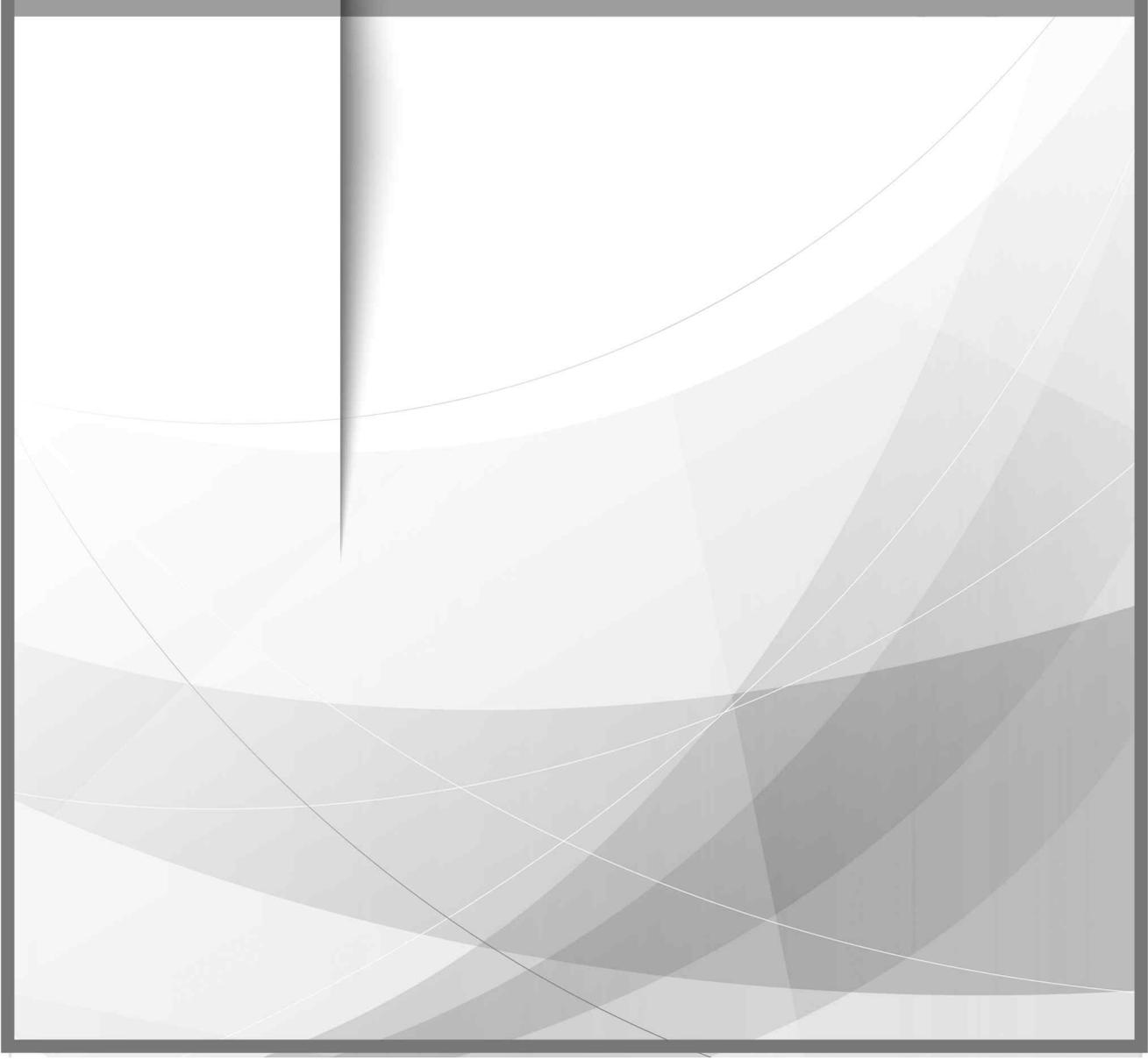
과 제	소관부처(지자체)
<b>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b>	
<b>4-1. 여성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 정비</b>	
<b>4-1-1.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개선</b>	
①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	법무부
②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 검토	법무부
③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개선 방안 마련	법무부
④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조항 통합 검토	법무부 여성가족부
⑤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b>4-1-2.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b>	
①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법무부
② 가정폭력 가해자 수사 시 엄정한 조치	법무부 대검찰청
③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 보호 강화	법무부
④ 임시조치 집행력 제고를 통한 피해자 안전 확보	법무부
⑤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및 기간 확대	법무부
⑥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 분석 및 검토	법무부 여성가족부
<b>4-1-3.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기반 마련</b>	
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무부
②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사각지대 개선 방안 검토	법무부
<b>4-1-4.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b>	
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공백 보완	법무부
② 신종 온라인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검토	법무부
③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여성가족부
<b>4-1-5. 아동·청소년 성보호 규정 개정 추진</b>	
①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여성가족부
②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및 보호처분 적용조항을 삭제하는 등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여성가족부
③ 19세 이상인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제8조의2)에 대해, 형법상 의제강간죄 개정안과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방향 검토	여성가족부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검토	여성가족부
⑤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성인까지 유예 추진	법무부

과 제	소관부처(지자체)
<b>4-1-6. 성매매 수요차단으로의 정책 전환</b>	
① 성매매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지속적 단속 추진	고용노동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② 성구매자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 환경 조성	대검찰청
<b>4-2. 여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 연계·협력 강화</b>	
<b>4-2-1.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역량 강화</b>	
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성가족부
<b>4-2-2.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역량 강화</b>	
①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여성가족부
<b>4-2-3. 여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의 게이트웨이 기능 확대</b>	
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b>4-3.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기반 마련</b>	
<b>4-3-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b>	
①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기본법 시행	여성가족부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여성가족부
<b>4-3-2.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체계 구축</b>	
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여성가족부
②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③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전담기구 마련	여성가족부
<b>4-3-3. 지역 여성폭력 안심 생태계 구축</b>	
① 지역별 여성폭력 취약 지역 분석 및 환경 개선 조치 시행	지방자치단체
② 여성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체* 운영	지방자치단체
③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b>4-3-4. 여성폭력 통계 구축 및 성과지표 개발</b>	
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여성가족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통계청
②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
③ 여성폭력방지 정책 관련 성과지표 개발	여성가족부



# II

## 2022년 시행계획





# 차 례 CONTENTS



과 제		소관	페이지
1-1-1-①	불법촬영 현장 대응역량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경찰청	55
1-1-1-②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엄정단속	경찰청 대검	57
			59
1-1-2-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63
1-1-2-②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여가부 과기부 경찰청 방심위	66
			69
			71
1-1-2-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법무부	74
1-1-2-④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검 경찰청	77
			80
1-1-3-①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	경찰청	81
1-1-3-②	다중이용시설 수시점검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82
			85
			86
1-2-1-①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	과기부	88
1-2-1-②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90
1-2-2-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91
1-2-2-②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	방통위	92
1-2-2-③	영상물 재유포 방지	방심위	95
1-2-3-①	약물이용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경찰청 여가부	97

과 제		소관	페이지
1-3-1-①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경찰청	98
			100
1-3-2-①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외교부 여가부 경찰청	101
			103
			104
1-4-1-①	성매매·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 강화	방통위 경찰청	105
			108
1-4-1-②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110
			112
			114
1-4-2-①	여성 1인가구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경찰청	115
1-4-3-①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복지부	117
1-4-3-②	장애인거주시설 폭력예방 강화	복지부	119
1-4-3-③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여가부	121
1-4-3-④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여가부	121
1-4-4-①	사업장 대상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점검	고용부 법무부	124
			126
1-4-4-②	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127
			129
			132
			135
1-4-4-③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 확대	여가부	137
1-4-4-④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여성 폭력피해 점검	법무부	139
1-4-5-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정보 접근성 확대	여가부	140
1-4-5-②	이주여성 폭력피해 신고 활성화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법무부	142
			144
			146
			148

과 제		소관	페이지
1-4-5-③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기반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여가부	150
1-4-5-④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고용부	153
1-4-5-⑤	폭력피해 이주여성 합법적 체류 허용	법무부	155
2-1-1-①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경찰청	157
2-1-1-②	가정폭력 재범 방지 조치 강화	경찰청	159
2-1-2-①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	161
2-2-1-①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대검	164
		경찰청	168
		법무부	170
2-2-1-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활성화	법무부	172
2-2-1-③	2차 피해 방지 및 불법촬영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청	176
2-2-1-④	신고처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및 조력자 보호강화	여가부	177
		고용부	179
2-2-2-①	형사절차 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181
2-2-2-②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여가부	183
2-2-3-①	형사절차 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청	185
2-2-3-②	수사 과정에서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가부	187
		법무부	189
2-2-4-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가부	191
		경찰청	193
2-2-5-①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법무부 대검 국방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해경	195
			197
			199
			202
			204
			207
			209
210			

과 제		소관	페이지
2-3-1-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법무부 경찰청	212
			215
2-3-1-②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리 강화	여가부	218
2-3-1-③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법무부 여가부	221
			223
2-3-2-①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	법무부	226
3-1-1-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228
3-1-1-②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	교육부 여가부	231
			235
3-1-1-③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교육부	237
3-1-1-④	초·중·고등학교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교육부	240
3-1-1-⑤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교육부	244
3-1-2-②	재발방지 조치 강화	교육부	246
3-1-3-②	문화·예술계 여성폭력 예방조치 내실화	문체부	249
3-1-3-③	문화·예술분야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문체부	252
3-1-3-④	문화·예술계 전담 상담센터 활성화	문체부	254
3-1-4-①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문체부	257
3-1-4-③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실시	여가부	260
3-2-1-①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여가부	262
3-2-1-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이행력 제고	고용부	264
3-2-1-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구제절차 내실화	고용부	267
3-2-1-④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등 교육 지원	고용부 여가부	271
			273
3-2-2-①	공공부문 사건 대응력 강화	여가부 인사처	275
			277
3-2-2-②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행안부 인사처 여가부	279
			281
			283

과 제		소관	페이지
3-2-2-③	기관의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여가부	286
3-2-3-①	군 성폭력 예방 강화	국방부	288
3-2-3-②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국방부	291
3-2-3-③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강화	국방부	294
3-2-3-④	징계 절차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국방부	296
3-3-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298
3-3-1-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여가부	302
3-3-1-③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여가부	306
		경찰청	308
3-3-1-④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310
3-3-1-⑤	성매매 관련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여가부	312
3-3-1-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지원 강화	여가부	314
3-3-2-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여가부	316
		국토부	319
3-3-2-②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및 피해 여성 지원 확대	여가부	321
3-4-1-①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여가부	323
3-4-1-②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여가부	324
3-4-1-③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여가부	326
3-4-1-④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여가부	328
3-4-1-⑤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여가부	330
3-4-1-⑥	‘성 인권 교육’ 전국 확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키우는 문화 확산	여가부	333
3-4-1-⑦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여가부	335
3-4-1-⑦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 강화	여가부	338
3-4-2-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여가부	340
3-4-2-②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여가부	342

과 제		소관	페이지
4-1-1-①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	법무부	344
4-1-1-②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 검토	법무부	345
4-1-1-③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개선 방안 마련	법무부 여가부	346
			347
4-1-1-④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조항 통합 검토	법무부 여가부	349
			350
4-1-1-⑤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복지부	351
4-1-2-①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법무부	354
4-1-2-②	가정폭력 가해자 수사 시 엄정한 조치	대검	355
4-1-2-③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 보호 강화	법무부	357
4-1-2-④	임시조치 집행력 제고를 통한 피해자 안전 확보	법무부	359
4-1-2-⑤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및 기간 확대	법무부	360
4-1-2-⑥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 분석 및 검토	법무부 여가부	361
			362
4-1-3-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무부	363
4-1-3-②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사각지대 개선 방안 검토	법무부	365
4-1-4-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공백 보완	법무부	367
4-1-4-②	신종 온라인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검토	법무부	368
4-1-4-③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여가부	369
4-1-5-①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여가부	371
4-1-5-③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와 형법상 의제강간죄 개정안과의 종합적 개정 방향 검토	여가부	373
4-1-5-⑤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성인까지 유예 추진	법무부	375
4-1-6-①	성매매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지속적 단속 추진	고용부 경찰청	377
			379

과 제		소관	페이지
4-1-6-②	성구매자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 환경 조성	대검	381
4-2-1-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가부	383
4-2-2-①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여가부	386
4-2-3-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389
4-3-1-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여가부	392
4-3-2-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여가부	394
4-3-2-③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전담기구 마련	여가부	398
4-3-3-③	여성폭력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여가부	401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여가부 대검 법무부 경찰청 통계청	403
			406
			408
			409
			410
4-3-4-②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여가부	412
4-3-4-③	여성폭력방지 정책 관련 성과지표 개발	여가부	414



## 1-1-1-① 불법촬영 현장 대응역량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수사 분야 시행계획은 1-1-1-2에 있으므로 과제 제목 변경  
(불법촬영 현장 대응역량 및 수사 전문성 제고 -> 불법촬영 현장 대응역량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 과제개요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다양화 및 탐지 전문교육 등을 통해 범죄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집중

### □ 그간의 추진실적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다양화 및 현장경찰관 탐지 향상 교육 실시
  -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촬영기기를 더욱 정밀하게 탐지하기 위한 탐지장비 및 현장 매뉴얼 배부
  - 개정 법률 및 불법카메라 탐지절차·기술 등을 담은 사이버 교육콘텐츠 제작
- 시기별·대상별 집중 예방·대응기간 운영
  - 신규 보급된 적외선 탐지장비를 활용, 시·군·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선제적 점검 실시
  - 구멍, 낙서 등 위험요소 발견 시 관리자에게 환경개선 권고 및 지속 가능한 불법촬영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

### □ 2022년도 시행계획

-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
  - 신학기·하계기간 등 시기별·대상별 특성에 맞춰 신고 활성화·범죄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 교육, 홍보 및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
  - (신학기) △불법촬영 등 성폭력 예방 홍보 안내문 제작·배부 △SPO 특별예방 교육 실시 △학교 주변 취약요소 점검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추진
  - (하계기간) △여름경찰관서 내 「성범죄전담팀」 운영 △다중이용장소 성범죄 발생요소 점검·개선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등 예방환경 조성

○ 불법촬영 범죄 현장대응 역량 강화

- 지능화·다양화되는 불법카메라에 대한 탐지율 제고를 위해 탐지기술 개발·도입
- 범죄통계·치안여건 분석 및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활용을 통해 지역별 범죄예방 강화방안 수립·시행
- 불법카메라 점검 및 신고대응·증거물 보안 등 세부적인 현장대응지침 마련

○ 불법촬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증거물 보안 강화 및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고도화·다양화 및 지원기관 연계 활성화
-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유관기관 및 여성단체와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불법촬영 신규 탐지기기 보급	85대	85대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박동아 경위	전화번호	02)3150-0938
------	----------------	-----	--------	------	--------------

1-1-1-②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엄정단속

□ 과제개요

- 주요 유통 플랫폼에 대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책임 수사관서 지정,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집중단속 실시
- 영리목적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촬영·제작·유통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영상의 증거수집 및 삭제·차단 우선 조치

□ 그간 추진실적

- '20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수사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총력 단속체제 가동
  - ※ '20. 3. 25. ~ 12. 31.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하여 총 2,807건·3,575명 (구속 245명) 검거, 피해자 1,094명 대상 4,387회 보호·지원 조치
- '21년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수사본부」 운영 후에도 사안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능동적 엄정단속 실시
  - \*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단속('20.12.1.~'21.4.30) : 총 85건 94명 검거(구속10)
  - ↳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 사범 집중단속('21.3.2.~10.31.) : 총 1,419건 1,597명 검거(구속 97명)

<수기통계로 변동가능성 있음 : '21. 10월말 기준>

구분	검거(건)		검거 인원(구속)			
	총계	총계	개설·운영	촬영·제작	유통·판매	이용자
	1,447	1,625 (97)	95 (26)	176 (57)	647 (13)	707 (1)
성착취물	672	810 (56)	54 (16)	80 (34)	94 (5)	582 (1)
불법촬영물	432	450 (27)	5 (3)	67 (20)	253 (4)	125
불법합성물	79	80 (4)	9	25 (3)	46 (1)	
불법 성영상물	264	285 (10)	27 (7)	4	254 (3)	-

- 단속 뿐 아니라 재범의지를 차단하는 적극적 범죄수익 보존조치(기소전 몰수·추징보전신청, 현금압수) 및 국제청 통보 등 전방위적 활동 전개
  - ※ 범죄수익보존: 총 12억5천여만원(몰수·추징보전 약11억4,680만원, 압수 1억800만원 등)

□ 2022년도 시행계획

- (상시단속체계 유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공급·수요 요인 원천차단, 단속 종료 후에도 시·도청 전담팀 중심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 책임수사

<단속 기간> '22. 3월 ~ 10월 (8개월 간)

<중점 단속 대상>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중점 단속

- ① 성착취물 불법유통망(보안메신저·웹하드·해외불법사이트 등), 유통(성착취물·불법촬영물·불법합성물·불법성영상물)사범
- ② n번방' 성착취물 보유자 및 불법유포사이트 운영자 등 지속 추적 수사

- (위장수사 활성화) 사이버·여청수사 기능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수사활동 전개

<사이버·여청수사 기능 간 위장수사 협업체계>

- ① '사이버'는 아동성착취물 유포행위, '여청수사'는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전담 수사
- ② 사이버수사국 주관, 위장수사관 40명 선발 및 전문교육 실시

- (범죄수익 보존)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적극 활용, 범죄수익 추적 및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및 국세청 통보로 재범의지 차단

※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 내역 등 확보 시, 수사 중이더라도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도록 신속하게 국세청에 통보

○ 성과지표

<사이버범죄수사과 킷스통계>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사이버성폭력 단속 검거율	84.6%	84.7%	KICS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정병선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요구
  - 텔레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단체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 성폭력 등 범행을 자행하는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유통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

## □ 그간의 추진실적

- '18. 10. 「불법 촬영·유포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개정 및 시행
  - 피해자 몰래 촬영·유포한 사범뿐 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일지라도, 보복, 협박 등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등
- '19. 4. ~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불법 촬영·유포 사건 공동연구
  - '18.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MOU 체결 후, 여성 폭력 범죄 관련 검찰 처리 사건 공동연구 진행, 불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의 처분 실태 등 분석
- '19. 11. 불법 촬영·촬영 유포 사건 엄정 대응 지시
  - 「불법 촬영·유포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
- '20. 3.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엄정 대응 지시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착취 불법영상물 유포 등 사건 관련 영리 목적 유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 사범 원칙적 구속 등 카메라 촬영·유포 사범 사건처리기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사건처리기준 등 철저히 준수, 엄정대응 지시

- '20. 3. 전국 여성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일선 수사상황 점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 수익 환수 방안 등 논의
- '20. 3.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국적 수사지휘·지원 체계 구축
  - 전국 18개 및 수도권 차치지청에 전담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설치, 기타 청은 전담검사 지정
- '20. 3. 성착취 영상물 관련 수사 참고자료 제공 등 일선 지원
  - 의율 죄명, 적용법조, 법률적 쟁점 등 법리검토 자료(형사부), 신종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등 의율 검토, 형법상 범죄 단체 및 범죄집단 법리 검토 자료(반부패강력부) 등 일선 지원
- '20. 4.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엄정 대응 지시
  - 불법촬영·유포 사범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범죄에 집중 대응,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지시
- '20.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토론회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 개최
- '20. 10~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T/F 운영
  -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제·개정 내역 반영 및 현행 성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 중 신설·개정할 내역 논의
- '21. 1. 전국 여성·아동범죄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에 관한 논의
- '21.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알림 및 철저 준수 지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처리기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 개정·시행 및 개정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지시
- '21.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 '21. 7.~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 및 운영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를 구성, 관련 수사매뉴얼 제·개정 및 관련 지침 개정 작업 진행
- '21. 8.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우수 피해자보호 사례 전파 및 피해자보호조치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우수 사례 전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검찰 핫라인 구축 및 적극 활용 지시

□ 2022년도 시행계획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배포 및 적극 활용(연중)
  - 신종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하는 등 기존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제작·배포하여 관련 수사에 적극 활용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연중)
  - 수사과정에서 성착취물 삭제 관련 유관기관 연계하여 삭제 지원, 그 외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철저
-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행 동기 차단(연중)
  - 비트코인 등 인터넷상 통화 대체수단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박탈, 동기 차단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음란물 소지, 제작·배포 사범 기소율(%)	30.49%	33.93%	33.00%	검찰통계 시스템
○ 성과목표치 산식 : 처분인원 대비 기소인원 비율		('21.1.~ '21.10.)		

□ 기대효과

- 성착취 영상물 사범 등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 \* 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삭제지원, ②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③ 전문상담, 의료서비스 및 보호시설 입소,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 그간의 추진실적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18.3월)
  -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신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특화된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內)’ 설치('18.4월)
  - 상담, 삭제지원 등 맞춤형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 \* 지원실적('18.4.30.~'21.12.31.) : 총494,079건 지원(상담 39,430건, 삭제지원 452,542건, 수사·법률지원 연계 1,856건, 의료지원 연계 251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접근성 강화
  - 불법촬영물 등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요청범위 확대('20.4월)
    - \* 성폭력방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020.4.30.시행)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20.4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및 24시간 상시상담체계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삭제 근거\* 마련('21.1월) 및 선제적 모니터링 시행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7월 시행)
  -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삭제 실적 : 총 33,262건 선삭제('21.1.1.~11.30.)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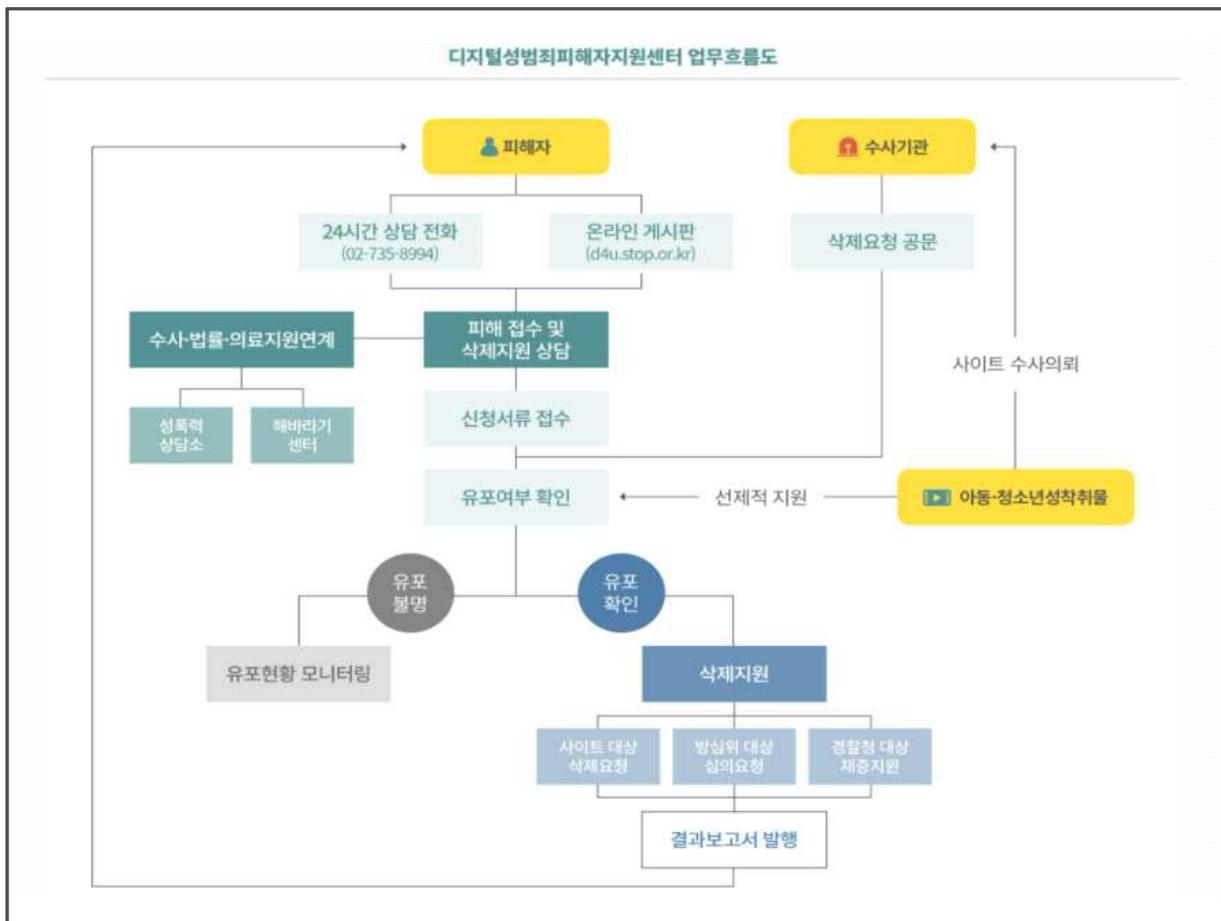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 ○ 추진 내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상 선제적 모니터링 실시 및 삭제지원

### ○ 추진 방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2년도 운영계획 수립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2/4~4/4분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 사업  비예산사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 사업임 ('22년 2,400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총 지원건수(건)	176,528 * 2021.11.30.기준	172,710	전년도 목표치 (171,000건) 대비 1% 상향 설정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지속 추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센터 정규직 증원 및 삭제 지원시스템 고도화 등 기능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김윤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2 02)2100-6163
------	------------------	-----	--------------------	------	------------------------------

## 1-1-2-②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지원 강화

###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일지, 삭제이력 및 관련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차단기술 개발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조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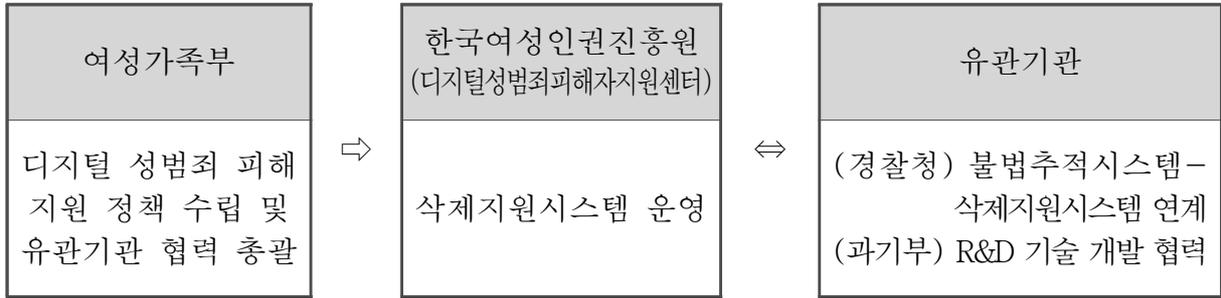
### □ 그간의 추진실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삭제지원 및 상담일지, 삭제이력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삭제지원시스템’ 구축·운영('19)
  - \* 해외사이트, SNS, P2P에 유포된 피해영상물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스템 연계 협업('19~)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을 위한 여가부-경찰청-방통위 업무협약 체결('19)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과 경찰청 ‘불법추적시스템’과의 연계 및 협업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R&D 기술 협업 추진(과기부 협력)
- 추진 내용
  - 경찰청, 방통위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운영(분기별)을 통한 시스템 연계 협업 강화
  - 과기부 협력을 통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R&D 기술 개발 지속 추진(~'23)
    - \*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 기술, 국내외 유해 웹사이트 자동 수집 기술 등

○ 추진 방법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li> <li>-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분기별)을 통한 시스템 연계 협력</li>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R&amp;D 기술 협업(과기부) 추진(상시)</li> </ul>
2/4~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li> <li>-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분기별)을 통한 시스템 연계 협력</li> <li>-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R&amp;D 기술 협업(과기부) 추진(상시)</li> </ul>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 사업임('22년 358백만원)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 회)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4	4	유관기관 간 분기별로 운영하는 협의체의 연간 운영 건수로 산출 * 경찰청-방통위-방심위-여가부 간 업무협약 체결('19년)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기술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기능 강화 및 경찰청 ‘불법 추적시스템’과의 연계 협업 추진(계속)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R&D 기술 협업 추진(과기부 협력)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김윤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00-6162 02) 2100-61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과		여동재 사무관		044)202-6551

## 1-1-2-②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 □ 과제개요

- 디지털성범죄물 피해확산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간 활용 가능한 ‘불법촬영물 공동대응DB’ 활용

- (경찰청) ‘불법촬영물 공동대응DB’ 구축·유관기관 연계
  - '19년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공동대응DB’ 구축
    - \* 경찰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허브(Hub)로 하여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 수사·삭제·차단 정보를 상호공유, 입체적인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시스템’ 구축
  - 경찰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연계, 온라인상 피해영상물 검색 등 활용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확대, ‘공공DNA DB’ 구축
  - 각 기관에서 제공한 불법촬영물 등을 저장, 웹하드 필터링 사업자에 제공
- (방통위) 국내 웹하드 상시 모니터링,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점검
  - 경찰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 연계, 웹하드 모니터링 채증자료 전송 등 수사의뢰

### □ 그간의 추진실적

- (시스템 고도화) △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능 도입으로 불법 합성물 대응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온라인 원스톱(One-Stop) 수사·삭제·차단 지원
  - △ ‘추적 시스템’ 이용 협업 기관(여가부·방통위·방심위)을 지자체(경기·인천)로 확대
    - \* 인공지능(AI)이 영상·사진 내 사람의 얼굴탐지하고 주요 특징값(눈 크기, 미간거리, 입술 등)을 추출한 뒤 동일한 특징값을 보유한 얼굴을 찾아내는 기술
- (불법촬영물 영상분석실) 독립된 공간에서 인가된 사용자(분석관)만 피해 영상물을 분석할 수 있도록 영상분석실 구축
- (2차 피해 방지) 피해자가 여가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문, 신고 과정에서 수사를 원하는 경우 경찰관서 재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해 수사 착수
  - 여가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출 피해진술서를 공유받아 별도 경찰조사 없이 수사 착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재유포자 검거

- (피해게시물 삭제·차단)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의 피해게시물 유포 현황 자동검색 기능 활용, 방심위로 삭제·차단 심의 요청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서 모니터링 중인 해외불법사이트, SNS 등에서 유통된 피해게시물·영상 발견 시 즉시 방심위로 삭제·차단(24시간 모니터링)

## □ 2022년도 시행계획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 유관기관(지자체·여가부·방심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시스템 연계 안정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경기도·인천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시스템 연계 안정화
2/4분기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 발주
3/4분기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 개발
4/4분기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420	420	420	0	0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방심위로 피해게시물 등 삭제·차단 요청한 건수				
○ 성과목표치 산식 : 시스템으로 확보된 게시물 URL, 영상 원본(DNA 추출 목적) 제공 건수	6,869건	12,812건	13,000건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김문영 경사	전화번호	02)3150-0240
------	-----------------	-----	--------	------	--------------

##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 신속대응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상시 심의를 통한 24시간 내 신속 대응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을 통한 선제적 삭제 : 17,671건<'21.1~11월>
  - 디지털 성범죄 정보 24시간 내 신속 심의 및 시정요구 : 22,474건<'21.1~11월>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정보 확산·재유통 방지를 위한 긴급·사후 모니터링 : 14,366건<'21.1~11월>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21.1~12월> : 웹 크롤링 및 특징값(DNA) 비교, 로봇 S/W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기술 적용
-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원적 유통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해외 유관기관과의 비대면 회의(화상회의 등)를 통한 해외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모색·논의\*
    - \* 해외 디지털성범죄 근절 관련 주요 협력 사항('21년)

-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근절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위한 기술적조치 업무협약 체결<'21.10월>
-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글로벌 연대 구축 및 동참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발표<'21.11월> 등

- 해외 주요 사업자(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자율규제 (삭제) 이행 점검·독려 : 322건<'21.1~8월>

-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 상시 협력\*(분기별 1회 실무협의 등)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디지털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체결 ('19.11.)에 따른 「공공 DNA DB」 통합구축, 신속 신고접수 절차 개선, 불법촬영물 수사기관 공조 방안 등 지속 논의

## □ 2022년도 시행계획

- 디지털 성범죄 상시 심의 등 신속 대응 확대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상시 심의 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계속>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역량 제고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주요 유통 경로(타깃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계속>
  - 디지털 성범죄 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고도화 <'22.1월~>
- 디지털 성범죄 정보 공동 대응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분기별 실무협의체 운영(분기 1회) 및 추진 사항 점검(수시) 등 관계기관 상시 협력<계속>
  - 해외 유관기관·사업자와 해외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실무협의 등 다각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계속>

##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622*	531**	522	-100	-16

\* 인건비, 경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 기준으로 변경 작성

\*\*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해외출장 제약 및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공백 ('21.1.29.~8.9.)에 따른 예산 미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11월)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디지털성범죄심의회 운영	106회*	250회	일 1회 이상(근무일 準)
○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3회	4회	분기별
○ 디지털성범죄정보 해외 협력회의**	5회	5회	방역 상황 고려 실시
○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	1회	2차년도

\* 제4기 방통심의회 임기 만료('21.1.29.) 후, 제5기 방통심의회 출범('21.8.9.)까지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소위원회 운영 제약

\*\* 코로나-19 감염증 전세계적 유행]으로, '21년도 해외 협력회의는 비대면 회의(화상·서면 등)로 진행하였으며, '22년도에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다각적 협력 방안 모색할 예정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회위원회 확산방지팀	담당자	안기생 차장	전화번호	02)3219-5811
------	---------------------	-----	--------	------	--------------

## 1-1-2-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 과제개요

-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 그간의 추진실적

-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아 경제적 활동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상시)
  -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 3,269건, 1억 6천만원('20.), 3,310건 1억 2천만원('21.10.말)
-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상시)
  - \*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서비스 : 4,219건('20.), 4,003건('21.10.말)
-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상시)
  - \* 법률상담 : 449건('20.), 355건('21. 10.말), 소송구조 : 194건('20.), 166건('21. 10.말)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 지원
  - 전문 심리 치유 서비스 제공 및 임시주거 시설 등 지원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민사 법률지원 등 종합 법률 서비스 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 지침」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추진 내용

- 성범죄와 관련하여 5주 미만 상해피해자 치료비 지원, 간병비 및 취업지원비 지원, 수사기관 법정 동행, 상담 등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 성폭력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들의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상담,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전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성범죄 피해 법률상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 법률지원, 2차 피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손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법률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신상 노출로 사회 활동이 제한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지침을 개정하여 경제적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경제적 지원 액수를 일반 범죄피해자보다 상향, 경제적 지원 신청 기한 특례 신설, 일반 범죄피해자에 비해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등 검토

○ 추진 방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지원
- 스마일센터를 통한 무료심리치유서비스 지원
-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집행 지침」 개정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2/4분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3/4분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4/4분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서비스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10월 말		2022년 예산안(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13,100	9,785	12,901	△199	△1.5
○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지원	4,516	2,632	4,076	△440	△9.7
• 기금(범피기금)	4,516	2,632	4,076	△440	△9.7
○ 스마일센터 운영	8,172	6,810	8,413	241	2.9
• 기금(범피기금)	8,172	6,810	8,413	241	2.9
○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412	343	412	-	-
• 기금(범피기금)	412	343	412	-	-

\* 해당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만이 아닌 각 사업의 전체 예산으로 특정 사건 지원을 위한 예산만 별도로 산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 '22.)	산출근거
	( '20.)	( '21. 10.)		
○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건)	3,269건	3,310건	3,269건	* '20년 실적을 기준으로 '22년 목표치 설정
○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건)	4,219건	4,003건	4,219건	"
○ 무료법률서비스 제공(건)	643건	521건	643건	"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편향적 시각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경제적 지원
-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적 지원
- 법률홈닥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담당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담당자	홍송이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476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
  - \* 피해자 회유 및 협박, 피해자 ‘행실’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 이에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및 신변 보호에 대한 신속한 조치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18. 7. 피해자 재활을 위한 심리·예술 치료 적극 활용 요청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예술심리치료를 지원 독려
- '19. 8. 피해자 국선변호사 처분결과 통지 개선
  - 사건 처분 시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사건인 경우 통지 누락 방지를 위한 알림 팝업 전시
- '20. 4. 디지털성범죄의 불법동영상 관련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배포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위한 불법동영상 유포 차단 및 삭제 지원 절차 마련
- '20. 5.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절차 철저 지시
  - 가명조서 작성된 경우 고소사건에서도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 금지 등
- '20. 5.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신속 지원 및 활성화 지시
- '20. 6. 불법동영상 유포차단·삭제 지원 매뉴얼 배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의사 확인 불요, 성폭범위만 불법동영상 이지만 피해자 의사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도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선

- '20. 연중.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 통지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KICS 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중
- '20.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제17282호, 2020.11.20. 시행)으로 인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실시
- '20. 11. 2020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 12. 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21. 7.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지시
  - 사법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유기적·상시적 협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적극 대응, 실질적 피해 아동 보호에 만전
- '21. 8. 디지털성범죄 관련 우수 피해자보호 사례 전파 및 피해자보호조치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우수 사례 전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 핫라인 구축 및 적극 활용 지시
- '21. 1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21. 1.~11.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시설 개선 리모델링 공사 완료 ('21. 11.말 기준, 22개 검찰청 공사 완료)
  -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을 통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022년도 시행계획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등 제도 활용(연중)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법정 동행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법률 지원, 예술·심리치료 등 적극 실시

○ 피해자 조사 전용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추진(연중)

- 일선 검찰청의 시설 노후화 정도,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 진행
-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연중)

- 신변보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변보호 대상범죄 확대 방안 지속 추진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재판진행상황, 재판결과 및 출소사실 등을 통지하는 정보제공 제도 지속 및 확대 실시
- 성폭력 등 강력사건에 있어서 가명조서 및 신원관리카드 작성 실태 지속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명)	성폭력 : 22,849	성폭력 : 21,300	22,850	전국청 수기취합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인원		('21.1.~'21.10.)		

□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 강화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1-1-2-④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 □ 과제개요

- 심리적으로 불안상태가 지속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피해 진술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 성별에 따라 동성(同性) 경찰관이 진술 청취, 피해자 조사 시 보호제도\* 적극 안내, 가명조서 적극 활용
  - \* 전담조사관, 국선변호인, 진술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전문가 참여, 진술조력인 등
- 전국 시도청에서 피해자 총 723명에 대해 총 1,037건에 걸쳐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기간 : '21. 3. 2. ~ 10. 31.)

<수기통계(중복지원), '21. 10월말 기준>

구분	영상삭제 지원·연계	해바라기센터·상담소 연계	신변보호 요청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	신뢰관계자 등 동석	진술녹화	가명조서 작성
합계 1,037건	228건	114건	41건	157건	160건	84건	253건

### □ 2022년도 시행계획

- 최초 조사부터 담당 수사관 외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진술 조사 및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녹화실 확대(리모델링), 피해자 친화적 환경 조성
- 사이버성폭력 범죄 전담조사관 중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 신고접수부터 사후 연계 지원까지 쉼 과정에 걸쳐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
  - ※ 전국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102명(현원) 중 여경 24명, 23.5% 차지('21. 10월)

### ○ 성과지표

<경찰청 여성범죄수사기획계 수기통계>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진술녹화실 확대	272개소	272개소 4-5개소(리모델링)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정병선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 □ 과제개요

-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촬영 위험 지역을 도출하고, 해당 지역 순찰 강화 등에 활용하는 등 불법촬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실시

### □ 그 간의 추진실적

- '19.3월 범죄와 유동인구 빅데이터에 기반한 지하철역 위험도 모델 개발 및 GeoPros\*에 탑재하는 등 지하철 디지털성범죄 지도 제작
  - \* '09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같은 범죄정보시스템을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범죄를 공간적으로 예측·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 □ 2022년도 시행계획

- (지하철경찰대)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단속지역을 선정, 단속활동 전개
  - \* GeoPros를 활용하여 성범죄 상위권 지하철역을 선정, 범죄발생 다발 시간대 및 지하철 역내 주요 발생장소(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
- 市·지하철운영사 등과도 합동으로 지하철 역사 내 주요시설에 불법촬영장비 점검, 대국민 불법촬영범죄 예방홍보활동도 전개
- (지구대·파출소) 빅데이터 분석 시 불법촬영 위험도가 높은 지하철역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는 해당 지하철역을 포함시킨 순찰노선 구성
  - 불법촬영 관련 112신고 접수 시 지하철경찰대·운영사間 신고내용·피의자 인상착의·출동상황 등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 구축
  - \* 112신고 접수 시 지하철경찰대와 최인접 지구대·파출소가 동시에 출동하여 신속대응

###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하철 내 불법촬영 등 지속 단속 실시

담당부서	각 지방경찰청	담당자	지하철경찰대	전화번호	
------	---------	-----	--------	------	--

## 1-1-3-② 다중이용시설 수시 점검

### □ 과제개요

- (추진배경)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18년 범부처 불법촬영 근절대책('18.6.15.) 발표와 함께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 추진
- (추진목적)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불안감을 해소
- (주요내용) 지자체별 상시·합동 점검반 구성 및 정기·수시 불법촬영 점검 활동 추진,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각종 캠페인 및 홍보 추진 등
-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기초지자체 간 협업을 통하여 추진  
※ 행정안전부 → 시·도 → 시·군·구, 소속 행정·산하기관

### □ 그간의 추진실적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운영('18.6.15.~)
  - 지자체별 합동점검반 구성(3,937명) 및 상시점검\* 추진  
\* 점검건수 : ('19년) 415천개소, ('20년) 446천개소, ('21년 6월) 224천개소
  - 주요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보유한 탐지장비와 인력으로 자체점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국민편의·안전 점검 실시(행안부·지자체·경찰)
-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예산 지원(특교세)
  - 불법촬영 탐지장비 지원(7,298대, 26억) 및 안전시설 개선(24억) ('18년)
  - 국민 안심 선도사업('19년, '20년 각 20억, '21년 10억)
- 5개 민간협회\*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간담회 개최(매년)  
\*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상영관협회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근절 등 이용문화 에티켓 홍보물 제작·배포('21.9.)
-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배부('21.12.)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운영 및 점검실적 총괄 관리

○ 추진 내용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상시점검 체계\* 운영 및 점검실적 총괄 관리
  - \* 시·도, 시·군·구, 소속·산하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연1회) 및 점검반 구성·운영
- 명절 및 휴가철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및 캠페인 추진
  - \*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비상벨 설치·작동 여부 점검 등
- 불법촬영 근절 활동 관련 주요 민간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 \*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상영관협회
- 불법촬영 근절 지자체 점검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 점검 매뉴얼 보완 및 불법촬영 점검 교육 동영상 제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실적 현황 관리 - 설 명절 대비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추진
2/4분기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실적 현황 관리
3/4분기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실적 현황 관리 -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대비 공중화장실 국민편의대책 추진
4/4분기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실적 현황 관리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개정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다중시설 내 공중·민간화장실에 대한 점검 실적	446,000	224,055	415,000	코로나 19장기화로 점검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21년도 예상실적과 동일 수준 목표 설정
○ 점검 화장실 총 개소 수	개소	개소 ('21.6월 기준)		

□ 기대효과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체계 지속 운영 및 지자체 불법촬영 점검 역량 강화 지원 등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담당자	강인선 주무관	전화번호	044)205-3546
------	------------------	-----	---------	------	--------------

1-1-3-② 다중이용시설 수시 점검

□ 과제개요

- 최근 불법카메라 촬영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철도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필요
  - \* 최근 5년간 철도분야 불법촬영범죄 현황 : '15년 164건 → '20년 440건(1.7배↑)

□ 그 간의 추진실적

- 철도운영자가 철도·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화장실, 수유실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 실시(국토부 고시\*, '19.1.시행)
  -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및 역구내 화장실, 수유실에 대해 카메라 등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

□ 2022년도 시행계획

- 철도운영자는 일일점검을 지속 이행하고, 국철구간 주요역사에 대해서는 철도 특별사범경찰대와 월1회 이상 합동점검 실시
- 철도운영자는 철도역사(화장실, 수유실 등)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화장실, 수유실 등)에 대한 일일점검을 지속적으로 지속 실시
  - 철도경찰대는 성범죄 빈도가 높은 수도권 광역철도 구간에서 불법카메라 촬영 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단속 강화
    - \* 22년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5명 인력 보강 예정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철도운영자와 철도경찰대 합동점검 확대	10회	11회	점검결과 보고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국철구간 주요역사 및 철도 내 불법촬영 점검체계 지속 운영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영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4617
------	------------------	-----	---------	------	--------------

## 1-1-3-② 다중이용시설 수시 점검

### □ 과제개요

- (추진목적) 불법 카메라 확인 여부 수시확인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공중위생서비스평가 총괄 기획 및 조정) ⇒ 시·도(평가 계획 수립) ⇒ 시·군·구(평가 실시) ⇒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자단체(평가 협조)
-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는 포상 등을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공중위생영업소 점검근거 신설(「공중위생관리법」 개정, '18.12.11)
-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20. 3. ~ 12.)
- '21년도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지침 개정\*으로 위생감시 대상 중점점검 내용 중 불법카메라(유사장치 포함) 설치 여부 확인대상 업종 추가  
\* 기존 숙박업·목욕업 → 이·미용업소 등 추가

### □ 2022년도 시행계획

- 평가대상 2개 업종(숙박업, 목욕업)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점검 및 평가 홍보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및 영업자 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시행 시 불법카메라 스티커금지 부착여부 중점확인
- 추진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평가실시 시 공중위생영업장 영업장에 불법 카메라 금지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 추진 방법  
- 보건복지부(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항목 마련 및 지자체·협회 공문시행 1분기)  
- 시·군·구 공중위생담당 공무원(공중위생서비스 평가 2~4분기)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항목 마련 및 지자체·협회 공문시행
2/4분기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실시 및 지속홍보 실시
3/4분기	
4/4분기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2021년)	목표치(2022년)	산출근거
○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 지침개정	지침개정 완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실시	

기대효과

○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통하여 각 지자체 공무원과 협회를 통하여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경각심 제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중위생영업자단체 지속 홍보 요청 및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	담당자	오성남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856
------	-----------------------	-----	---------	------	--------------

## □ 과제개요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
  - 변형카메라 취급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 그간의 추진실적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진선미 의원, '21.3.25) 및 과방위 상정('21.4.20)
  - \* 취급업자 등록,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사실 고지, 판매·구매정보의 기록 등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윤영찬 의원, '21.9.24) 및 과방위 상정('21.11.9)
  - \* 취급하고자 하는 자 허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관리사실 고지, 판매·구매정보의 기록 등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 추진 내용
  - 법률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내용들을 구체화
- 추진 방법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제정 연구반을 구성·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2/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3/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4/4분기	- 법률안 제정 시 하위법령 마련 추진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변형카메라 취급자 등록제 도입	-	-	법률안 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 성과목표치 산식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1건				

□ 기대효과

○ 변형카메라의 취급 관리,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전관리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변형카메라 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과기정보통신부 전과기반과	담당자	최동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4956
------	------------------	-----	---------	------	--------------

## 1-2-1-②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과제개요

- (주요내용)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장소 내 개인영상 촬영 금지의무 부과

### □ 그간의 추진실적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국회 제출('21.9.28)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서 개인영상 촬영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5조의2 제2항 신설)
    - \* 국회 제출('21.9.28.) → 정무위 전체회의('21.11.16) → 법안소위('21.11.23)
    - \* '17.12.26,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5.29 임기만료 폐기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법안통과 적극 지원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개선안 마련	정부안 국회제출	국회 법안통과 적극 지원	
○ 개정안 국회통과 지원				

□ 기대효과 :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공공장소 내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

□ 기타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담당자	정종일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3066
------	-----------------------	-----	---------	------	--------------

## □ 과제개요

-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을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추진 ('20년~)
- 웹하드,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 민간 사업자에게 기술을 이전하여 불법 음란물 등 전송 차단 및 모니터링 활동 지원

## □ 그간의 추진실적(과제완료)

-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다채널 모니터링 기술 개발('20년~)
  - ※ 모니터링 채널 수 확대('19년 22개 채널→'20년 30개 채널) 등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관련 기술이전으로 민간사업자의 상용화 지원('20년~)
  - ※ '이미지 유해성(음란성) 검출을 위한 이미지 학습 및 분류엔진 생성기술' 및 '경량화 유해미디어(음란성) 분석 기술'에 대해 민간업체 기술이전('20.11월 기준 총 6건)-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 다채널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 개발(계속, ~'21년)
  - ※ 모니터링 채널 수 확대('20년 30개 채널 → '21년 50개 채널)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일목요연한 대쉬보드 인터페이스 등 유해미디어(음란성) 모니터링 관제시스템 개발
- 관련 기술이전으로 민간사업자의 상용화 지원(계속, ~'21년)
  - ※ '이미지 유해성(음란성) 검출을 위한 이미지 학습 및 분류엔진 생성기술', '경량화 유해미디어(음란성) 분석 기술' 등 개발기술 설명회 개최 및 기술이전 추진(계속)

## □ 과제개요

-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 유통 통제
  - 웹하드 등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 추진 및 불법 촬영물 등 표준 필터링기술 고도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웹하드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점검 및 위반 시 행정제재
  - 웹하드 사업자 대상 불법영상물 유통 관련 상시 점검
    -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추정) 삭제 현황 : ('19) 173건 → ('20) 126건 → ('21.11월) 61건
    - 불법 음란물 삭제 현황: ('19) 146,263건 → ('20) 213,669건 → ('21.11월) 216,913건
  -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후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조치 의결
    - \* ('20.1월) 총 4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총 2,800만원)
    - \* ('21.3월) 총 3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총 2,100만원)
- 인터넷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강화 및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 웹하드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물 재유통 방지를 위해 웹하드사업자의 불법 음란물 기술적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2천만원 → 5천만원) 상향 등
  -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신고·삭제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신설
  - 부가통신사업자에 필터링 등 사전적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삭제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방통위에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점검
- 주요 인터넷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 주요 인터넷사업자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지정 고시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주요 인터넷사업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확인
2/4분기	- 주요 인터넷사업자 투명성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 불법촬영물 등 표준 필터링기술 고도화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시행
3/4분기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육 실시
4/4분기	- 주요 인터넷사업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실태 점검(7~12월) -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실태점검 (7~12월)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2,765	2,765	2,765		
국비					
•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2,765	2,765	2,76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등록 건수	65,702건	59,906건 (11월말기준)	67,673건	'22년 목표치는 전년 실적대비 약 3%증가로 상향 설정
○ 상시점검 등을 통해 확보한 불법 음란정보의 DNA DB 등록 건수				

□ 기대효과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담당자	김기호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1564
------	-------------------	-----	---------	------	--------------

## 1-2-2-③ 영상물 재유통 방지

### □ 과제개요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배포 등 기술지원을 통한 불법촬영물등 재유통 방지

### □ 그간의 추진실적

- 범정부 ‘공공 DNA DB’\*의 안정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조치의무사업자 확대 지원을 위한 ‘표준 DNA DB’\*\* 추출·검출 기술 도입 및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 지원 포털’\*\*\* 개설<’21.8월>
    - \* 공공DNA DB :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음란 영상의 고유한 특징값(DNA값)을 추출하여, 방심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민간(조치의무사업자 등)에서 자사 서비스 내 차단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
    - \*\* 표준 DNA DB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하여, 라이선스 제약 없이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게 보급·적용 가능한 불법촬영물 등 불법영상물의 특징값(DNA) 추출·검출 및 필터링 기술
    - \*\*\*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위한 특징값(DNA) DB 등 기술지원 포털 : <https://dna.kocsc.or.kr>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재유통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배포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배포 : 30,116건<~’21.11월>
  - 관계기관 간 ‘공공 DNA DB’ 통합 구축·개선을 위한 수시 협력

### □ 2022년도 시행계획

-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지원<계속>
  - ‘공공 DNA DB’ 오검출에 따른 사업자 민원 대응
  - 범정부 ‘공공 DNA DB’ 구축·배포 등 조치의무사업자 안정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700	698	650	-50	-7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공공 DNA DB 통합 관리 시스템 고도화	-	1회	2차년도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산방지팀	담당자	안기생 차장	전화번호	02)3219-5811
------	--------------------	-----	--------	------	--------------

## □ 과제개요

- 약물 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탐지기술 개발 및 대외협력을 통한 신고·홍보 활성화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 그간의 추진실적

- 과기부 등 협업, 신속한 탐지를 위한 상황별 휴대용 약물 탐지기술 개발
  - ('20년) 마약3종(메스암페타민, MDMA, 케타민)을 탐지할 수 있는 일반 국민용 키트 및 현장·전문수사관용 탐지기 개발
  - ('21년) △마약6종(졸피뎀, THC, GHB, Methylphenidate, MDPV, Methcathinone)탐지할 수 있는 현장·전문수사관용 탐지기 △마약 3종(졸피뎀, GHB, Fentanyl) 탐지할 수 있는 일반국민용 키트 개발
-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통한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교육 강화
  - '21. 3월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 마약류 등 약물이용 성범죄 관련 수사 절차·증거물 처리절차·유형별 법률 적용 등 기존 자료 보강

## □ 2022년도 시행계획

- 과기부 등 협업, 약물 탐지기술 개발 및 대국민용 키트 상용화 지속 추진
  - 현장·전문수사관용 탐지기(마약 7종 : 코카인, 몰핀, 헤로인,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알프로졸람, Fentanyl) 및 일반국민용 키트 개발(마약 3종 :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THC))
- 유관기관 등과 협업,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신고, 대처방법 및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경찰청, 여가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약물 탐지기술 개발실적	9건	10건	약물탐지 가능한 반응물질 개발 건수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송수진 경감	전화번호	02)3150-0832
	경찰청 과학치안정책팀		김대현 경사		02)3150-1143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정유진 사무관		02)2100-6395

## □ 과제개요

- 국제회의 참여 및 해외 주요사범당국과 형사사범공조 통한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 처벌 강화

## □ 2021년도 추진실적

- ‘UN 범죄예방·형사사범총회’등 주요 국제회의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 UN 범죄예방·형사사범총회 참석

- 일정 : 2021. 3. 7.(일) ~ 9.(화), 일본 교토 화상회의
- 참석 : (법무부) 법무부장관, 국제형사과장, 검사 임하나
- 내용 : 법무부 장관,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입장 표명

- 해외 사법기관과의 형사사범공조 강화를 통한 신속한 사건 처리 노력
  -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요청한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사범 관련 국제형사사범공조 사건들에 대해 미국·일본 등에 신속히 공조 시행
    - ※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 통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사범에 대한 형사사범공조요청 시행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노동력착취, 성적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 규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율되고 그에 상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교육

- 국제형사과 검사 이진희, ①('21.7.22.)법무연수원 신임검사 대상 교육, ②('21.10.22)법무연수원 저년차검사 대상 교육 실시 → 성착취 등 인신매매 범죄 수사 및 공소유지 강의
- 국제형사과 사무관 고영호, ①('21.7.2.), ②('21.7.30.), ③('21.8.20.), ④('21.9.7.) 각 법무연수원 검찰 6습 승진후보자 대상 교육 → 국제기준에 부합한 성착취 등 인신매매범죄 대응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22년 'UN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 등에 참여하여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논의
- 해외 사법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 강화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적착취,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 규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율되고 그에 상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추진 계획

실행과제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 고
1-3-1-① (법무부)	- 인신매매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입장 적극 개선 * UN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 UN 초국가범죄방지협약(UNTOC) 작업반 회의 등	1월~10월	
	- 인신매매 관련 범죄 수사 및 재판 실무 개선 노력	3월~12월	
	-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엄정 적용	1월~12월	
	- 여성·아동 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 교육	1월~12월	

담당부서	국제형사과	담당자	박창후 계장	전화번호	02)2110-3296
------	-------	-----	--------	------	--------------

1-3-1-① 불법촬영물 등 제작·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과제개요

- 형사사범공조, 인터폴 공조와 함께 외국 법집행 기관·글로벌 기업 등과 직접 공조, 국제공조 체계 강화
- 인터폴에서 운영 중인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ICSE DB)’의 접속권한 확보, 온라인상 아동성착취물 유통사범 단속에 활용

□ 그간의 추진실적

- 인터폴·유로폴 공조와 함께 해외 법집행 기관(美 FBI·HSI 등)·글로벌 IT 기업(구글·페이스북 등)과 직접 공조를 통해 국제공조 체계 강화
  - 불법촬영물 등 제작·유통 사건 국제공조 요청 현황('21.10월말 기준)  
: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총 681건 (경찰청 국제공조협력계 수기통계)

□ 2022년도 시행계획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국외 체류 및 도피 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및 국내송환 요청 등 적극 추진
- 인터폴 ICSE DB 활용 및 해외수사기관·IT기업과 직접 공조수사로 해외에 서버를 둔 아동성착취물 불법유포사이트 운영자 검거추진
- 성과지표

<경찰청 국제공조협력계 수기통계>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사이버성폭력 국제공조 요청건수	681건	685건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정병선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 □ 과제개요

- 해외성매매로 인한 국위손상자로 통보된 자에 대해 현행 법령 등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

## □ 그간의 추진실적

- 20.1~21.11월 간 관계기관 등의 통보에 따라 해외성매매 사범 5명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조치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해외성매매로 인한 국위손상자로 통보된 자에 대해 현행 법령 등에 따라 여권 발급 제한 지속 시행

## ○ 추진 내용

- 현행법에 따라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여권 발급제한 처리 예정

## ○ 추진 방법

-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여권발급 제한처리

\*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상반기	-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적시 보고 환기 공문 발송
하반기	- 전 재외공관에 국위손상자 적시 보고 환기 공문 발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매매사범 여권발급제한	4	1	-	여권발급제한 요청에 따른 조치 건수
○ 성과목표치 산식				

기대효과

○ 해외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현행법에 따라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 여권 발급제한 처리 예정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외교부 여권과	담당자	김민혜 행정관	전화번호	02)2002-0133
------	------------	-----	---------	------	--------------

## □ 과제개요

- 해외성매매 방지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 해외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대국민 홍보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실태조사) 2019 성매매 실태조사내 일반성인대상 성매매 인식조사시 해외성매매 경험·인식을 포함하여 조사('19.5~12월)후 결과발표('20.6월)

<해외성매매 경험 및 인식 조사 주요 결과(출처: '19 성매매실태조사)>

구분(단위:%)		2016	2019	증감률(%p)	조사대상('19년)
해외성매매 경험률	본인	7.1	4.7	△2.4	성인남성 1,500명
	주변인	26.4	25	△1.4	성인남녀 2,300명
해외성매매 국내처벌 인지율		44.8	52.8	8	성인남녀 2,300명

- (대국민홍보) 전국 공항 전광판을 통한 해외성매매 불법 홍보(연중)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성매매 실태조사(3년주기)를 통한 해외 성매매 경험 등 실태 조사
- 성매매추방주간(9.19~25) 등 계기를 활용하여 공공 전광판 등을 통한 성매매 방지 홍보

## ○ 예산 현황 : 기포함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 성과지표 : 없음

## □ 2022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외 성매매 경험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매매 추방주간(9.19~25) 운영 등 대국민 홍보(매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대중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
------	----------------	-----	---------	------	------------

## □ 개요

- 인터폴 전용통신망을 통해 해외성매매 공조요청을 접수하거나, 해외 경찰주재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으로부터 해외성매매 첩보를 수집하여 국수본에 인계
- 국수본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계에서는 인계받은 첩보 및 자체 생산 첩보 바탕으로 해외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등 상시단속하여 해외 성매매 방지

## □ 그간의 추진실적

## ○ '21년 해외성매매 피의자 검거 현황

※ 코로나19로 해외입출국이 제한되며 해외성매매 피의자 검거인원이 급격히 감소

구분	계	성매매알선	성매도	성매수
검거인원(명)	0	0	0	0

## □ 2022년도 시행계획

## ○ 해외성매매 첩보 수집 강화 및 상시 단속 실시

- 해외 경찰주재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등을 통해 해외 성매매 첩보 수집 강화
- 국제범죄수사계를 활용, 해외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 상시 단속 등 실시

## ○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참여 및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구축하여 해외성매매 상시단속에 대해 정부 부처간 긴밀히 협업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해외성매매 피의자 검거인원	0	5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담당자	정재익 경위 (김태현 경감)	전화번호	02)3150-0307 02)3150-2043
------	--------------------------------	-----	--------------------	------	------------------------------

## □ 과제개요

- 휴대전화를 통해 유통되는 성인스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 (분류기준) 스팸 신고 접수·처리 건 등에서 보이스 채팅, 유흥업소 광고에 해당
- 스팸신고 정보를 통해 성매매 알선 정보의 유통 여부 파악·대응

## □ 그간의 추진실적

- 성인 스팸 발송업체\* 대상 기획점검을 통해 12개 사업자 과태료 부과, 8개 사업자 검찰 송치('20년)
  - \* 성매매 알선 업체는 아니며, 전화채팅 서비스 제공 업체인 것으로 확인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성인 광고·음란물 등의 불법스팸 전송자 처분 조치
  - 성매매 알선 스팸 전송자 3명 검찰송치('21.7월)
  - 음성채팅(060) 전화사업자(21개) 대상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스팸 전송자 13명 및 17개 사업자(법인)\* 검찰 송치('21.11월)
    - \* 정보통신망법 제75조(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및 법인을 동시 처벌 가능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휴대전화를 통한 성인 스팸 발송업체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20개)
    - ※ 성매매 알선이 의심되는 스팸 신고가 접수되면 점검 대상 업체로 포함
  - '스팸 간편신고 앱' 개발 완료('21.11월)에 따라 성인스팸 등 신고 독려 홍보 추진((네이버, 유튜브 등, '22.1월초)
    - ※ '21년 개별과제 분석 결과 개선의견 반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매매 알선 등 음란·성인스팸 신고내역 모니터링 및 주요 전송자 확인 (대량 신고건 보유, 청소년 대상 전송여부 등)
2/4분기	- 성매매 알선 등 음란·성인스팸 신고내역 모니터링 및 주요 전송자 확인 (대량 신고건 보유, 청소년 대상 전송여부 등)
3/4분기	- 성인 스팸 전송자 현장점검 실시
4/4분기	- 성인 스팸 전송자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조치(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처리	865	865	865	-	-
국비					
• 일반회계	865	865	865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인스팸 발송 업체 기획 점검 대상업체 수(개)	20	21	20	성인스팸 점검대상 선정은 신고 접수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므로 '21년 개별과제 분석 결과에 따라 20년도 목표치 유지

□ 기대효과

○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알선 정보 유형파악 및 신속 대응조치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스팸 신고를 바탕으로 성매매 알선 정보의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성매매 알선 정보 탐지 시 신속히 차단·처벌 조치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담당자	권만섭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1527
------	----------------------	-----	---------	------	--------------

1-4-1-①

## 성매매 알선 정보 전달 매체 감시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 □ 과제 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실적('21년 1~10월)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154건	148건	96.1%	236명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매뉴얼('21년 9월) 하달

### □ 2022년도 시행계획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 단속·수사 추진

- (아동·청소년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 관서별로 자체 상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 추진

\* 랜덤채팅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유관 기능과 공조 강화하여 디지털 포렌식·추적수사 등 적극 실시

- (위장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하여 시·도경찰청별로 선발된 위장수사관 및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수행

\* △ 성착취물 제작·배포 △ 성착취 목적 대화 △ 불법촬영물 유통 범죄

- (아동·청소년 조사)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하고 조사時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절차 및 보호·지원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

- (기관 통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기관의 원활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후 지체 없이 여가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 통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율 {(검거건수 / 발생건수)x100}	96.1%	96.2%	KICS 통계 시스템

□ 기대효과

- 위장수사 법제화로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심리를 억제하여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위장된 신분을 이용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검거 활동을 통해 텔레그램 등 은밀화·지능화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가능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관련 인력·예산·장비 지원 강화, 전문 수사기법 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확립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	담당자	김재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2878
------	------------------	-----	--------	------	--------------

## □ 과제개요

-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상담, 구조지원 등 성매매 예방활동 추진
-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 예방을 위한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채팅앱, 채팅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의심 이용자 신고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서비스 홍보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법률, 의료, 교육 등) 연계
- 사이버또래상담원(채팅앱 은어 등에 익숙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중 선발)을 양성하여 온라인 상담원으로 활동 및 자립 도모
-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17	'18	'19	'20	'21
상 담(명)	3,970	4,063	4,284	3,611	4,396
지원 연계(건)	5,027	4,719	5,699	4,751	5,920
방심위 신고(건)	777	902	971	1,417	1,360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청소년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상담 실시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의료지원서비스 연계
- 온라인 성매매 의심정보 신고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홍보 사업 등
- 사이버 또래 상담원 역량강화 양성교육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상담)	261	261	261	-	-
국비	261	261	261	-	-
• 일반회계	261	261	261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온라인 성매매 유인 의심신고 건 수	1,360건 (21. 9월 기준)	1,400건	○ 온라인 특성상 모니터링 및 성 매매 의심 대상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이버 상에서 성매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 상담, 구조지원 등  
성매매 예방활동 지속 추진
- 청소년 온라인 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이버 또래 상담 및 모니터링 실시

□ 기타 사항 :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대중 사무관 김능인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35 02)2100-6446
------	----------------	-----	--------------------	------	------------------------------

## □ 과제개요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조건만남 등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

\* 불특정 상대와 채팅, 쪽지 등 가능(특정인 사이의 채팅, 쪽지가 가능한 채팅앱과 구분)

##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 보호) 성매매 단속·수사 및 신고출동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 여부 식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표준식별모델 개발·도입(’21.9월)

- (이론적 배경) 관련 법령·판례·논문을 근거로 △피해자 식별의 필요성 △성판매자의 취약성 △성매매 산업의 구조 등 설명
- (과오사례 분석) 성매매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미식별 △법령·지침 위반 등 과오사례를 토대로 단속·수사 시 유의사항 제시
- (표준식별모델) 피해자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필수 확인 및 조사사항을 매뉴얼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수사기록(조서) 분석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매뉴얼(’21년 9월) 하달

## □ 2022년도 시행계획

- (아동·청소년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 관서별로 자체 상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 추진

\* 랜덤채팅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유관 기능과 공조 강화하여 디지털 포렌식·추적수사 등 적극 실시

- <위장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위하여 시·도 경찰청별로 선발된 위장수사관 및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신분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수행

\*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후 관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 재유입 방지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 지원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철저
- (재영업 차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후 철저한 추적 수사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자 형사입건 등 재영업 행위 차단
  - 숙박업소 등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 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 확인시 적극 입건, 임대차 보증금 등 몰수·추징
- (범죄수익금 동결)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적극 추적·동결 조치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	기소 전 추징보전 대상
범죄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재산에 대해 실시	범죄수익 은닉·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피의자 등 소유 일반재산에 대해 실시

○ 성과지표

성과목표(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검거인원(명)	236명	250명	KICS 통계 시스템

□ 기대효과

- 위장수사 법제화로 잠재적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심리를 억제하여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위장된 신분을 이용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사·검거 활동을 통해 텔레그램 등 은밀화·지능화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가능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관련 인력·예산·장비 지원 강화, 전문 수사기법 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확립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	담당자	김재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2878
------	------------------	-----	--------	------	--------------

##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정보 대응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21.1~11월)
  -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5,207건 시정요구
  - 인터넷 성매매 알선·유도 정보 1,997건 시정요구
-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모니터링(3회, 6월·8월·12월)
  - ※ 전년도 시정요구 상위 랜덤채팅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성매매 정보를 게시한 이용자에 대한 시정요구(이용해지) 결정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성매매 정보 유통 경로 다양화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해 중점 모니터링 대상 확대
  - URL 주소 변경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는 불법 성매매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수사기관 및 관련 신고기관 업무협력 강화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채팅앱 성매매 정보 심의	상시	상시	-
○ 온라인 성매매 정보 중점모니터링 실시(횟수)	3회	2회	유관기관 신고 증가에 따른 심의 처리역량 강화를 위해 횟수 조정

담당부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담당자	김준희 차장	전화번호	02)3219-5842
------	---------------------	-----	--------	------	--------------

### □ 과제개요

- 여성 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범죄불안요인 발굴, 환경개선 추진 및 여성대상범죄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한 주민 체감안전도 제고

### □ 그간의 추진실적

- (범죄대응 개선)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대응으로 스토킹에 대한 경찰개입 근거 마련, 업무시스템 구축·집중 교육 등 면밀한 현장대응 추진

• 거주지 부근 지속·반복적인 접근·기다리는 행위 등 여성 1인가구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보호조치·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한 강력범죄화 예방

- 성폭력 범죄 등 신고 초동조치 시 신변보호 등 피해자 지원 안내서 배부·설명 등 제도 안내 강화, 1인 가구 여성 등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 (여성안심환경 구축) 범죄예방 강화구역(864개소)개선 및 여성안심귀갓길(1,952개소) 지정, 지자체·민간 협업 등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 환경 조성

### □ 2022년도 시행계획

- (성범죄 예방)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 지자체 협업을 통한 시기별·테마별 집중 예방 활동 추진

- 여성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일상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촬영 탐지 신규장비 보급, 탐지기술·역량 강화

\* 무선통신기능을 이용한 IP카메라 탐지기술 개발, 기술상용화를 통한 현장 활용

- (취약요인 점검) 성범죄 빈발 등 여성이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 대상 취약요인 점검 및 순찰 강화, 방범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 지속 추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10월 말 기준)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폭력 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 감소	17,780	16,221	전년 대비 5.5% ↓	3년간('18~'20) (감소)추세치 반영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김지윤 경사	전화번호	02)3150-0904
------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피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교육 강화
  - 장애인 학대 신고현황 등을 활용하여 실태 파악 및 예방 강화
- (추진체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8개)
- (주요 내용) 여성장애인의 학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교육 강화
  - \* 학대피해장애인 중 여성장애인 비율 51.5%(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 학대·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 실적
  - '21년도 학대·성범죄 예방교육 842회 20,648명\* 지원
  - \* 전년 대비 교육횟수 기준 21.3%, 교육인원 기준 +12.5% 증가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장애인학대현황을 통해 파악한 피해 실태를 바탕으로 여성발달장애인의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
  - \* 학대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 67.8%(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추진 내용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2/4분기	-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상반기 실적 점검
3/4분기	-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4/4분기	-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연간 실적 점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4,902	4,902	4,367	△535	△10.9%
국비	4,902	4,902	4,367	△535	△10.9%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학대 예방 교육 목표 대비 실시율	88% (당초 목표치)	103% (당초 목표치)	100% (832회) * 인원 21,680명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실시 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목표치 및 실시 근거
○ 성과목표치 산식 : 예방 교육 실시건수/목표건수 × 100	788회 대비 694회) * 인원 18,351명	832회 대비 842회) * 인원 20,648명		

□ 기대효과

○ 여성장애인의 학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학대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

□ 2022년도 이후 추진계획

○ 장애인 대상 학대·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확대 실시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학대·성범죄 예방 및 인권보장 강화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최환석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3301
------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 (추진체계)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및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 (주요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를 통해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인권교육 실시
  - 집합교육 및 광역시·도 주관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11회)

## □ 2022년도 시행계획

- 매년 실시하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의 시설장·사무국장 인권침해예방교육 및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시 여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거주시설 자체적으로 종사자 연 2회(8시간 이상) 및 이용자 연 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여 모니터링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장애인단체 지원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100	100	100	-	-
국비	100	100	10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및 사무국장 인권교육 참여자수	1,289 (온라인)	1,554 (온라인)	1,500 (온라인)	*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교육 목표치 근거(인권지킴이지원 센터 추진)

□ 기대효과

- 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도모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여부 등 모니터링 지속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담당자	김유현 사무관 임현정 주무관	전화번호	044)202-3309 044)202-3305
------	-------------------	-----	--------------------	------	------------------------------

1-4-3-③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확대

1-4-3-④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장애인 특화 상담소·보호시설 확대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관리)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피해자 지원, 정산 보고 등)
- (주요내용)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3개소)·보호시설(7개소), 자립지원시설(2개소) 운영지원, 장애인 가정폭력 상담소(4개소)·보호시설(2개소) 운영지원, 신규 국비지원 기관 컨설팅 및 종사자 슈퍼비전 등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연중)
  - (상담소) 중증장애인 상담편의 확충\*, 일반 상담소 인력(소장 1명, 상담원 3명) 외에 추가로 상담지원 인력(1명)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확대
    -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상담원의 방문상담, 수화통역인(청각장애인) 지원 가능
  - (보호시설)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장애인용 통행로, 승강기, 화장실, 침실 등 편의시설\*의 구축, 인건비\*\*·교통비 등 추가 지원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일반 보호시설 인력(시설장 1명, 상담원 2~3명, 보조원 1명) 외 상담원(1~2명) 추가 배치
- 신규 국비지원 기관(8개) 컨설팅, 관련 종사자(총275명) 슈퍼비전 실시('20년)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연중)
  - 신규 국비지원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슈퍼비전 실시(연중)

○ 추진 내용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확대(1개소) 및 장애인 보호시설 추가 인력 확충(5명)

○ 추진 방법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개소(1개소)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2/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추가인력 배치 완료
3/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4/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계속)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개소(1개소)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상담 지원 실적(천건)	224	집계중	235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건수와 보호시설 심리지원 실적의 합계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20년 실적대비 5% 증가)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 시설 상담 지원 실적(천건)		315 (추정)	330	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건수와 보호시설 심리지원 실적의 합계 (전년대비 5% 증가)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시설 접근성 강화 및 시설의 추가인력 확충으로 피해자 지원서비스 내실화 제고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서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6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박윤호 주무관		02)2100-6423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김대중 사무관		02)2100-6435

## □ 과제개요

-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시 직장 내 성희롱 여부 집중 점검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19년) 법 위반 사업장 1,672개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872건으로 성희롱예방교육 600건, 교육자료 미게시 280건, 모집상 남녀차별·배우자 출산휴가 미달 각 1건씩 적발
  - \* 시정지시 868건, 과태료 4건 조치
- ('20년) 법 위반 사업장 555개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140건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93건, 교육자료 미게시 26건, 사업주교육 미실시 20건,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미조치 1건 적발
  - \* 시정지시 139건, 과태료 1건 조치
- ('21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2,310개소 대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지도·점검('21.2.2~11.30)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 외국인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및 성희롱 예방교육 취약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추진 내용
  - '22년 상반기 2회에 걸쳐 3,000여 개 고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시 조치이행 여부 등 중점 점검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징계조치 여부, 피해자 불이익조치 여부 등
- 추진 방법
  - 점검시 통역원을 대동하여 사업주와 분리된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 직접 면담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 근로감독관과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 조치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상반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2/4분기	- 상반기 지도점검 추진
3/4분기	-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 수립
4/4분기	- 하반기 지도점검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외국인고용사업장 점검 (개소)	1,502	2,310	3,000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장 점검 결과
○ 성과목표치 산식: 150(명)×20(개소)				

\*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점검수행 3,000개소에서 축소 조정

기대효과

○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익 보장

-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하고 성차별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매년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000여 개소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남녀고용 평등법 등에 대한 지도점검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김형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2-7148
------	------------------	-----	---------	------	---------------

1-4-4-①

사업장 대상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점검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피초청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 과제개요

- (목적) 외국인근로자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 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필요
- (주요내용)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강제해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제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 그간의 추진실적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 제7호 신설('18.6.12. 시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② 법무부장관은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 2022년도 시행계획

- 과제 완료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	김정옥 사무관	전화번호	02) 2110-4065
------	--------------	-----	---------	------	---------------

## □ 과제개요

- (추진배경)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고,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을 위해 국민 대상 인식 개선 및 이주여성 대상 지원 홍보 강화 필요
- (사업목적)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없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수용성 제고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주간)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5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주요내용)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송출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홍보 등

##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홍보영상 송출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연중)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 \* 유튜브, 카카오(인터넷), tv(방송) 광고 영상 송출, ('21.12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추진 내용
  - 이주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일반국민 대상 이주여성인식 개선 홍보(연중)
  - 폭력피해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등 홍보 강화(연중)

○ 추진 방법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추진(연중)
2/4분기	-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추진(연중)
3/4분기	-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추진(연중)
4/4분기	-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추진(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6,410	6,297	7,548	1,138	17.7
국비	6,410	6,297	7,548	1,138	17.7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홍보영상 방송 송출 건수	-	2건	2건	성과보고서

□ 기대효과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홍보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최윤미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	----------------	-----	--------------------	------	------------------------------

## □ 과제개요

## ○ 목적

- 이주배경에 따른 언어적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성폭력 피해 신고가 어려운 이주여성에게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최소화

## ○ 주요 내용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강화
  - \* '18년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내·외국인 대상 유형별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을 언어별로 개발(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법무부-경찰청 협업을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이민자에게 성폭력 등 범죄 예방교육 특강 실시
  - \* 경찰청 범죄예방교육 전문강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실제 성폭력 등 범죄 사례와 함께 예방교육 특강 실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한국사회이해(기본, 심화) 동영상을 개발하여, 이주여성의 직장 성희롱예방교육, 모성보호 교육 등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18. 5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교육 시행(매년 실시)
  - ※ '18년 224명, '19년 2,138명 참여
- '18. 12월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개발 완료
- '19. 1월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예방교육 동영상 배포
- '19. 5월 유튜브에 예방교육 동영상 게시 및 공유
- '20. 11월 이민자 대상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실시
- '21. 11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기본, 심화) 동영상 개발 완료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국내 체류 이주여성 등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범죄예방교육 실시
- 추진 내용
  - 동영상을 활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 범죄예방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으로 운영
  - 한국사회이해(기본, 심화) 동영상을 활용한 이주여성 대상 범죄예방, 직장내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교육 시행
- 추진 방법
  -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교육 시행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사회통합프로그램 범죄예방교육 운영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사회통합프로그램 범죄 예방교육	500	230	400	결과보고서 등
○ 성과목표산식 : 범죄예방교육참여자 수(명)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집합교육 미실시

□ 기대효과

- 이주 여성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 범죄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언어문제, 정보부족 등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 최소화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범죄예방교육 지속 실시

□ 기타사항

- 코로나19 안정세 이후 집합교육 재개 등을 통해 참여자 확대 노력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전강섭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146
------	--------------	-----	---------	------	--------------

## □ 과제개요

## ○ 목적

-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속성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 지원

## ○ 추진 체계

- 추진주체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추진절차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일정에 맞게 교육일정 공지(월 2회)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교육 신청 → 교육 참여

## ○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
  - ※ 고시 국가 이외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도 교육 신청 가능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 소개, 결혼이민 사증발급 절차 및 심사 기준 등 정책 안내, 사례 및 경험담 소개,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 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 등 4개 과정으로 구성

## □ 그간의 추진실적

- '10. 10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시범 실시
- '11. 3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고시 국가)
- '18. 3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과정 확대(인권교육 추가)
- '20. 7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주말 교육 시범 실시
- '21. 2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교육 실시
  -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 선택 실시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 운영
- 추진 내용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월 2회 실시
  - 만족도 조사 : 교육참여자 대상 설문실시, 교육만족도 조사
- 추진 방법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시행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월2회)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사회통합이수제운영					
국비	265	88	265	0	0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교육만족도	80.9%	78.7%	75%	매우만족+만족/ 전체응답자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참여자 만족도 (%)				

□ 기대효과

-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 조성에 기여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업 지속 운영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황선주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144
------	--------------	-----	---------	------	--------------

## □ 과제개요

- 체류외국인은 언어·문화적 차이와 국내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범죄노출 위험이 크고 신고 및 피해회복 측면에도 어려움을 겪음
  - 외국인들이 쉽게 노출되는 범죄 유형에 대해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방법 등을 교육해 국내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 법무부·여가부·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결혼이주여성·근로이주여성·유학생 등 체류외국인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육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체류외국인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해 안전한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
  - 유관기관 및 대학교와 협업\*, 외국인 교육프로그램에 경찰관이 직접 출강하거나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범죄예방교육 추진
    - \* '21년 법무부·여가부·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체류외국인 40,153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특히 비대면 방식의 범죄예방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해 SNS상 이주여성 커뮤니티 등에 적극 배포

## □ 2022년도 시행계획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으로 체류외국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

구 분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내용
결혼이주자	기초질서 및 안전교육, 가정폭력·성폭력 대응방안 등
외국인 근로자	기초질서 및 안전교육, 성범죄 예방, 근로법 등
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어, 성범죄·학교폭력(피해) 예방법 등

- 체류외국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유관부처와 지속 협업해 내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범죄예방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

\*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여가부(결혼이주여성), 고용노동부(취업교육 프로그램) 등

-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면교육과 더불어 SNS·라디오 방송·문자상담·홍보 배너 게시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범죄예방교육 개발 및 시행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외사경찰활동	138	138	138	0	0
- 체류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138	138	138	0	0

○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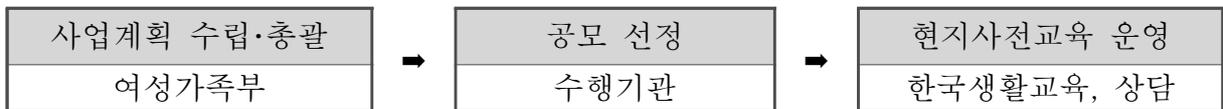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다문화치안활동	0.40	0.41	0.42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DB
○ 성과목표치 산식 : [∑활동별(가중치×수혜자수) / 시도 경찰청 체류외국인×100]/12개월				

담당부서	경찰청 외사기획정보과	담당자	석예진 경장	전화번호	02)3150-1639
------	----------------	-----	--------	------	--------------

## 1-4-4-③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활동 확대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정착 지원
- (주요내용) 결혼이민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 □ 그간의 추진실적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및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제공(베트남, 필리핀, 태국)

### □ 2022년도 시행계획

- 중점 추진사항
  - 젠더폭력 예방 등 교육 내용에 대한 성인지 강화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강의 및 참여자 확대 추진
- 추진 내용 및 방법
  - 현지사전교육 온라인 콘텐츠 마련(~'22년)
  - 참여자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체계 마련(~'22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교육내용 젠더폭력 예방 포함 사업계획 수립 - 온라인 교육체계(젠더폭력 예방 포함) 마련을 위한 수요파악 등
2/4분기	- 현지사전 교육 상시교육 추진 및 분기별 성과 점검 - 온라인 교육체계 마련 계획 수립
3/4분기	- 현지사전 교육 상시교육 추진 및 분기별 성과 점검
4/4분기	- 현지사전 교육 상시교육 성과평가 등 추진 - 온라인 교육시범 운영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국비 (100%)	375	375	375	0	0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온라인 교육콘텐츠 마련				
○ 성과목표치 산식 :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교육 (젠더폭력 포함)을 통한 참여율 증가	-	신규	교육기반 마련	보고서 및 증빙

기대효과

○ 온라인 교육기반 마련으로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참여율 제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온라인 교육체계 마련에 따른 교육콘텐츠 강화

○ 현지사전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현지국과의 협력 추진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오민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70
------	-----------------	-----	---------	------	--------------

## □ 과제개요

- 외국인 유흥업소에서 예술흥행(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 알선,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관계법령 위반 여부 확인
    - \* 여성가족부(주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체부, 영등위 및 지자체 참여
  - 민관 협력으로 외국인 운영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태 파악

## □ 그간의 추진실적

- '14년 ~ '19년까지 매년 2회(상·하반기)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함
  - '20년도, '21년도 코로나19로 미 실시

## □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주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 기관 합동 점검 참여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	0회	2회	공문

## □ 2022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 주관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계 기관 합동 점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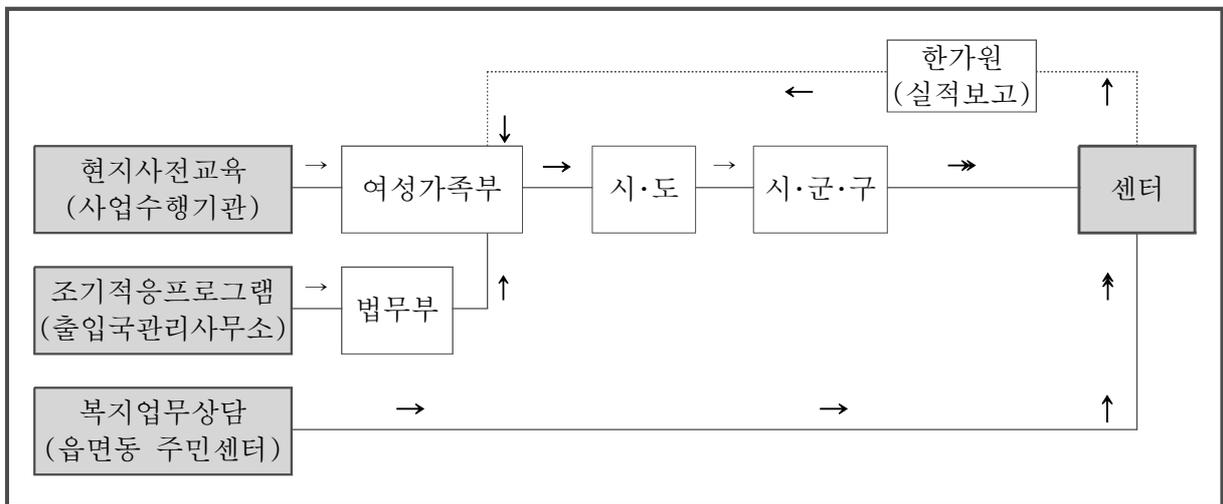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자	박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7
------	--------------	-----	---------	------	--------------

## 1-4-5-①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정보 접근성 확대

### □ 과제개요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수료자 대상 입국 전·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한국어교육, 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 확대
- 폭력피해 발생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 지원

<개인정보제공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체계>



### □ 그간의 추진실적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개인정보 제공(국적, 연락처, 거주예정지) 동의를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국 전 연계

\* '21년 기준 758명 연계 추진

### □ 2022년도 시행계획

- 중점 추진사항
  - 결혼이민예정자 교육 대상자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
  - 정보연계 대상자 대상 필요시 추가 교육(온라인) 진행
- 추진 내용 및 방법
  - 결혼이민예정자 정보연계 동의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연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추진(상시)
2/4분기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추진(상시)
3/4분기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추진(상시)
4/4분기	- 정보연계 포함 사업 성과평가 등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정보연계 동의율	-	신규	80%	'20~'21년 정보제공 동의율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대상자 대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연계 동의율				

기대효과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공적인프라 접근성 확대를 통한 폭력예방 강화
- 결혼이민자 한국정착 후 고충 상담 및 정보교류 확대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 추진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오민영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70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및 제6조(상담소의 업무)
- (사업내용)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해 상담지원, 의료·통·번역 지원, 고용·체류에 관한 상담,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 연계 지원 등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이주여성 상담소(9개소)를 운영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서비스 등 제공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게 상담·보호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추진 내용
  - 국비지원 상담소를 통해 상담지원, 의료·통·번역 지원, 고용·체류에 관한 상담, 보호시설(쉼터, 그룹홈 등) 연계 서비스 지원

○ 추진 방법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 이주여성 상담소 현장점검(5~8월)
3/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4/4분기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6,410	6,297	7,548	1,138	17,7
국비	6,410	6,297	7,548	1,138	17,7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이주여성상담소 상담 및 피해자 지원건수	14,315	33,161	34,000	실적보고서

□ 기대효과

-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을 통해 외국인 여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9개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최윤미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	----------------	-----	--------------------	------	------------------------------

□ 과제개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외국인노동자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송출국가 언어로 된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운영**

□ 그간의 추진실적

- '18.4.11, 여성 외국인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마련**  
\* 외국인노동자도 우리부 홈페이지의 '익명신고센터'를 활용하도록 외국어 버전 운영
- '18.10.15,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영어 외 동티모르 등 16개국\* 외국어 버전 제공**  
\* 영어,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크, 방글라데시아, 중국, 스리랑카, 몽골, 태국, 필리핀, 미얀마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홍보 강화
  -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전담 상담서비스 운영 활성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입국 후 취업교육시 직장내 성희롱 교육 및 익명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교육에 포함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시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안내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에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홍보
  - 폭행 및 성희롱 피해 외국인노동자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심층상담실 운영 및 전담자 지정(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개소)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2/4분기	-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3/4분기	-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4/4분기	- 신규 및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시 교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명)	3,593	4,593	도입인원 전체	도입인원
○ 성과목표치 산식 : 입국인원				

\* 코로나19로 '20년 3월 이후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 중단 및 소규모 입국

기대효과

-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
  - 외국인노동자가 성희롱 등 성폭력에 대한 사전 대처방법, 사후 신고절차 등에 대한 인지하여 신속히 구제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성희롱 교육을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김형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148
------	------------------	-----	---------	------	--------------

## □ 과제개요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운영
  - 관내 체류외국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상담 및 체류지원 실시
    - \* 필요시 유관기관 등에 피해구제 지원, 행정서비스를 위한 협조 및 연계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전국 1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운영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전국 1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재)지정, 운영
- 추진 내용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관내 체류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상담 및 체류 지원 실시
  - 전국 1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재)지정, 운영
- 추진 방법
  -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전국 1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으로 별도 지정
    -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6급 또는 7급 출입국관리공무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2년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재)지정
2/4분기	- 전국1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 제도 상시 운영
3/4분기	- 전국1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 제도 상시 운영
4/4분기	- 전국1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 제도 상시 운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단위 : 명>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18	18	지정현황 통계 등

□ 기대효과

- 전국 1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인권고충상담관 및 상담창구를 별도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국내 체류외국인의 권익보호 및 안정적 체류 지원 효과 기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인권·고충상담관 지정, 운영
  - 관내 체류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체류 지원 활성화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최은숙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149
------	--------------	-----	---------	------	--------------

## □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도입

## ○ 배경

-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인종, 피부색 등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편견, 혐오증, 폭력 등 차별현상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방지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제도 마련 및 구성

- (구성) 지방 청(사무소)별 권익옴부즈만\* 지정
  - \* 사회통합위원, NGO, 인권변호사 등 민간 옴부즈만 위촉
- (업무) ①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사례 수집, ② 고충 및 인권침해 상담, ③ 외국인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
- (권한) 인권침해 및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청(사무소)별로 지정된 인권·고충상담관을 통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위원회」에 상정

## □ 그간의 추진실적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세부계획(안) 마련('18.11월)
- 지방 청(사무소) 공문 시달('18.12월)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추가 공문 시달('19.3월)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위촉 완료('19.3~4월)
  - 16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5인 이내로 구성 : 총 67명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위촉 완료('21.4~8월)
  - 16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5인 이내로 구성 : 총 68명

□ 2022년도 시행계획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운영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운영	16	16	16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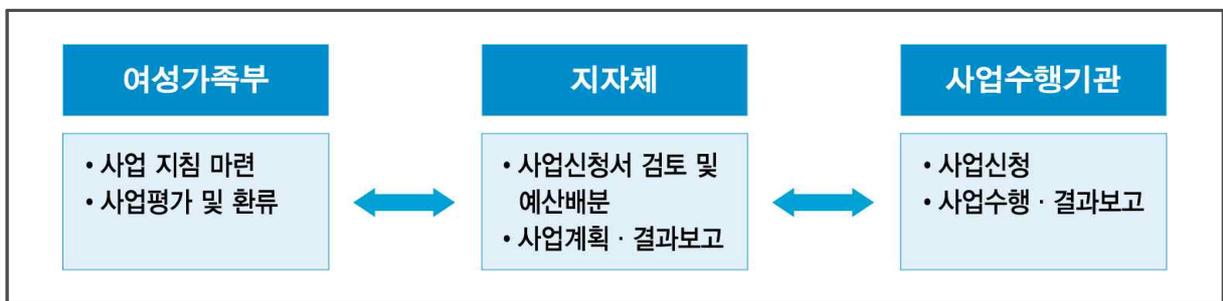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외국인 권익옴부즈만 지정·운영

담당부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담당자	박래식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4107
------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에 대한 모국어 상담, 일시보호,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폭력 피해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 (추진체계)



##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28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일시보호, 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의료·법률지원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4개소, 서울2, 인천1, 충남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1개소, 서울)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직업기술교육 훈련, 취업알선, 동반자녀 보육지원 등
-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500만원)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10개소)
  -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제공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 및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 종합형 서비스 지원

### ○ 추진 내용

- (보호시설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확대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만족도 조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내실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지원 내실화를 위한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개선 추진  
\* 하나센터, 지자체, 젠더폭력 지원 시설 등과의 연계 강화

### ○ 추진 방법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예산 교부(매분기별)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 폭력피해 이주여성 관련 지원 시설 현장점검(5~8월)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지원(연중)
3/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지원(연중)
4/4분기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연중)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6,410	6,297	7,548	1,138	17,7
국비	6,410	6,297	7,548	1,138	17,7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상담소 지원 실적(건)	79,985	97,766	85,20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시설 이용자 회복·치료를 위한 지원건수

□ 기대효과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외국인 여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양현순 서기관 최윤미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4 02)2100-6428
------	----------------	-----	--------------------	------	------------------------------

## 1-4-5-④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 □ 과제개요

-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 □ 그간의 추진실적

- '18.5월 긴급 사업장 변경 대상 성폭행 범위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실시 및 법률자문 등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 안산해바라기센터 관계자 등
- '19.2.1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사업장 변경 고시 개정)
- '21.4.1 긴급 사업장 변경 대상 및 가해자 범위 확대
  - \* 가해자의 범위 확대 : 사용자 →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 2021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긴급 사업장 변경신청 시 신속히 검토하여 피해 노동자 적극보호
- 추진 내용 및 방법
  - 사용자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사업장 변경신청시 즉시 사실관계 확인 후 신속히 사업장 변경 조치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2/4분기	-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3/4분기	-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4/4분기	- 사업장변경 신청시 즉시 조치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긴급사업장변경 조치(%)	100(1건) (3일 이내 조치 완료)	100(2건) (3일 이내 조치 완료)	100 (3일 이내 조치 완료)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우선 긴급 사업장 변경 조치 여부
○ 성과목표치 산식 : 3일 이내 조치				

기대효과

○ 성폭행을 당한 외국인노동자 신속한 구제

- 성폭행을 당한 외국인노동자를 가해자와 신속히 분리 보호하고 신속히 사업장  
변경 조치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폭행을 사유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요청시 조속히 조사하여 사업장  
변경 조치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담당자	김형숙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148
------	------------------	-----	---------	------	--------------

## □ 과제개요

-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이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체류자격부여 및 체류기간연장 허용

## □ 그간의 추진실적

- ('04. 5. 7.)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이 구제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불체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
- ('07. 5. 7.)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에 대하여 특정활동(E-7)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 ('13. 4. 19.) 기타(G-1) 체류자격 대상을 종합하여야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명문화함\*

\*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된 자

- ('14. 12. 30.)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 신설\*

\*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18. 1. 17.)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신속하게 기타(G-1)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의 결정 절차 삭제\*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19. 4. 15.)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단순노무 업종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타(G-1) 지침 개정

<연도별 G-1(범죄피해자) 체류자격자 체류 현황(매년 12월말 기준)>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0
체류허가(명)	20	28	35	36	46	57	56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현행 법령과 지침 유지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 지표 : 해당사항 없음(사업 대상 아님)

담당부서	법무부	담당자	박창두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9
------	-----	-----	---------	------	--------------

## 2-1-1-①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 마련·보완
- 여성폭력 사건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 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범죄 단계별 대응모델」 전국 시행('19. 6월) 및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을 반영한 「가정폭력 수사 매뉴얼」 제작·배포('21.3월)
  - 부처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18. 11月)의 일환으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유형별·단계별 표준 대응방안 수립
  - △시범운영(서울 노원·마포·혜화, '18.12月~) △권역별 순회교육 △경찰서 전수교육 등 통해 현장의견 수렴, 「단계별 대응모델」 최종안 전국 시행

< 단계별 대응모델 주요 내용 >	
① 초동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혐의와 객관적 위험성 토대로 적극적 사건처리·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 신고이력 보관기간 1→3년 확대, 재발우려가정 관리 강화</li> <li>• 피해자 응급조치, 전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 철저</li> <li>• 긴급임시조치 활성화를 위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기준 개선</li> </ul>
② 엄정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밀한 수사로 상습성 규명, 입건 및 구속여부 검토 철저</li> <li>• 임시조치, 피해자(임시)보호명령 적극 추진 등</li> <li>• 피해자가 처벌 불원할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li> </ul>
③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상담 등 경찰·지자체 중심 다기관 협업체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후관리 강화</li> <li>• 실효성 있는 현장 법집행력 확보를 위한 法 개정 추진</li> </ul>

- 수사·예방활동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강화
  - 업무량 증가에 따라 △여성청소년수사팀('15년 2,653명 → '21년 3,910명)  
△학대예방경찰관('13년 138명 → '21년 669명) 정원 지속 확대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14개)
    - ※ △초 경찰관 대상 성평등 감수성 향상교육 확대(年 1회 이상) △최신 법률·사례 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과정 평가·모니터링 등 실시

□ 2022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신속한 피해자 보호 △현장 조사권 강화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방지법 개정 추진

- (가정폭력처벌법)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구조 개선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죄 신설 등
- (가정폭력방지법) △현장조사 거부·기피죄 신설 △기관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등

- 가정폭력 신고출동 및 예방활동 등 현장경찰관의 업무 처리 時 현행 매뉴얼·지침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수시 정비
- 자치경찰제에 맞추어 △논문 등 연구자료 △해외사례 △시·도별 우수시책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정책 수립 참고 자료집 작성·제공

○ APO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장비 등 인프라 확충

- 업무량이 과중한 1급지 경찰서당 APO 1명 증원('23년 소요정원 151명) 추진
- 원활한 현장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APO 업무추진비 △APO 관용휴대폰·차량 신규 확보 추진
- 내·외부 교육기관과 협업, APO 직무특성에 맞는 전문 위탁교육 신설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관련 현행 매뉴얼·지침 개선 필요사항 발굴·정비
2/4분기	- 관계부처 협업, APO 인력·예산·장비 등 인프라 확보 추진
3/4분기	- 관계부처 협업, 가정폭력처벌·방지법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추진
4/4분기	- 가정폭력 정책 참고자료집 작성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 성과목표치 산식 : 가정폭력 사건대응점수 (검거·보호조치) / 가정폭력 신고건수×100	41.8%	44.6	46.2%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박초이 경장	전화번호	02)3150-0812
------	----------------	-----	--------	------	--------------

## 2-1-1-② 가정폭력 재범 방지 조치 강화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반복신고 사건 적극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방안(△재발우려 가정 사후관리 강화 △객관 지표 개발 등) 마련·시행

### □ 그간의 추진실적

- 「신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도입('20. 9월), 개선 내용을 통해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보다 세부적인 긴급임시조치 및 사건처리 판단 기준 제시
  - 기존 위험성 조사표의 신뢰도·타당도 검증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19. 6~10月), 현장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쉽고 구체적으로 문항 개선
    - \* △(연구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등 △(분석 자료) '19. 6월 한 달간 가정폭력 112신고 출동 시 실제 작성된 위험성 조사표 1,252건 등 활용
  - 선행연구 및 여성단체·현장경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신규 위험성 조사표 개발
    - ※ 8개 지방청(9개서) 대상 시범운영('20.3월~4월) 후, 전국 시행('20.9월)
  - 전년동기 대비 △검거인원 23% ↑ △긴급임시조치 15% ↑ 등 지표 개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21.1.21. 시행),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현장대응 기반 마련

#### < 주요 개정내용 >

- (정의)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등 포함
- (응급조치) 응급조치 조항에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추가
- (임시조치) △주거지·직장 등 장소뿐 아니라 사람(피해자·가정구성원)에 대해서도 100m 內 접근금지 가능 △판사 직권으로 '상담위탁'도 가능
- (임시조치 불이행) 기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상향, 위반 시 처벌 강화

□ 2022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 재발우려지수 개발
  - 체계적인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선정·관리가 가능하도록 재발우려지수 개발, APO시스템 탑재 및 시·도자치경찰위에 활용 가이드라인 제공

• 가정폭력 발생 가정별 △신고 건수·주기 △사건처리 건수·결과 △임시조치 결정 여부 △가·피해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발 위험성을 수치화

- 가정폭력 반복신고 사안에 대한 세심·엄정한 대응으로 재범 방지
  - 반복신고 사안에 대해 현장출동부터 수사종결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병 검토 등 중간관리자 수사지휘가 가능토록 3중 보고·점검체계 마련

[3중 보고·점검체계 주요 내용]

<1重> 3회 이상 반복신고에 대한 '112신고현황', 여청·형사 '일일사건보고' 표준서식 활용, 기능별 취합본 서장 全數 보고·결재 및 수사 지휘

<2重> 전일 근무 팀장은 3회 이상 반복신고건에 대해 '112신고·수사이력, 범죄경력' 등을 반드시 검토해 일일사건보고 기재·보고

<3重> 시도청 해당 기능별로 각 경찰서별·일자별 사건보고서 취합(3년 보관), 중요사건 발생 후 조치사항 확인 및 사후점검 등 체계적 관리

- APO시스템에 별도 메뉴를 개발하여 가정 내 주요 가정폭력 상습·반복신고자에 대한 현황 및 경찰조치 관련 데이터 축적, 재범 방지에 활용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APO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계획 수립
2/4분기	- 가정폭력 재발우려지수 개발 관련 연구용역 진행
3/4분기	- 가정폭력 재발우려지수 산출 결과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4/4분기	- 3중 보고·점검체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 성과목표치 산식 : 가정폭력 사건대응점수 (검거·보호조치) / 가정폭력 신고건수×100	41.8%	44.6	46.2%	수기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박초이 경장	전화번호	02)3150-0812
------	----------------	-----	--------	------	--------------

## □ 과제개요

-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톱킹 및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피의자 엄정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로 국민 불안해소 및 경찰 신뢰도 제고
- 데이트폭력 근절 TF 및 스톱킹 대응 TF 구성·운영 등 체계적 대응
  - \* 뽁 여성청소년과장을 중심으로 관련기능 연계, 총괄적·유기적 대응 및 역할조정(수사, 신변 보호 등)

## □ 그간의 추진실적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21.4)
  - 안전한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스톱킹범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법 시행 前 스톱킹범죄 대응 강화방안」 수립·시행('21.5)
  - 신고·현장조치·수사·신변보호 등 단계별 지침을 세밀하게 정비하여 법 시행까지의 공백없는 스톱킹행위자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
    - \* △ 행위유형별 적용 법규 명확화 △ 기능별 담당 업무 세분화 △ 스톱킹 대응 TF 등
- 스톱킹처벌법 시행(10.21.)에 따른 경찰 단계 대응시스템 구축
  - (현장매뉴얼) 법 제정 후속조치 TF를 구성, 초동조치-수사-피해자보호 순 과정을 담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21.9)
  - (업무시스템) 과거 신고이력과 사건정보 관리·활용을 위한 APO시스템 고도화
    - \* △ 112신고,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사건 일괄 관리 △ (긴급)응급·잠정조치 시 112시스템 현출
  - (전담인력) 스톱킹(데이트폭력) 치안수요 다수 관서에 전담인력 시범운영('21. 9, 64명)
    - \* △ 관서 단위 스톱킹 대책 총괄 △ 피해자 보호·지원 △ 기관 협업 △ 교육·홍보 등 역할 수행
  - (전문성 제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및 현장교육
    - \* 스톱킹대응 집중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순 기능 현장교육('21. 9~10월, 18개청)

- (예방홍보) 관계기관·민간 협업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전개

○ 데이트폭력 전담수사체제 구축 등 대응 강화

- (전담수사체제 정비)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형사·여청·청문 등 기능간 합동 TF 재정비('21.2월) → 전국 258개署 4,045명 운영

< TF팀 구성 > 형사과장(팀장), 지원반, 상담전문반(여경위주), 수사전담반(형사·여청), 피해자보호반(경제·법률·심리지원, 사후모니터링)

- (현장대응 강화) 데이트폭력 신고접수 즉시 현장 출동하여 가해자·피해자 분리, 가해자 서면경고 및 피해자 보호제도 안내서 배부

- 최초 단순 폭행 등으로 출동한 사건이라도 처리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여부 확인 및 데이트폭력 코드로 종결(지역경찰·112상황실)
- △흉기소지 △중대피해 △재범·상습범 △112긴급신변보호 등록 대상자 신고 등 주요 데이트폭력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관리

- (엄정수사) 사건내용과 폭력성(신고이력·전과 등), 피해자 위해우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더라도 엄정조치
- (워크숍) TF팀 수사관 대상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교육('19.6.19. 272명 참석 / '20년, '21년 코로나로 화상회의 대체)

□ 2022년도 시행계획

○ 스토킹 대응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로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현장의 법집행력 확보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및 연장·변경 사실을 경찰에도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개정, 신속·정확한 공유를 통한 현장조치의 공백 방지

○ 스토킹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 (인력확충) 시범배치·운영 중인 스토킹담당경찰관(64명)의 정원반영 및 1급지 경찰서(150개서)까지 대상 확대배치 추진
- (교육) 가·피해자의 특성 이해와 효과적인 상담·조사 등을 위한 범죄·상담 심리 중심의 전문기관 위탁교육 신설 추진

- 피해자상담·범죄심리학 인프라를 갖춘 대학(우석·경기·한림대 등)과 협의,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 교육계획 수립
  - △스토커의 특성(행동·심리)과 사회환경적 요인 이해, 범죄 예방·수사전략 △피해자 특징, 피해자 보호와 치유·회복 전략 △스토킹 상담·심리치료 사례실습 등

○ 스토킹 대응체계 고도화

- (재발위험 판단기준 마련) 스토킹의 재발위험성에 대한 실효적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긴급응급·잠정조치’ 판단조사표 개선
  - ※ 스토킹 유형(애정형, 망상형, 가학형 등) 및 행위자위험성에 따른 보호조치 수준 판단
- (업무지침 보완) 법원의 판례·결정에 따라 업무지침을 보완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지속 환류하여 대응체계의 개선·고도화 추진
  - ※ △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과태료 관리 지침 보완 △ 응급조치보고서 모바일 탑재 등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스토킹신고 정보 연계 관련 APO시스템 고도화	-	완료	-	

담당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이 결 경사	전화번호	02)3150-0903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박현철 경감		02)3150-1712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시, 이러한 고소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어 피해 진술을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문제를 발생 시킴
- 이에 피해자가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 □ 그간의 추진실적

- '18.5. 성폭력 수사매뉴얼(무고인지 시 유의사항) 개정
  -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 '18.5.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시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검토 지시
  -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있을 경우,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으로 피해 진술 어려움 등이 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 면밀 검토
- '19.12. 성폭력 수사매뉴얼(제2판) 및 성범죄 판결분석과 수사시 유의사항 등 일선청 배포
  -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수사매뉴얼' 및 여성·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피해자로 삼는 폭력과 각종 범법행위에 관하여 수사와 재판의 실무상 쟁점들을 연구하여 발간한 '성범죄 판결분석과 수사시 유의사항' 책자를 일선청 배포
- '20.2., 9.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0.6.,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0.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0. 연중.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
  - 가명조서 작성 피해자 통지 및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KICS 수사결정시스템 등 구축 중
- '20.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제17282호, 2020.11.20. 시행)으로 인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실시
- '20.11. 2020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2., 7. 여성·아동 등 전담검사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21.3.,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1.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 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21.8. 디지털성범죄 관련 우수 피해자보호 사례 전파 및 피해자보호조치 적극 활용 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우수 사례 전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검찰 핫라인 구축 및 적극 활용 지시
- '21.1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대응 TF' 구성·운영

- '21.1.~11.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시설 개선 리모델링 공사 완료 ('21.11.말 기준, 22개 검찰청 공사 완료)

- 피해자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 및 리모델링을 통해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022년도 시행계획

- 성폭력 수사매뉴얼(무고인지 시 유의사항) 이행 강화 지시(연중)
  - 무고, 명예훼손 고소사건 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 이행 강화 지시 및 지속적 점검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등 제도 활용(연중)
  -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법정 동행 등을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의료·법률 지원, 예술·심리치료 등 적극 실시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수사역량 강화(연중)
  - 저년차 검사 교육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
  - 유관기관과의 공동 포럼, 간담회 등 협업 활동 강화
- 여성폭력 전문 대응 역량강화 실질화(상·하반기)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지정 및 지정에 따른 사건처리지침 송부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해	당	없	음	
국비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명)	성폭력 : 22,849	성폭력 : 21,300 (’21.1.~’21.10.)	22,850	전국청 수기취합
○ 성과목표치 산식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인원				

□ 기대효과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등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 과제 개요

- 2차 피해 예방 교육 활성화를 통한 현장 경찰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

## □ 그간의 추진실적

##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예방교육 강화

- 2차 피해방지 인식을 현장에 체질화하고 기능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피해 전문강사 인력풀’ 양성(53명) 및 분기별 워크숍 개최
  - ※ 2차 피해 예방·신고를 위한 ‘메모 큐브’ 제작, 현장 배부(1,200개)
- △직장교육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 등 활용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경찰관 대상 ‘2차 피해 예방 정책 진단 및 내실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21.6월, 1,477명), 현장 인식 및 추진정책 진단·분석으로 정책 방향 설정

## ○ 형사절차 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정비

- 피해자 조사 시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KICS 출력) 제공 및 성폭력 피해자 안내 동영상(유튜브) 시청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권리고지
  - ※ 가명조서 작성, 국선변호사 선임 안내,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녹화 등
- 성폭력 발생 시 관서별 여청과장 주관 ‘기능합동 모니터링 회의\*’를 통해 쏘 과정(신고-수사-지원)을 점검,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실시
  - \* ’21. 3월 「성폭력 사건 기능합동 모니터링 회의 운영 개선계획」 수립·공유, △회의 주기 △모니터링 기준 △회의 방식 △권장 기준 등 제시
- 관서별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재정비 실시(’21.3월),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협업 네트워크 강화
  - ※ 성폭력상담소·청소년쉼터 등 전문기관 연락망·위치 등 수시 확인, 점검

□ 2022년도 시행계획

○ 성폭력 피해자 대상 정보제공 방식 고도화·다양화

- 경찰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표준양식 마련 및 동영상·점자·외국어 등 맞춤형 안내서 제작 등 콘텐츠 다양화
- 안내서(서면) 제공 외 KICS 등 시스템을 활용한 문자 발송 등 안내방식 다양화 추진

※ 차세대 KICS 시스템 사업 반영 등 중장기 추진 예정

○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도입, 피해신고 및 지원기관 연계 활성화 추진

- AI 챗봇 기술 도입,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합한 상담·신고 지원서비스 제공

- △ 신고 관련 정보 △ 위기대응 정보 △ 신고 지원 △ 유사판례 △ 지원기관 안내
- △ 고소장(피해자가 입력한 내용을 고소장 형식으로 제공) △ 공소시효 안내 등

- 경찰청·경찰서 홈페이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 피해자 접근성 제고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국선번호인 선임 연계(건)	취합 중 ※ '20년 6,143	6,773	'20년 실적 대비 매년 5% 증가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송수진 경감	전화번호	02)3150-0832
------	----------------	-----	--------	------	--------------

### □ 과제개요

- 헌법재판소가 '21.12.23.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증거능력 특례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 결정
  -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방어권 제한 중대하다는 이유
- 위헌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입법 마련 필요

### □ 2022년도 시행계획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및 활동('22.1.~2.)
  -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에서 대안입법 마련을 위한 회의 진행
-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연중)
  - 유관기관 및 변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 수렴 및 개정안 마련, 연내 입법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성과지표명 :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 관련 개정		법률 개정	검토 자료, 법률 개정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 □ 기대효과

- 형사절차 상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정아 검사	전화번호	02)2110-3564
------	--------------	-----	--------	------	--------------

## □ 과제개요

### ○ 사업 목적

- 피해사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조력 및 법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참여권 및 진술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여 2차 피해 방지 도모

### ○ 추진 체계

- 피해자 국선변호사 : 법무부(예산편성·배정, 업무지침 시달, 국선변호사 교육)
  - 각급 검찰청(비전담변호사 수당 예산 집행, 국선변호사 지정·보고)
  - 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예산 집행, 국선변호사 교육)
- 진술조력인 : 법무부(진술조력인 양성, 자격·명부 관리, 진술조력인 교육)
  - 경찰, 검찰, 법원 각 기관(진술조력인 선정 및 활용)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상근 진술조력인 운영, 예산 집행)

### ○ 주요 내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수기준 개정, 평가제도 도입 등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 노력
- 진술조력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전국 권역별 해바라기센터 10개소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활성화

- ('20.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법률지원 조치
  - \* 형사절차 법률지원 60건,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 개명·주민등록변경신청 등 민사적 보호조치 5건 등 지원

- ('20. 4.) 국선전담변호사 2명 확대, 배치(전국 21명 → 23명, 고양, 부산)
- ('20. 11.) 지원대상 확대(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21. 4.)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시행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
- ('21. 6.) 지원대상 확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장애인 지원)
  - \*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 ('21. 7. ~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21. 10.)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개정, 시행
  - \* 절차별 피해자 조력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지정, 기본보수 지급
- ('21. 8. ~ 1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 강화, 실시
  - \* 기존 회차당 1일 5과목 8시간 → 2일 8과목 12시간 상향,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 ○ 진술조력인 지원 활성화

- ('20. 3) 상근 진술조력인 전국 배치 확대(총 16명, 경기해바라기센터)
- ('20.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안내
  -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관련, 수사 초기 죄명에 무관하게 진술조력인 적극 지원 안내
- ('20. 6. ~ 11.)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선발 및 교육 실시(14명)
- ('20. 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 확대
  -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도 지원
- ('21. 3.) 상근 진술조력인 지역별 추가 배치(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1. 6. ~ 11.)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선발 및 교육 실시(15명)
- ('21. 10. ~ 11.)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실시
- ('21. 1. ~ 12.) 매월 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회의 실시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전국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및 미배치 지역 우선 배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정, 배포

- 미 배치 권역별 상근 진술조력인 추가배치 확대
- 지속적인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 추진 내용

- 신규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하고, 지역별 지원건수 및 미배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치
  - \* '22년 연초 12명 증원, 신규 채용 예정
- 수사·재판절차별 피해자 조력내용·방법, 우수사례 및 노하우, 개정 법률 업데이트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매뉴얼 개정 및 실질화
-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진술조력인을 전국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 효율성 도모
- 권역별 미배치 지역 및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양성 인원 선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국선전담변호사 신규 채용 및 배치 -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 및 배치 - 배치지역 현장점검
2/4분기	-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매뉴얼 개정, 배포 - 진술조력인 신규모집 공고 및 교육대상자 선발
3/4분기	-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교육 실시(기본, 기본실무, 심층실무)
4/4분기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자 자격 부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6,869	6,869	9,187	2,318	33.7
국비	6,869	6,869	9,187	2,318	33.7
•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6,869	6,869	9,187	2,318	33.7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06	1,106	1,358	252	22.8
국비	1,106	1,106	1,358	252	22.8
•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06	1,106	1,358	252	22.8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진술)조력 지원건수				최근 3개년 평균 지원건수
○ 성과목표치 산식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건수 및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합산	28,691건	35,559건	31,446건	26,690건 대비 연평균 증가율 8% 반영, 산정

□ 기대효과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해소
  - 국선전담변호사·상근 진술조력인 확대 및 배치로 양질의 법률조력 서비스 제공 가능
  - 미배치 지역에 국선전담변호사·상근 진술조력인 우선 배치하여 지역별 불균형 해소 기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진술조력인 확대 등 인력 증원 추진
  - '22년 국선전담변호사 확대에 이어 전담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증원 및 배치 추진
    - \* 비전담 국선변호사의 비중을 줄이고, 국선전담변호사 비중 상향 목표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조병기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852
------	----------------	-----	---------	------	--------------

### □ 과제개요

- 수사 시 피해자 권리고지·지원제도 상세 안내 및 현장매뉴얼·지침 등에 따라 불법촬영기기 및 저장매체 등 영상물 압수처리

###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 상담 시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수사·삭제·심리·법률·경제)를 종합한 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 지원 강화('20.8월)

#### <안내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수사 지원	▶ 신고 안내 ▶ 여경 조사 ▶ 가명조서 ▶ 신뢰관계인 등
삭제 지원	▶ 피해 촬영물 삭제·차단 ▶ 재유포 등 사후 모니터링
심리적 지원	▶ 신변보호 ▶ 상담·심리치료 ▶ 주민번호 변경지원
법률적 지원	▶ 무료 법률상담 ▶ 채증자료 작성 ▶ 배상명령 신청 등
경제적 지원	▶ 긴급생계비·학자금 등 지원 ▶ 이전비 지원 ▶ 쉼터 지원

-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및 압수물 처리 절차 반영, 매뉴얼 개정('21. 11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클라우드 저장매체에서 파일을 복제해 압수와 동시에 성착취물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매뉴얼 지침 개선, 반복 교육 추진
- 피해자 동의 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물 등록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 피해영상물 지속적 삭제 지원 추진
- 성과지표

####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 통계>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불법촬영물추적시스템 등록 건수	7,000건	7,200건	시스템 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담당자	정병선 경감	전화번호	02)3150-1159
------	-----------------	-----	--------	------	--------------

### □ 과제개요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력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 그간의 추진실적

- '2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정·시행
  - 개정 「성폭력방지법」(’21.1.12 시행)에 따라 금지되는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22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추진 내용 및 방법
  -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22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2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2/4분기	- '22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3/4분기	- '22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4/4분기	- '22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시행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수립·시행	수립·시행	수립·시행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여부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실효성 확보 및 체계 구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이희연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2
------	----------------	-----	---------	------	--------------

## □ 과제개요

## ○ 주요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포함

## □ 그간의 추진실적

##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기 만료 폐기)

\* 김삼화의원 발의('18.6.29.)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피해자·신고자 이외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 제출방식(의원발의안 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2/4분기	
3/4분기	-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4/4분기	- 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조력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	개정안 국회제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록

□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및 처리가 공정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전제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 근로감독관 교육 등 시행 준비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박원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7446
------	------------------	-----	---------	------	--------------

## □ 과제개요

- 신고현장 및 수사·사후관리 과정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 안전조치’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 피해자의 관련 제도 활용 제고

## □ 그간의 추진실적

- 지역별 다기관 협업체계\* 구축 완료 및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확대

### < \* 지역별 가정폭력 협업체계 유형 >

- ① 지자체 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마련, 사회복지공무원·경찰(APO)·상담원이 상시 합동 근무하는 협업체계
  - ➔ 기존 서울(전역), 경기남부(화성) → 경기남부 2개소 추가(부천·하남)
- ② 경찰-전문기관(1366·가정폭력상담소 등) 간 MOU를 통해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복지지원은 지자체에 연계하는 협업체계
- ③ 재발우려가정 사후 모니터링 시 경찰·지자체·전문기관 합동방문

- 가정폭력 대응 3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제공 체계 구축 완료

- (신고출동) 모든 가정폭력 신고 출동 시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 등 보호·지원 제도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피해자에게 배부(문자 전송)
- (수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조사 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KICS상 자동 연계·출력하여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배부·안내 중
- (사건관리) APO가 전일 접수된 모든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콜백을 실시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재차 안내

- 피해자 권리 지원 안내서 및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13개어로 번역, 다문화 가정폭력 신고접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버전 제작·배포

## □ 2022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대응 3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정보 맞춤형 제공
  - 피해유형별·대상별로 다양한 정보제공 콘텐츠를 제작·정비하고 KICS 등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 발송 등 안내방식 고도화

- ※ △안내서 표준양식 마련 등 일제 정비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안내서(동영상·점자·외국어) 제작 △관공서 민원실 리플릿 비치 △시스템 활용, 문자 발송

- 피해자 이해를 높이고 내실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기능별 팀장 대상 현장교육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활성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제공 체계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지역경찰·여청수사·APO 대상 현장 교육·간담회 등 실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우수·미흡사례 분석 등 컨설팅 실시
  - 내실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전문기관과의 협력 확대·강화
    - 경찰청-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 정책협의체(年 6회 개최/초·시·도경 참여) 활용,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도별 우수사례\* 공유·확산
- \* △경기도 가정·성폭력 공동대응팀 △제주도 사회적 약자 공동대응 협의체 등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정보제공 콘텐츠 정비, 신규 제작 수요 확인
2/4분기	- 상반기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현장컨설팅·교육 실시
3/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정보제공 콘텐츠 제공방안 고도화
4/4분기	- 하반기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현장컨설팅·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41.8%	44.6	46.2%	수기통계
○ 성과목표치 산식 : 가정폭력 사건대응 접수(검거·보호조치) / 가정폭력 신고 건수×100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박초이 경장	전화번호	02)3150-0812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 가정폭력 방지대책('18.11.27.)에 일환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제작·배포
  -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 포함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제작·배포('20.2월)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및 비밀엄수 의무, 주민등록표 열람·교부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등
    -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경찰 등 책자 배포(4,000개 기관)
-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2차 피해 사례 및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종사자 보수교육 진행
  - \*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내 직무통합 부분(개인정보보호 이해도 향상과정)

□ 2022년도 시행계획 : 정상추진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매뉴얼 개발 및 여성긴급 전화 1366 상담매뉴얼 개편
  - 개인정보 보호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2차피해 예방 정보제공 및 피해자상담 서비스 질 제고 예정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업으로 진행예정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제작·배포	1종 (3,865기관, 8,000부 배포)	사업완료		안내서 제작·배포 계획 및 실적
○ 가정폭력 예방 관련 콘텐츠 개발	1종			예산 및 콘텐츠 개발 계획
○ 피해자 지원 상담 매뉴얼 개편 및 개발(상담소 및 1366)			2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매뉴얼 개발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업완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박윤희 주무관 김초혜 주무관	전화번호	2100-6426 2100-6423
------	----------------	-----	--------------------	------	------------------------

### □ 과제개요

- 「성매매처벌법」 상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서 처벌하지 아니하고 보호·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도입 및 담당자 교육

###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개발 및 전국 경찰관서 배부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시도경찰청 풍속수사팀을 확대 설치하고 수사팀 내 여경을 증원하는 등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고 있는바,
  - 단속·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발견, 보호하기 위해 표준 식별모델을 도입하고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추진 내용
  -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의 현장 정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 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성매매 담당 경찰관 대상 교육 실시
  - 성매매 피해자 발견 시 법령상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등에 연계하여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성매매 피해자 식별 교육 이수	-	-	70%	교육 이수율 점검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 이수한 풍속 담당자)/(전체 풍속담당자)				

□ 기대효과

- 성매매 단속·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성매매 피해자 인지 및 보호·지원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전중현 경위	전화번호	02)3150-0827
------	----------------	-----	--------	------	--------------

## 2-2-3-② 수사 과정에서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 □ 과제개요

-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 통역서비스 제공
  - 외국인피해자에게 출입국 및 국내체류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 및 통역과 귀국비용을 지원 등

### □ 그간의 추진실적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무료법률지원 등 제공하여 귀국까지 안전하게 보호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 등에서 여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조, 법원 동행 등 법률 지원
  - '21. 6월 현재 19명의 외국인 피해여성에게 법률지원

#### 〈외국인지원시설 법률지원 현황〉

(단위 : 명/건, '21.6.30.기준)

구분	인 원 (명)	합계 (건)	현장긴급 구조	수사 의뢰	수사지원			동행 지원	소송 지원	소년보 호재판	법률지원 상담	기 타
					소계	기소	피소					
2021 상반기	19	62	-	-	6	6	-	-	35	-	-	21
2020	33	211	5	19	50	50	-	16	29	-	5	87
2019	43	155	13	6	4	4	-	20	35	·	3	74

\* 기타 : 출입국 비자 및 등록증 관련 업무, 수사기록 열람 증명 등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상담원(비상근 통역사) 배치
- 성매매업소로부터 구조, 출국 및 국내체류 등 관련 문제 상담 및 지원

#### ○ 예산 현황 : 기포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실적에 포함됨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지원, 귀국지원 등 지속 지원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정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8
------	----------------	-----	---------	------	--------------

□ 과제개요

-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이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체류자격부여 및 체류기간연장 허용

□ 그간의 추진실적

- ('04. 5. 7.)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이 구제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불체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
- ('07. 5. 7.)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특정활동(E-7)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
- ('13. 4. 19.) 기타(G-1) 체류자격 대상을 종합하여야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명문화함\*

\*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된 자

- ('14. 12. 30.)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 신설\*

\*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18. 1. 17.)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보다 신속하게 기타(G-1)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의 결정 절차 삭제\*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19. 4. 15.) 폭력피해 이주여성은 단순노무 업종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기타(G-1) 지침 개정

<연도별 G-1(범죄피해자) 체류자격자 체류 현황(매년 12월말 기준)>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0
체류허가(명)	20	28	35	36	46	57	56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현행 법령과 지침 유지
- 예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성과 지표 : 해당사항 없음(사업 대상 아님)

담당부서	법무부	담당자	박창두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4069
------	-----	-----	---------	------	--------------

### □ 과제개요

- 다누리콜센터와 경찰 간 핫라인 운영으로 가정폭력 관련 경찰 조사 시 피해자 통역 등 피해자 지원
  - 이주여성 가정폭력 발생 시 확대예방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신속한 수사 착수와 함께 통역 지원 및 상담 내용 공유 등 경찰 수사 지원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의 가정폭력 관련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 협조를 통한 상담 역량 함양 교육\* 실시
  - \* 가정폭력 상담기법, 가정폭력 사건 처리절차 등 교육

### □ 그간의 추진실적

- 다누리콜센터와 관할 경찰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연락망 공유('20.1)
  - 다누리콜센터와 전국 확대예방경찰관(가정폭력 담당) 연락망 공유
- 다누리콜센터와 경찰 간 핫라인 운영('20~'21)
  - 이주여성 가정폭력 발생 시 신속한 조사 착수, 상담 및 모니터링 등 상호 연계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담원 교육 실시('20~'21)
  - 4대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범죄의 이해와 실무,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교육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다누리콜센터-경찰 간 확대예방경찰관(APO)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공유
- 추진 내용 및 방법
  - 다누리콜센터-경찰 간 확대예방경찰관(APO) 핫라인 지속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누리콜센터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2/4분기	- 4대폭력 예방교육
3/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실무교육
4/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실무교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콜센터 종사자 교육을	100%	99%	80%	수기통계
○ 성과목표치 산식 : 콜센터 근무인원 대비 종사자 교육 참여율 산출				

기대효과

- 이주여성 가정폭력 발생 시 다누리콜센터-경찰 간 연계 체계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경찰청 협조를 통한 가정폭력 사건 처리절차, 상담기법 등 실무교육으로 상담원 가정폭력 지원 역량 강화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다누리콜센터와 학대예방경찰관 간 핫라인 운영
- 다누리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서동섭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76
------	-----------------	-----	---------	------	--------------

## □ 과제개요

- 이주 여성 성·가정폭력 등 피해자는 불법체류 신분·국적 취득 문제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 여성 피해자보다 더 큰 범죄피해에 노출
- 수사과정상 언어·문화 등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주여성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 전담 지정 △피해자 친화 조사환경 구축 등 다양한 지원방안 적극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여경 확대 배치)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20. 4월) 추진에 따라 여청수사 부서 내 여성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지속 추진
  - ※ 여청수사 기능 여성수사관 비율 : ('20년 24.2% → '21.9월 27.8% / 3.6%p↑),
- (조사환경 개선) △가·피해자 동선 분리 △여성 경찰관 호출 시스템 설치 △사무·조사 공간 분리 △통합지원공간 마련 등 피해자 중심 환경 구축
  - ※ '17~21년 111개 경찰관서 개선 완료 → '23년까지 총 258개 경찰서 추진

## □ 2022년도 시행계획

- (여경 전담조사체제 확대) 여경 비율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이주여성 피해 사건 전담 수사관을 여성 경찰관으로 지정, 피해자 심리적 안정 도모
- (AI활용 피해조사·지원 확대) AI음성인식 활용 피해조사 시스템을 총 시도청·경찰서로 확대, 사투리 등 음성인식률 지속 향상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피해 진술 신빙성, 일관성 등 기준 부합 도구 탑재

- (추진배경) 성폭력 수사에서 피해자가 곧 증거(Victim is Evidence)인 만큼 수사관의 조사 작성 부담을 없애고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위해 시스템 추진
-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에게 동 시스템 안내 후 동의 받아 수사관·피해자 문답이 AI음성 인식을 통해 자동 기록·저장·출력되는 시스템 구축
  - 축적된 텍스트·음성 활용 범죄 분석 및 聲紋(목소리의 지문)을 통한 감성 분석 등으로 성폭력 예방·대응·피해자 보호 등 정책에 활용

- (내·외부 전문가 역량 강화) 성폭력 피해 전담 조사관(해바라기센터 조사관) 교육 강화 및 진술분석전문가 부적합자 해촉 등 역량 고도화 지속 추진
- (여청수사관 교육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청수사 교육체계를 정립

<여청수사 교육 계획>

교육		주요 내용
1	민간전문가 사례회의	▶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례회의 개최, 객관적 수사 유도
2	내부전문가 양성	▶ 여청수사 전문수사관을 활용한 동료강사제 실시
3	수준별·직급별 맞춤형 교육	▶ 신규전입자·팀장 등 수준별·직급별 맞춤형 교육 ▶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 등 전문조사기법 특화교육
4	테마별 점검 등	▶ 시기·대상별 유의사항을 사전 교육, 수사과오 차단
5	현장학습	▶ 중간관리자 주도 현장학습, 수사과오 재발을 방지

- (스토킹 대응체계 확립) △ 스톱킹 이력관리 △ 매뉴얼·해석·교육자료 제작 및 담당자 교육 △ 현장점검 등 실시로 스톱킹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성과지표

성과목표(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전담 여성경찰관 지원율(%)	82.1%	83.5%	수기 통계

□ 기대효과

- 이주여성에 대한 새로운 폭력 유형(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톱킹 등 사건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	담당자	김재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2878
------	------------------	-----	--------	------	--------------

2-2-5-①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범죄예방정책국)

□ 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

\* 수사기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및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그간의 추진실적

대상기관	'20년 교육대상		'20년 교육실적	
	여성폭력 사건담당 업무 유형	인원	교육인원	교육방법
총 계		87	60	
본부	0	0	3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
소년원 또는 분원의 장,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지원의 장 등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자	85	55	법무연수원 사이버 교육 및 여성가족부 실시간 교육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시설 또는 지소의 장	"	2	2	"

□ 2022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교육대상)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총 12개 기관 사법경찰관\* 87명  
보호관찰소 13개 기관 신속수사팀 사법경찰관 66명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 (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2차 피해 방지교육 이수
- (교육내용)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 2차 피해 사례 등
- (교육방법)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활용
- (교육실적) 교육 종료 후 교육 실시 결과를 본부 주무과로 제출

□ 기타 사항

- (수용기관 특수성) 수용기관은 남녀를 분리 수용, 성별에 기반한 여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고 더불어 2차 피해 발생가능성이 낮음

담당부서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담당자	이기련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311
------	----------------	-----	---------	------	--------------

## □ 과제개요

### ○ 추진배경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

### ○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및 시행령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 여성폭력 관련 용어 정리

#### • 여성폭력 (법 제3조 제1호)

-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함

#### • 여성폭력 피해자 (법 제3조 제2호)

-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

#### • 2차 피해 (법 제3조 제3호)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 그간의 추진실적

### ○ 교육대상

- 각 교정기관별 여성폭력 사건담당자(57명) 등 업무관련자 100명
  - \* 각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또는 지소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리 중 여성폭력 사건담당자 1명 지정(2020. 4.)

### ○ 교육개요

- 교 육 명 :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교육

- 교육기간 : 연중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실시인원 : 교육대상자 전원 교육 수료

□ 2022년도 시행계획

- 교육대상
  - 각 교정기관별 여성폭력 사건담당자 전원
- 교육시간
  - 매년 1회(최소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실시간 온라인 교육)를 이용하여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 여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관련 법·제도, 성인지 감수성, 2차 피해 사례, 업무관련자 주의사항 등을 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교육 이수율(%)	100%	100%	교육이수자/ 교육대상자×100

□ 2022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 기타 사항

- 교정기관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와 여성폭력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검토
  - 교정기관은 남녀를 분리 수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별에 기반한 여성폭력 사건 발생 및 2차 피해 가능성은 희박함
  -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인원을 최소화 함

담당부서	법무부 교정기획과	담당자	한상규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364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이에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폭력 2차 피해예방 교육 시행 관련 방안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17.12.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세미나 개최
  -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원)젠더법연구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민변여성위원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젠더 대상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주제로 세미나 개최
- '18.11. 전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 검사, 수사관 워크숍
  - 성폭력범죄 2차 피해 방지 방안, 불법촬영 및 성폭력 사건 실태분석 및 논의, 카메라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 전파 등 워크숍 실시
- '19. 3., '19. 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2차 피해 방지 교육,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20. 6.,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0. 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0. 11. 2020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3.,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폭력사건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교육 등 역량 강화 도모
- '21. 11. 2021년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21. 11. 여성가족부 주최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68명 교육 이수)

□ 2022년도 시행계획

- 전국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하반기)
  - 전국 일선청에서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사이버, 시청각 등) 실시
-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연중)
  - 검찰청 특성에 맞는 자체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교육 자료 지원 및 공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전국 <u>여성폭력 사건 담당자</u> 등 교육 이수 현황(%)	90.5%	미정	90%	전국청 수기취합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 이수자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				

□ 기대효과

- 수사·공판 등 검찰사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 적극 예방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지속 실시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9.12.25.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의무화

○ 주요내용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 \* 관련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2항(2차 피해 방지)
- 2차 피해 방지 교육 교재 / 자료 개발

□ 그간의 추진실적

○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대상 파악(2월)

- \* 군사경찰, 군검찰 등 147개 기관(수사관 등 1,298여 명)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 (3월)

- \*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 여가부 주관, 수사기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온라인 수강(158명, 11월)
- \* 국방부 주관, 성폭력 전담 수사관 기본·심화과정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위탁교육 (2개 과정 37명, 10월)

□ 2022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

- 군 수사기관(군사경찰·군검찰) 자체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성폭력 전담수사관 대외기관 위탁 교육(2개 과정, 60여 명)

○ “2차 피해 방지 교육” 국방부 표준 메뉴얼 개발

- 군 특성을 반영한 2차 피해 방지 ‘국방부 표준교안’ 마련
  - \* 여성가족부 “2차 피해 방지교육 가이드라인” 참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군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교육 대외 위탁교육 실시 인원	59명	185명	200명	전년 실적 고려
○ 2차 피해 방지 교육 표준 매뉴얼 마련	.	.	1건	

기대효과

○ 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예방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2차 피해 방지 교육(지속)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대령(진) 노창석	전화번호	02)748-5107
------	-----	-----	-----------	------	-------------

## □ 과제개요

- 미투 운동 이후 급증하는 성희롱 사건처리에 비해 언론·국회 등에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및 2차 피해 문제 제기
  - 아울러,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25. 시행)에 따라 성희롱 담당 감독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성희롱 조사기법 등 성희롱 담당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개발된 교육자료도 업데이트 필요

## □ 그간의 추진실적

- 근로감독관 대상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예방 교육과정 운영
  -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21년에 현장교육형태로 실시 예정이었던 성희롱 전담자 맞춤형 교육계획을 변경, 실시간 화상교육(8시간)으로 대체
    - \* '21년 실적: 2회(회당 각 8시간) 운영 근로감독관 82명 이수(10.5, 10.8).
  - 근로감독관 5일 이상 교육(기본, 신규감독관)과정은 「근로감독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교과목 형태로 포함하여 교육 실시
    - \* '21년 실적: 10회(회당 각 1~2시간) 근로감독관 312명 이수
- 참고로, '20년에 근로감독관의 2차 방지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희롱 조사기법 등을 담은 교육자료를 개발한 바 있음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구용역 실시(30백만원, 2~7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중점 추진사항)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 유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내용에 포함
  - 이론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토론식 수업 등 교육의 품질을 제고
- (추진내용) 전년과 동일하게 근로감독관 5일 이상 교육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과정에는 교과목 형태로 「근로감독관 2차 피해방지」 포함
  - 성희롱 사건 담당 감독관 대상 맞춤형 집합교육(2일, 14시간) 실시

- (추진방법) 근로감독관 대상 5일 이상 교육과정은 교과목(1~2시간)으로 편성 하되, 신규 근로감독관 과정은 교과목 시간 확대(2시간 → 3시간)
  - 성희롱 사건처리 담당자 대상 실시간 화상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전환 및 교육시간 확대(8시간 → 14시간)
  - 토론식 교육 및 슈퍼비전 워크숍을 추가하여 교육의 품질 제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운영지원과(교육계) 및 근로감독기획과와 교육계획 협의
2/4분기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3/4분기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 성희롱 사건 담당 감독관 대상 맞춤형 집합교육
4/4분기	- 근로감독관 기본과정 및 신규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 예산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근로감독관교육자료 개발	개발 완료			
○ 성과지표명 : 근로감독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2차 피해예방 교육		감독관대상성인지교육 실시(1시간)	근로감독관 대상 교육시간 확대 감독기본과정 (1→2시간) 신규 감독관과정 (2→3시간)	교육시간 통계치
○ 성과목표치 산식 : - 근로감독관 대상 교육과정(5일 이상)에 성인지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1시간 이상) 포함		성희롱담당감독관교육 (온라인)실시 ·(8시간)	교육시간 확대 (8→14시간)	

□ 기대효과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 제고 및 직무 역량 강화로 근로감독관에 의한 2차 피해 사례 감소 예상

□ 2023년 이후 추진계획

- 근로감독관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식 교육 및 슈퍼비전 워크숍 기능 강화
  - 지속적인 교육품질 제고 노력 및 동영상 제작·시청각 교육 병행조치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안성수 사무관 박원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7719 044)202-7446
------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여성피해자 또는 여성  
피의자 조사 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  
\* 변화관리 아카데미 및 상시학습 시 교육

### □ 그간의 추진실적

- 부서별(수사과, 센터)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상시학습)
  -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이해’ 온라인 강의 시연회 참여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48명('21.11.18.)

### □ 2022년도 시행계획

- 소속별 변화관리 아카데미 시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  
\*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시행
- 부서별(수사과, 센터)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상시학습)
-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폭력 2차 피해의 이해’ 온라인 강의 개설 시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 수강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여성폭력 사건 수사·조사와 2차 피해 예방 교육 대상자 확대	34명	48명	55명	서명부
○ 성과목표치 산식 : 전년도 대비 10% 증가 수강				

기대효과

-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보호 및 여성폭력 사건 수사·조사와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로 사건 대응력 강화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해당없음)

기타 사항 (해당없음)

담당부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담당자	송창용 주무관	전화번호	042)615-5853
------	--------------------	-----	---------	------	--------------

## □ 과제개요

-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의무 실시(「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2항 근거)

## □ 그간의 추진실적

- 2차 피해 개념 및 주요사례를 유형화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배부, 여성폭력범죄 대응 기능 현장교육에 적극 활용
- 쏘 직원 대상 2차 피해 예방 직장교육 실시 및 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등 경찰 교육기관 내 ‘2차 피해 예방교육’ 교육과정 신설
- 피해자 보호 및 경찰 수사 관련 경찰청 훈령에 2차 피해 개념을 명문화하고 2차 피해 방지의무 등을 규정
  - \* △ 「범죄수사규칙」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
- 지역경찰·여청·사이버수사 등 여성폭력대응 기능에서 활용하는 기존 매뉴얼에 2차 피해 개념·사례 등 반영, 현장경찰관 업무 역량 강화

## □ 2022년도 시행계획

- 조사과정조정관·현장 강사 등 2차 피해 예방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및 시·도 경찰청 중심 예방 교육 강화
- 實 사례 위주의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 현장 교육 지원
  - \* △ 사례형 교육콘텐츠 지속 개발(제·개정 법률 및 스토킹·성착취 등 사례보강) △ 피해자 보호·지원절차 안내 강화 △ 2차 피해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개정판) 발간
- 2차 피해 예방 정책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 컨설팅 추진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목표·커리큘럼 등 재설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2021년)	목표치(2022년)	산출근거
○ 관서별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275회	275회	관서별 교육 실적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박동아 경위	전화번호	02)3150-0938
------	----------------	-----	--------	------	--------------

□ 과제개요

-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의무 실시(「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2항 근거)

□ 그간의 추진실적

- (특별교육) 고위직 및 수사부서(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별도 폭력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하고 인식개선 도모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교육대상 확대) 해양경찰교육원 신입교육과정에 성인지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 \* 신규 임용된 사람에게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
- (콘텐츠 개발) 해양경찰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대상별 사례 중심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

□ 2022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방지 의무 교육 실시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2항(2차 피해 방지)
- 수사기관 대상 여성가족부의 교육과정(강사 및 교재, 자료 지원)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 선발 및 이수율 관리
- 해양경찰 전 직원 대상 실효성 있는 성인지력 향상교육 추진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성인지 특별교육 이수율	-	100%	100%	이수자 명단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이수자 / 교육대상자) × 100				

□ 기대효과

○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수사 담당자 교육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통한 형사 절차 상의 2차 피해 예방

담당부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팀	담당자	조숙영 경정	전화번호	032)835-2944
------	------------------	-----	--------	------	--------------

## □ 과제개요

### ○ 사업 목적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등록정보 현행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 주요 내용

- 공개·고지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소재불명자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등록정보 점검 강화
  - \* 주민등록조회, 보호관찰상황 조회, 출입국조회, 수용조회 등 정보조회를 통해 등록정보 현행화
- 전체 등록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일제 점검 실시
  - \* 연 6회 이상 주민등록지, 거주지 등 주요 정보의 불일치 여부를 일제점검 실시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 일제점검 후 특이사항은 경찰에 통보하여 진위여부 확인 조치
  - \* 신상정보 등록·관리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보유정보를 확보, 신속성·정확성 제고(주민등록·수용·출입국 정보, 고용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
  - \* 여성가족부·경찰청과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공유를 위한 협업 강화
- 신상정보 등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관기관 간 등록정보 연계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강화

- 공개·고지자 전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관리하여 주민등록 주소지·실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점검 주기 단축(3개월 ▶ 2개월)
  - \* 2020년 총 6회, 2021년(10월 기준) 총 5회에 걸쳐 23,456명에 대해 점검 실시하였으며, 불일치자 1,804명에 대한 주민등록지, 거주지, 출입국정보, 수용정보 등 현행화 실시
- 소재불명자, 미등록자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하고 현행화하여 그 결과를 경찰과 공유, 진위여부 확인을 통해 소재불명 상태 최소화
  - \* 2020년 제출의무위반자 3,253명, 2021년(10월 기준) 2,796명에 대해 경찰에 통보

-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직권정정을 통한 공개정보 관리 강화
  - (배경)제출된 주거지 정보의 진위가 의심될 경우, 그 내용을 경찰에 전달하고 경찰의 진위확인 후 공개정보에 반영하였으나, 신속한 반영의 한계로 오(誤) 정보 노출 가능성 상존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가 오(誤)정보(오기, 착오, 누락, 허위 등)로 판단될 경우,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하게 반영
    - \* 정정 내용은 여가부와 경찰에 통보, 관할경찰서에서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 후 결과 공유 ('21. 9.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과 협의 완료)
    - \* 참고 : '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 높인다'('21.9.28. 보도자료)
    - \* '21. 10. 부터 14회에 걸쳐 실시하여 현재까지 85명에 대해 직권정정 실시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경찰청과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협의를 위한 협업 강화

- 협의체 운영주기 : 연 3회(1월, 5월, 9월),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수시협의회 개최

- \* '21년 유관기관 실무협의체회의 4회 실시(정기 3회(2월, 5월, 9월), 수시 1회(9월))
  - 신상정보 등록·관리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보유정보(주민등록·수용·출입국 정보, 고용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를 확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여가부 반기고지 집행 전 고지정보 변동사항 검토 실시
    - \* 여가부에서 '21년 하반기 반기고지 대상자 3,304명 점검 요청, 11월 1,084명 점검 후 회신
- 신상등록시스템 고도화(전자문서 사용 환경 구축) 및 연계 기능 강화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사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자화 및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이미지화(스캐닝) 기능 구현, 전자문서 뷰어 솔루션 및 연계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1.10.19. 공포('24.10.20. 시행)
  - 비전자 기록물(판결문, 제출서) DB화(스캐닝) 장비 도입
  - '21년부터 판결문 이미지화 작업 진행
    - \* 누적 약 2만3천 건 이미지화 실시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신상정보 공개·고지자, 소재불명자 등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 공개·고지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주소지·실제 거주지 등 등록정보 변경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제점검 실시
  - \* 주거부정·제출의무 불이행 등 소재불명자 집중 점검 및 경찰을 통한 진위확인 조치
  - \* 소재불명자, 미등록자 등 제출의무 위반자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현행화 실시
- 전자감독대상자의 주거지 정보 관리 강화 위해 법무부 직권정정 지속 실시
  - \* 신상공개 전자감독대상자의 잘못된 주거지 정보는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하여 신속하게 공개 정보에 반영
  - \* 정정 내용은 여가부와 경찰에 즉시 통보, 관할경찰서에서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 후 결과 공유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 여성가족부·경찰청과 소재불명, 공개·고지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공유를 위한 협업 강화

- 협의체 운영주기 : 연 3회(1월, 5월, 9월),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긴급협의회 개최 및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 전자문서 사용 환경 구축을 위한 종이기록물 이미지화 진행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사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판결문 등 종이기록물 이미지화 지속 실시
  - \* 차세대 KICS 편입 및 전자문서 사용 환경 구축을 통한 연계성·신속성·보안성 강화

### ○ 예산 현황

- 110백만 원(관리용역비)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속 입력률(%)	92.7	미정	(30일 이내 등록건수/ 신규등록건수)×100

담당부서	법무부 전자감독과	담당자	박지훈 주무관	전화번호	02)2110-3796
------	--------------	-----	---------	------	--------------

## □ 과제개요

## ○ 사업 목적

- △등록정보 진위확인 △소재불명자 검거를 통한 재범억제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공개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등) 수시점검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로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 개정 성폭력처벌법('16. 12. 20)에 따라 신상 점검주기를 기존 반기 1회에서 3개월·6개월·1년 1회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점검토록 변경(제45조 제7항)되어 점검횟수 지속 증가추세

## ○ 주요 내용

- (고위험군 집중점검) 코로나19에 따른 간접(전화·비접촉 등)점검 기조라도 '고위험군'은 신상정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점검 실시
  - ※ 低위험군은 △주민등록조회 △주소지·실거주 여부 점검 △연락처 변경여부 확인 △직장 정보 진위확인 △범죄경력조회 △출입국조회 △수용자 조회 등 정보조회를 통해 신상등록 정보 현행화
-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재불명 등록대상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반기 2회) ⇨ 조속히 검거하여 추가 범행의지 차단
  - ※ 연 2회 이상 3개월 1회 점검 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시·도청 직접 추적수사
- (정보공유)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점검 후 특이사항은 법무부에 통보하여 진위여부 확인 조치
- 신상정보 등록·관리에 필요한 유관기관 보유정보를 확보, 신속성·정확성 제고
- 여가부·법무부와 소재불명, 고지·공개 등 특정 대상자의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및 현안 공유를 위한 협업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 신상정보 고지·공개 대상자,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고지·공개 대상자(3월 1회 점검)에 대해 직접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주거 등 신상정보 우선 확인\* / 나머지 점검 대상자는 직접 확인

\* '21. 12월 말 기준 전체 3개월 1회 점검 대상자에 대한 대면점검 완료

- 소재불명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집중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 연 2회(4월~5월 / 8월~9월) 소재불명 대상자 집중 검거기간 운영
-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법무부와 소재불명, 고지·공개 등 특정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 및 현안 공유를 위한 협업 강화

- 협의체 운영주기 : 분기별로 실시(연 3회) 각 부처 순회하여 주관
- 기타 : 긴급한 현안 발생시 긴급협의회 개최 및 핫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 신상정보 등록·관리에 필요한 유관기관 보유정보(주민등록·수용·출입국 정보, 고용정보, 자동차등록정보 등)를 확보하여 신속·정확한 신상정보 등록·관리
- 특정 성폭력 전력자 재범방지 종합 대책 수립
  -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통해 경찰청·법무부·여가부가 특정 성폭력 전력자에 대한 출소 후 재범방지 및 관리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시행
  - 출소 前·後 필요한 법률개정 및 피해자 지원, 지역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
  - ※ △특별대응팀 운영 △여성안심구역 추가 △범죄예방진단 △방법초소 설치 및 순찰강화 등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고위험군(고지·공개) 대상자 집중점검>

- 신상대상자 中 고지·공개대상자는 상·하반기(4월, 8월) 현장 진출, 주거·직장 등 신상정보 진위확인 / 나머지는 지속 확인
- 주거지변경 미신고 등 신상정보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반드시 입건 후 혐의점 수사, 확인된 신상정보는 여가부에 즉시 통지

#### <소재불명 대상자 집중검거>

- (기 간) '22. 4. 1~5. 31.(2개월) / '22. 10. 1~11. 30.(2개월)
- (현 황) 現 대상자는 131명(서울(28명)·경기남(19명)·경남(9명)·충남(8명)·부산(9명)順) 이 중 고위험군(고지·공개 대상) 12명(16.03%)

<성범죄전력자 재범위험성평가 다기관 협의체 설립>

- 경찰-법무부-지자체間 정보공유 등 협업체제를 강화토록 ‘성범죄전력자, 다기관 협의체 설립’ 법적 근거(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마련
- 협의체에서 재범위험성 평가, 단순 관리부터 주거 지원까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대상자 사회복귀와 주민불안 최소화 도모

英 다기관협력 공공보호방안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 MAPPA)		
설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년 성폭력 전과자가 Sarah Payne라는 8세 소녀를 성폭행·살해하면서 당시 담당 기관간 업무 비효율 등이 지적되어 '03년부터 신설 법에 따라 경찰 관할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li> </ul>	
다기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교정시설, 보호관찰소’가 주 기관으로, ‘사회복지부 등 기타 기관과 의료서비스’는 관계 기관으로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며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 대책을 수립·시행</li> </ul>	
관리 대상	위험성 평가	관리 수준
카테고리 1 : 신상정보가 등록된 자  카테고리 2 : 12개월 이상 금형을 선고받은 자  카테고리 3 :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생각되는 자	△ 정적요인 : 전과, 범행동기, 인적 특성 등  △ 동적요인 : 주거·직장 안정성, 근무 자세 등  ※ 정적요인은 쉽게 변하지 않아 동적요인을 위주로 판단	레벨 1 (일반 관리) : 위험성이 낮은 자로, 담당 기관이 전담, 필요시 정보공유  레벨 2 (적극 관리) :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자로, 경찰·교정· 보호관찰기관이 공공보호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성 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  레벨 3 (다기관 특별관리) : 위험성 또는 대중 관심이 높은 자로, 지역의 사회보장·교육·주택·의료 기관 담당자 들까지 참여해 생활지원, 직업알선 등을 제공 (조두순은 레벨 3에 해당)

○ 예산 현황

- 38백만원(일반수용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소재불명자 검거 실적	63	69 (10% 이상 목표치 설정)	검거 건수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담당자	우준영 경감	전화번호	02)3150-0921
------	-------------------	-----	--------	------	--------------

## □ 과제개요

## ○ 사업목적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전차단 도모

##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점검계획 수립 등 제도 총괄 및 점검결과 공개, 제도·법령 해석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 ※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취업제한 점검·확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이양('21.1월)
-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 ○ 주요내용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 제한
-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확인(연 1회 이상)
-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및 방법 안내
-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폐쇄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및 홍보

## □ 그간의 추진실적

##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실적

(단위 : 개소, 명)

점검연도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 사항
	점검기관	점검인원	적발기관	적발인원	
2019	543,721	3,172,166	106	108	종사자 해임 58, 운영자 변경 9, 기관폐쇄 41
2020	543,398	3,271,506	79	79	종사자 해임 51, 운영자 변경 11, 기관폐쇄 17
2021	533,315	3,382,478	68	67	종사자 해임 39, 운영자 변경 9, 기관폐쇄 19

\* 전년대비 2021년 점검기관 감소 사유는 그동안 학교 종사자 유형별(교원, 공무원, 돌봄교실 종사자 등) 각각 응답으로 기관수가 일부 중복되었고, 자영업도 감소한 것에 따름

\*\* 적발기관수보다 적발인원수가 1명 적은 것은 동일인이 2개 기관(학원, 개인과외교습) 운영 적발 됨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발 현황

(단위 : 명)

기관유형	점검기관	2017	2018	2019	2020	2021
유치원, 초중고, 학원, 의료기관, 공동주택, 게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교육부 등 중앙부처	24	163	108	79	67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감(교육지원청)의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전수 대상 일제 점검·확인하여(2~11월), 성범죄 경력자 퇴출 추진

※ '20년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점검·확인, 적발된 79건 모두 해임, 기관 폐쇄 등 성범죄 경력자 전원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퇴출 조치

- 교육부, 여가부, 관할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학원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합동 현장 점검·확인(2~11월)

- 취업제한 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자 자료 제출 불응 시 과태료 신설 검토

\* 법 제57조에 따라 연 1회 취업자 전수 점검하고 성범죄자 해임 등 퇴출 조치 ('21년 기준 53만여 개 기관 대상 점검, 67명 적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성범죄 경력조회 구비서류 간소화 추진

※ 교육부 소관 초·중·고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정보(NEIS)의 경찰청(범죄경력회보 시스템) 연계로 관련기관(아동청소년관련기관) 인허가증 제출 불필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수립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기관 확대 시행(교육부 소관 기관)
2/4분기	- 각 기관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 수립 결과 확인
3/4분기	- 각 기관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실시 및 결과 확인
4/4분기	- 각 기관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실시 및 결과 확인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성범죄자 경력자 적발인원 증감율(%)	△27% (전년대비 적발인원 증감율)	△15%	△10% (전년대비 적발인원 증감율)	매년 전년대비 10%씩 적발인원을 줄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를 차단하고자 설정함
○ 성과목표치 산식 : ('22년적발인원-'21년 적발인원)/'21년 적발 인원				

기대효과

-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전차단 초모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 종이 증빙서류 없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행정 편의 증진과 관련기관의 반복적 증빙서류 신청·보관·폐기 과정의 낭비 개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성범죄 경력조회 시 구비서류 간소화 확대
  - 보건복지부 정보(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와 경찰청 연계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김은실 사무관 한지훈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04 02)2100-6409
------	--------------------	-----	--------------------	------	------------------------------

## □ 과제개요

- (근거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사업 목적)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도모
- 현황
  - 대상 : 모든 성폭력 수형자
  - 과정 운영 : 재범 위험성 및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과정 구분 후 운영
    - 기본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60시간 운영
    - 집중과정 : 16개 전담기관에서 100시간 운영
    - 심화과정 : 5개 심리치료센터에서 300시간 운영
    - 특별과정 : 1개 지정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150시간 운영
    - 유지과정 : 20개 교정기관에서 20시간 운영
  - 내용 : 자아존중감 향상, 왜곡된 성의식 수정, 피해자 공감 등
  - 강사 : 교정공무원(내부 강사), 외부 전문 강사
- (기대 효과)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 사회 구현

## □ 2021년 추진실적

- 주요 성과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1,624명('21.10.)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유지과정 운영기관 확대 11개 → 20개('21.3.)
- 목표 및 실적

구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실적	
		성과목표	실적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육인원	2,300	1,624*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강사 출입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실적이 떨어짐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사업 개요

- 사업 대상 : 모든 성폭력 수형자
- 사업 내용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 추진 일정
  - 기본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연 2~6회 운영
  - 집중과정 : 16개 전담기관에서 연 2~3회 운영
  - 심화과정 : 5개 전담센터에서 연 2회 운영
  - 특별과정 : 지정된 심리치료센터 운영
    - \* 특별과정은 가학적·변태적 성폭력사범 등 특정 성폭력사범에 대해 출소 전 실시하는 150시간의 추가 심리치료 과정임
  - 유지과정 : 전 교정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운영
    - \* 유지과정은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심화과정을 수료한 성폭력 고위험군에 대해 출소 전 실시하는 20시간의 추가 심리치료 과정이지만, 필요시 기본과 집중과정 수료자에게도 실시 가능함
- 추진 체계
  - 사업시행 주체 : 각 교정기관
  - 사업시행 절차 : 계획 수립 → 운영 → 결과 보고
- 기대효과 :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사회 구현

###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비예산 사업임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10월)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인원(명)	1,624	2,300*	

\* 22년 목표치는 기존 목표치로 동결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실적은 변동 가능

담당부서	법무부 심리치료과	담당자	교감 송남옥	전화번호	02)2110-3898
------	--------------	-----	--------	------	--------------

## □ 과제개요

##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재범방지 도모

## ○ 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 공공기관

##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가해아동·청소년 부모 교육
  - \* 법원에서 의뢰한 수강명령 청소년, 소년원 재소자, 학교폭력위원회 위탁 청소년 등
- 교육 매뉴얼 보완, 교육 강사 양성

##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범죄 재범방지 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운영

## &lt;재범방지 교육인원&gt;

구 분	2019	2020	2021.12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성인)	88집단 (1,018명)	88집단 (1,039명)	88집단 (965명)
가해 아동·청소년	1,275명	931명	924명
가해아동 청소년부모	271가족	173가족	222가족

- 가해아동청소년 부모 교육 매뉴얼 보완('20)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표준프로그램 전면개정('21)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부모 등 교육 운영
- 성폭력 가해 장애 아동·청소년 교육 매뉴얼 업데이트
-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실시 등으로 교육강사 전문 역량 강화
-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 효과성 평가 및 분석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계획수립, 실시
2/4분기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실시
3/4분기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실시
4/4분기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524	524	524	-	-
국비					
• 일반회계	524	524	524	-	-
○ 가정폭력성폭력재발방지 (성폭력가해아동청소년교육)	448	448	448	-	-
국비					
• 기금(양성평등기금)	448	448	448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가해아동청소년 젠더 감수성 및 심리 종합 변화율(%)				
○ 성과목표치 산식 : (교육 후 심리* 측정율 - 교육 전심리 측정율) / 교육 전 심리 측정율	9.8%	10.5%	10.5%	○ 최근 2년 평균 변화율 (10.2%)을 고려,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교육실시를 통한 재범 억제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교육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사회구현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부모교육 지속 실시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지적제한자용 교육 매뉴얼 보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김은실 사무관 한지훈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04 02)2100-6409
------	--------------------	-----	--------------------	------	------------------------------

## □ 과제개요

- (사업 목적) 성구매자 교육을 강화하여 성매매 수요 차단, 성구매자 교육 운영 내실화로 존스쿨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 내용) 교육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 운영 내실화, 엄정한 교육 집행으로 불량자 제재조치

## □ 그간의 추진실적

- (주요 성과) 존스쿨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만족도 평가 등을 반영하여 교육 운영의 내실화 추진, 엄정한 교육\* 실시
  - \* 2021년 9월 기준으로 존스쿨 미이수자 43명 검찰청 미이수 통보
- (주요 실적) 전문프로그램 매뉴얼 적용 및 사전·사후 설문을 통한 효과성 분석 등 내실 있는 교육 운영으로 성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
  - \* 2020년 899명, 2021년 9월 758명 교육 이수
- 성구매자 현황, 사전·사후 설문, 프로그램 만족도 등 자료 제공하여 성매매 실태조사 반영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지연된 교육 신속 집행
  - 신규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성 향상 등 역량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강사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지속 확보 및 확보된 전문강사의 공유 확대
  - 미이수자에 대한 검찰 통보 등 엄정한 교육 운영
    - \* 교육시간 엄수, 출결상황 및 이수처리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집행 엄정성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성매매방지 교육 담당자 직무역량 교육 실시

- 추진 일정
  - 연중 상시
- 예산 현황 : 비예산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존스쿨프로그램 이수 인원(명)	899	758	1,300	○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 2019년 2,487명 2020년 899명 2021년 758명

□ 2022년도 이후 추진계획

- 신속한 교육 집행, 미이수자에 대한 검찰 통보 등 엄정한 교육 운영 및 신규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성 향상 등 역량 강화
- 전문프로그램 매뉴얼 적용 및 사전·사후 설문을 통한 효과성 분석 등 내실 있는 교육 운영으로 성구매 남성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

□ 기타 사항

-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지침 등에 따라 목표치 수정 필요

담당부서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	정유희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3487
------	--------------	-----	---------	------	--------------

## □ 과제개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확산
-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교육 포함

##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지표 반영 ('19.4월~)
- 교원양성과정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방안 연구\*(~'20.3.말)  
\* (내용)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현황·가이드라인·표준교육안 등
- 미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을 교원양성기관에 안내('20.4.)  
\* 양성평등, 인권,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내용을 관련 교과 등에 포함하여 이수 권고
- 교원양성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제공('21.9)
- 교장·교감 자격연수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내용의 교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안내  
\* '2022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21.10.13.)
-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검정령 개정 완료('21.2월)  
\*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초과 양성과정 기준) 필수 이수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19.10~)
- 쉼 고등교육기관에 폭력 예방교육 안내로 구성원들의 예방교육 이수 독려 ('21.10.12)  
- 총장·고위직(부총장·실·처장·전임교원)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별도 실시 의무화로 대학의 책무성 강화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적극 실시를 독려하고, 대학 구성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대학 자체평가 등에 반영 추진
-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교원양성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점검·컨설팅 및 우수사례 공유
  - ※ 성인지 교육과정 구성 현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 추진 내용 및 방법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독려 및 대학 정보공시 항목 지속 반영
  -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폭력예방교육 입력 실적을 「대학정보공시」 실적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료입력 편의 제공
- 교장·교감 자격연수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내용의 교과목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수원에 안내
  - ※ ‘202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수립 및 안내(~’22.10월)
- 교원양성기관 대상 성인지 교육 운영점검 및 컨설팅(’22.7~12), 우수사례 공유(’22.12)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적극 실시 안내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성인지 교육 내용 포함) 안내
2/4분기	- 교원양성기관 운영점검 컨설팅
3/4분기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적극 실시 안내 및 이수 독려 - 2023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수립 및 안내
4/4분기	-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실적 정보공시 반영 사항 점검 - 교원양성기관 운영점검 우수사례 공유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유도(회)	2	2	2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안내(공문시행 등)
○ 성과목표치 산식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기관장 포함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의식·문화를 개선
-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역량 제고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예방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	강예일 사무관 김선빈 사무관 권기정 연구사	전화번호	044)203-7115 044)203-6478 044)203-6488
------	-----------------------------	-----	-------------------------------	------	--

## □ 과제개요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강화 및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 내 외국인 교원·학생 맞춤형 예방 교육 자료 보급

## □ 그간의 추진실적

- 초·중·고 양성평등 교육 지도서(교과에서 인성교육, 인권을 만나다) 및 범교과 교수학습자료(초·중·고별 총 6종) 개발·배포('19년)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목표·성취기준 개발 및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운영가이드, 초·중등 예방교육·양성평등 수업사례집 개발 및 보급(~'20.12)
- 대학 내 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자료 개발('19년~)
  - 유학생 및 외국인 교원 대상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국가별 성인지 감수성 수준 격차 등을 반영한 교육자료 개발
    - \* '20년 영어, 중국어 예방교육자료 배포 완료, '21년 일본어, 베트남어 예방교육자료 배포 예정
  - 초·중등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전공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20~'21년)
    - \* 초·중등 예비교원 대상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배포('20년), 스포츠계열 전공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배포 예정('22년2월)
- 「교육기본법」 개정(법률 제18456호. '21.9.24 공포)으로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실시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학교현장 양성평등 교육 인프라 강화 지원을 위한 소규모·격오지 학교 대상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지원(225개교)

-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담당하고, 지역의 양성평등 교육 확산을 주도하는 양성평등교육 교원 양성 직무연수 실시
  - ※ 현장지원단 연수('21.8.16.~21.11.20. 150명), 전문교원 연수('21.8.2~13. 46명)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교육기본법」 개정('22.3.25 시행)에 따른 학교 양성평등교육 안착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기반 마련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추진 및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가이드 개발
  - 초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양성평등교육자료를 아카이빙 형태로 제공(ICT 교육 연계 서비스 연계)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을 내실화 유학생·외국인 교원 및 전공계열 맞춤형 예방교육자료 개발·배포 계속
    - \* 예방교육자료 관련 직무연수 등을 통해 예방교육자료의 보급 확산 및 효과성 향상 도모
- 추진 내용 및 방법
  -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방안 연구 추진(~'22.10.), 학교 현장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운영 가이드 개발(~'22.12.)
  - 학교현장에서 원활히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관련 교육자료를 수집, 선별, 공유하여 학교 양성평등 교육 지원 강화
    - ※ 특히 17개 시도교육청 개발 양성평등 교육 자료의 전국 학교 활용을 위한 수집, 확보
  - 학교 양성평등교육을 주도하는 교원들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 직무연수 실시
  - 유학생·외국인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자료의 종류와 언어 수요를 파악하여 외국어 자료 개발·보완 및 배포
    - \* 예방교육자료 관련 직무연수 등을 통해 예방교육자료의 보급 확산 및 효과성 향상 도모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계획 수립 - 시·도교육청 자체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 계획 수립
2/4분기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어 교육 자료 개발 수요 파악 - 양성평등 교육 자료의 전국 학교 활용을 위해 수집 확보된 자료 보급 - 양성평등교육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 직무연수
3/4분기	- 양성평등교육 교원 양성 직무연수
4/4분기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외국어 교육 자료 개발 완료 및 배포

○ 예산 현황('21.10.31.기준)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지원	340	340	170	170	△50
특별교부금	340	340	170	170	△50
○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 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389	381	391	2	0.5
국비	389	381	391	2	0.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보급(중)	2중	2중	2중	교육 프로그램 자료 (단위 : 중)
○ 성과목표치 산식 : 해당없음				
○ 성과지표명 : 외국어 예방 교육자료 개발·번역	2중	2중	2중	교육자료 발간물 (단위 : 중)
○ 성과목표치 산식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초중등학교 교육에서의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 실시 기반 마련
-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교육분야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 기여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단위 학교 양성평등 교육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고사업 지속 추진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양서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7115
------	------------------	-----	--------------------	------	------------------------------

### 3-1-1-②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

#### □ 과제개요

- 교육 분야 인식개선 추진(교육부, 여가부)
  -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 교원용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 보급

####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보급, 수요자 중심의 효과성 있는 교육교재 활용 지원
  - 공공기관 종사자 및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이버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영어, 중국어)을 통해 외국인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공공기관 이러닝시스템 활용 온라인 상시학습 서비스 지원(직원용 4종, 고위직용 1종)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 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 <추천콘텐츠 제공 현황>

(’21년 10월, 단위 : 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총 330종	140	42	20	23	105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 2022년도 시행계획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외국어 자막(영어, 중국어)을 통해 외국인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 외국인 등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대상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장벽 제거
  - 콘텐츠 내 화면해설, 수화, 외국어자막 등의 삽입을 통한 교육의 편의성 및 실효성 제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2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선정 계획 수립
2/4분기	- 22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선정 및 외국어 등 번역
3/4분기	- 22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외국어 등 번역(계속)
4/4분기	- 22년 접근성 향상 대상 콘텐츠 예방교육통합관리 탑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209	209	209	-	-
국비	209	209	209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외국어 자막 지원)	5종	6종	3종	콘텐츠 개발(3종)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외국인 교원용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지속 개발 및 보급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활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품질관리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교육혁신팀	담당자	주나경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63
------	----------------	-----	---------	------	--------------

## □ 과제개요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심리 상담 강화
  - 위(Wee) 클래스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학교 내 심리 상담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구축·운영 계획 수립 및 교육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18.3.9.~)
  - 컨설팅 신청 학교 및 중대 사안 발생 학교, 교육대학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여성인권진흥원)와 합동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실시('19.7월~)
  - 신고센터 전담인력 확보('21~. 공무원1명)를 통한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 신고센터 사안처리 절차 체계화를 위한 신고센터 업무매뉴얼 개발('21.12.)
- 시·도교육청별 위(Wee)클래스 설치 및 운영\* 및 피해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 \* 운영현황 : ('19) 7,230교 → ('20) 7,631교 → ('21) 8,059교
  - \*\* 피해학생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연수 콘텐츠(총 8차시) 개발 및 보급('20.9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 위(Wee) 클래스 설치 확대 및 피해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신고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지속 확보\*를 통해 신고센터의 전문성 향상 및 신고센터 업무매뉴얼 활용을 통한 사안처리 절차 체계화 및 사안 대응 강화
    - \* '22년 신고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42백만원 반영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배포 및 학교 등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위(Wee) 클래스 설치 확대\* 및 피해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강화

\* 위(Wee) 클래스 설치 확대('22년 8,200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2/4분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3/4분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4/4분기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온라인) 운영

○ 예산 현황('21.10.31.기준)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250	250	100	△150	△60
특별교부금	250	250	100	△150	△60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Wee클래스 확대 구축(개)	7,631	8,059	8,200	Wee클래스 설치 학교 수
○ 성과목표치 산식 : '22.4월 조사				

□ 기대효과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사안 처리 내실화
- 시·도교육청별 위(Wee)클래스 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일상회복 지원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컨설팅 지속 운영
-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위(Wee) 클래스 설치를 계속 확대하여 피해학생 상담·치유 지원 강화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김화홍 연구사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6980
------	-----------------------------	-----	--------------------	------	------------------------------

## □ 과제개요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중·고등학교 대상 컨설팅 강화
-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처리 역량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안대응 체계 강화('20년 750백 만원, '21년 375백만원 지원)
  - \* '21.11. 현재 전체 17개 시·도중 15개 교육청에서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구성·운영
  - \*\* (전체 교육청(17개) 사안처리 지원단 구성·운영) 내부 및 외부위원(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 학교 내 중대·심각한 성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사안처리를 통합적으로 지원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유도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운영 여부를 2021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21.9.~)
- 시도교육청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지방공무원 국가정책수요 인력 지원 ('21. 8명, '22. 12명(+4명))
- 교육청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사안처리 자문·컨설팅 지원('21년, 8건)
- 학교에서 사안처리 시 주요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사례 형태로 엮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 개발·보급('21.1.)
-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내 성폭력을 포함한 학폭 실태조사 실시 및 피·가해학생 보호·선도 조치 요청('21. 4.12~4.30)
  - \*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및 향후계획” 보도자료 배포(2021.7.6.), YTN·
-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발생 초기 피해학생 보호강화를 위해 '학교장의 가해자·피해학생 분리조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법·시행령 개정
  -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 예외 적용사항(피해학생의 반대의사, 교육활동 미운영 등)에 대한 명문화 조치를 위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조 신설('21.6.22)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개발·보급('21.6.)
  - 시도교육청별 업무 담당자 연수('21.2.) 및 시·도교육청 자체 심의위원 대상 연수 실시('21.8.)
    -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최 방법, 피·가해학생 조치 등을 중심으로 연수
  - 중앙 단위의 사안업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원격워크숍 개최 및 심의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굴·보급('21.8.)
- 성폭력 등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 교원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공정하고 엄정한 사안처리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보급('21.3)
  - 시도교육청별 학교장·책임교사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사안처리 지원(연중)
  - 학교전담경찰관과 단위학교 책임교사 간 성폭력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 협의('20.9)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추진
    - ※ 부내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시도교육청 평가·인력·예산확보 지원
    -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교부금 교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 후속조치를 통해 제도 안착 지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지원 지속
    - ※ 심의위원회 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수정·보완('22.2.)
    - ※ 시도교육청별 업무 담당자와 심의위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22.2.~4.)
- 추진 내용 및 방법
  - 교육(지원)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및 사안처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 계속
    - \* 특별교부금 지원('20.~'22.), '23년 지방공무원 국가정책수요 확대 반영 추진

-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조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근절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실시
-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안처리 직무연수 운영 및 사안처리 콘텐츠(매뉴얼 등) 개발·보급
  - \* 시도교육청에 교부금 교부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며, 직무연수 및 콘텐츠 개발 등 공통 적용 사업은 관련 전문기관 위탁
-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한 즉시분리 제도 도입 후, 현장 운영 현황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
- 시도교육청별 학교장·책임교사 대응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사안처리 지원 (연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계획 수립·시행</li> <li>-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협의체 구성</li> <li>-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교부</li> <li>-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개발 보급</li> </ul>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협의체 운영</li> <li>- 시도교육청별 학교장·책임교사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사안처리 지원</li> </ul>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 및 학교 사안처리 담당자 직무연수 운영</li> <li>-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개발 보급</li> </ul>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담당자 워크숍 개최</li> <li>- 사안처리 매뉴얼 등 콘텐츠 현장 보급</li> <li>- 시도교육청별 학교장·책임교사 역량 강화 및 단위학교 사안처리 지원</li> </ul>

○ 예산 현황('21.10.31.기준)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375	375	213	△162	△43
특별교부금	375	375	213	△162	△43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정적 운영 지원	1,300	1,300	534	△766	△58.9
특별교부금	1,300	1,300	534	△766	△58.9
○ 중앙단위 사안처리 지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180	180	180	-	-
특별교부금	180	180	18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성희롱·성폭력 교육(지원) 청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만족도(%)	87	측정중	90	역량 강화 교육 이수자 만족도 설문조사
○ 성과목표치 산식 : 직무연수 참여자 5점 리커트 척도 조사 후 환산				

□ 기대효과

- 시도교육청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시·도교육청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지속 추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례  
분석 및 검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보급 등을 통한 업무 담당자의  
사안처리 역량 강화 지원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이준세 주무관 나지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7113 044)203-6898
------	-----------------------------	-----	-------------------------------	------	--

## □ 과제개요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법제화를 위한 법령 개정
- 대학 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대학 정보공시 등에 공개 의무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선정\* 및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계속(’21년, 349백 만원)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제작(2종), 직무연수 실시(5개과정)
    - \* ’19년~’20년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을 대학 정보공시 신규 항목으로 반영
  - ’21년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설치여부, 독립기구 여부, 예산 인원 등의 현황 조사 및 대국민 공시(’21.10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완료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21.3.23.개정, ’22.3.24. 시행)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체계 구축 사업 지속 추진(’22년, 391백만원)
  - 성희롱·성폭력 피해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 추진
- 추진 내용 및 방법
  - 중앙센터의 실태조사를 통한 대학 전담기구 현황 파악, 예방교육자료 및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우수사례 확산, 직무연수, 자문·컨설팅 확대
  -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전담기구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신설(’21.3.23.)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체계 구축 사업 계획 수립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전담기구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2/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착수
3/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 실태조사 실시
4/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완료·배포

○ 예산 현황('21.10.31.기준)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389	381	391	2	0.5
국비	389	381	391	2	0.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	1건	법령개정
○ 성과목표치 산식 : 해당없음				

기대효과

○ 대학의 사안처리 역량 및 책무성 강화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 운영 계속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육통계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최홍보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6320
------	---------------------------	-----	--------------------	------	------------------------------

□ 과제개요

- 정직 이하 처분을 받은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이 교단 복귀 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의무화
-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시도교육청 2019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 포함 하도록 권고('19.1월)
  -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성비위 교원 재발방지 교육 자체 계획 수립·추진 (19.4월/서울 30시간, 광주 20시간, 부산 15시간 등)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 완료, 시도교육청 및 학교 배포 ('19.2.28)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성 비위 등으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에 대한 과제 즉시 중단 및 참여제한(1년) 조치 반영('19~)
  - ※ 2021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2021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대상인 가톨릭대 시과학연구소 연구책임자 주모 교수의 성비위 관련 징계조치에 따라 연구책임자 직위해제 및 책임자 변경, 연구비 감액 조치('19)
  - ※ 박사후국내연수 연구책임자 성비위 관련 해임에 따른 과제 중단 및 참여제한('21)
- 전문가와 교육청, 학교 현장 등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정 및 보급('20.9.)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대학 내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교육 내실화
  - 연구과제 선정시 성비위 징계 교수의 학술지원대상 제한 계속
  - 시·도교육청별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추진 내용 및 방법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교육 교수법 등 직무연수 실시
-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에 따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

[참고] 이공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제26조 (부가조건) ⑨**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지원대상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을 포함한다.)가 대학 자체감사 또는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즉시 (연구책임자의 경우) 과제를 중단하고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등의 경우) 과제 참여를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징계가 확정된 학술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향후 1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지원대상자가 성비위 및 갑질 등으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협의회 등을 통한 가해교원 대상 재발 방지 교육·상담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체계 구축 사업 계획 수립
2/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업무담당자 직무연수 실시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착수
3/4분기	
4/4분기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 완료·배포

○ 예산 현황('21.10.31.기준)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대학 내 양성평등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389	381	391	2	0.5
국비	389	381	391	2	0.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교육 교수법 직무연수(회)	1회	추진중	2회	직무연수 실시 결과 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체계 구축 사업 '21년 사업기간 : '21.3월~'22.2월

□ 기대효과

- 대학 내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직무연수를 통한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교육 내실화
- 성비위 징계 교원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발방지 교육에 관련 직무연수 실시 계속
- 성비위 징계 교원의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계속
- 시·도교육청별 가해교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상담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술진흥과	담당자	강정훈 사무관 연수진 서기관 임수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7111 044)203-6854 044)203-6871
------	---------------------------	-----	-------------------------------	------	--

### □ 과제개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체계 확립
  -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성평등 인식 제고 교육 과정 운영
  - 문화·예술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성폭력 예방콘텐츠 개발·보급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문화·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 □ 그간의 추진실적

- (예방교육)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화('20.6.,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개정), ▲예술, 영화, 대중문화, 출판 분야의 정부지원·공모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8년~, 계속),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보조금 지침 개정 및 안내서 마련·확산('21. 4월,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 (문화분야 특화교육) 문화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18~'20 총 51명) 및 문화예술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성평등 인식제고 교육 운영
- (행동강령 개발) 문화분야 종사자 교육용 콘텐츠 및 행동강령 개발(23종)
  - 예비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용 콘텐츠 개발('20~'21 14종), 현장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20~'21 9종)
- (찾아가는 교육) 현업 예술인, 예술대학 등 예비예술인 대상 교육현장 연계
  - 문화 분야(예술, 콘텐츠) 및 영화계 전문강사를 활용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20~'21.10월 총 849회 21,428명)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민간보조사업 수행 시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강화
- 문화예술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확산 (계속)
- 문화예술계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 등 지속 실시 (계속)

### ○ 추진 내용 및 방법

-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행 점검 관리 강화(주요 공공기관 등 대상, 연 1회)
- 현장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개발 지원
  - \* 단체 종사자들이 주체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연극·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단체 내외 전파·확산
- 문화분야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을 활용 문화예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인식교육 운영,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9월)에 따른 예방교육 확대 추진
  - \* 예방교육 내용에 권리보장법 상 신고절차, 위반 시 제재내용 등을 추가, 강사 대상 사전 교육 등 추진
- 개발된 예방교육 콘텐츠 공유를 통한 활용 확산(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예방교육 의무 이행 점검
2/4분기	- 행동강령 개발 단체 공모 선정 및 개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3/4분기	- 행동강령 개발 및 예방교육 추진
4/4분기	- 행동강령 개발 및 예방교육 추진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200	200	100	△100	△50
국비	200	200	100	△100	△50

※ 예방교육 등 일부 예산은 3-1-3-④ 과제 예산에 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적(명)	예비예술인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예방교육 실적 (7,000명)	예방교육 실적 (8,400명)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9월) 감안 '21년 대비 20% 상향

□ 기대효과

- 문화예술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현장과 연결을 통한 내실있는 예방교육 추진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 확립으로 종사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문화예술 환경 구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상별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실시
  - 예술인 권리보장법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 예술인 및 기관·단체 종사자 등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본격 추진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권향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2366
------	----------------------	-----	---------	------	--------------

## □ 과제개요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 명문화 추진, 표준계약서 활용 시 정부지원 우대 적용

## □ 그간의 추진실적

- 표준계약서 개정 관련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 등 협의
- 문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분쟁 해결 절차 명시 등 관련 조항 반영
  - \* ▲성범죄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구제조치
  -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문 반영 표준계약서 현황('21.11월) : 8개 분야 43종 (대중문화 4, 만화 6, 출판 9, 예술 4, 미술 9, 애니메이션 4, 이스포츠 2, 공예 5)
- 표준계약서 사용 시 정부지원·공모사업 우대('20년 584억)
  - \* '20년 영화(115억), 만화(14.6억), 방송(148억), 출판(15억), 공연예술(254억), 미술(37억)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분쟁해결 절차(문체부 신고, 인권위 진정) 명시(계속)
- 추진 내용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및 분쟁 해결절차 명시 확대
    - \*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계약해지 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구제
  -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등 이행현황 점검 관리 강화
    -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가해자 배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보조금 교부 취소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민간보조사업 이행현황 점검
2/4분기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3/4분기	
4/4분기	- 표준계약서에 피해구제 관련 조문 명시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표준계약서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문 명문화(중)	성폭력 방지 조문 명문화 (7개분야)	성희롱 피해구제 조치 명문화 (5개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조문 명문화(2종)	'22년 고시 예정 표준계약서 2종

기대효과

-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문 지속 확대로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및 공정한 보상체계 강화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문화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관련 조문 개정(업계 및 관계자) 지속 협의
  - 정부 지원사업 대상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종류, 규모 등) 검토 등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권향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2366
------	----------------------	-----	---------	------	--------------

### □ 과제개요

- 산재되어 있는 관련 분야 상담센터의 연계를 강화하고,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 □ 그간의 추진실적

- 문화분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방안 및 실태조사 방법 연구
  - 분야별 상담센터 사례 분석 등을 통한 피해지원 방안 도출
    - \* 신고·상담 사례 분석, 국내외 법령·제도 조사, 법률 제·개정, 예방교육 효율성 제고, 상담센터 연계 및 홍보 강화 등 피해지원 방안
  - 문화체육관광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시 분야별 비교가 가능한 표준 실태조사 문항 및 조사방법 연구
- (모바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경력정보시스템) 모바일웹\*을 통해 신고 가능\*\*,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 및 예방교육 신규 시스템 개발에 반영
  - \* (종전) PC에서만 접근→(개선) 웹반응형으로 제작, 모바일로 접근 가능, 별도 App설치 불필요
  - \*\* 익명 신고 기능 신설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 (피해지원 및 연계) 센터 간 정례회의를 통한 연계체계 강화
  -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콘텐츠성평등센터(보라), 영화성평등센터(든든)을 통해 심리상담·의료·법률 지원
    - \* ('20~'21.10월) 심리상담 45건, 법률지원 148건, 의료지원 5건
  - 분야별 상담센터 정례회의('20년 3회, '21년 2회) 등을 통해 센터별 업무계획 공유, 애로사항 등 운영관리 개선방안 논의, 통일적 지원기준 마련
    - \* 예술계 상담지원센터 접수사건의 불공정행위신고센터로 이관·연계방안, 센터별 예방교육 현황 및 예방교육콘텐츠 공유 방안 논의 등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신고센터(조사·시정조치)와 상담센터(피해지원기능) 간 사례 공유 및 정책 개선 등 연계 강화(계속)

○ 추진 내용

-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9월)에 따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 분과 위원회 설치 및 신고상담센터 역할 강화
  - \* 종전의 상담, 피해지원 → 상담, 신고접수, 조사 협력(조사 : 문체부), 피해지원
- 신고센터와 분야별 상담센터 간 연계 강화 및 정책 개선 등을 위한 정례 협의체\* 운영
  - \* 문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예술인성폭력상담센터,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스포츠윤리센터,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 \*\* 예술계 상담지원센터 접수사건의 조사 이관 및 연계방안 논의 등
- 영화분야 피해지원 및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 재정비(든든)
  - \* 피해 지원 범위, 한도 소개, 신고 피해 유형 및 영화계 내 사건 처리 절차와 기 지원받은 피해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정보 제공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피해지원 및 사건처리 절차 매뉴얼 재정비
2/4분기	- 상담신고센터 정례협의회 운영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3/4분기	
4/4분기	- 상담신고센터 정례협의회 운영 - 시행계획 추진과정에 대한 자체 점검 시행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계	1,276	1,246	1,276	-	-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술인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700	673	700	-	-
국비(일반회계)	700	673	700	-	-
○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126	124	126	-	-
국비(일반회계)	126	124	126	-	-
○ 영화정책지원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450	449	450	-	-
국비(영화발전기금)	450	449	45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 분과위원회 설치	모바일 상담 시스템 확대(3개소)	정례 협의회 운영 2회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설치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9)

□ 기대효과

- 상담센터 연계 강화를 통해 분야별(문화예술, 콘텐츠, 영화분야)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체계 구축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지속
  -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참여 지원
  - 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관련 필요 예산 확보 노력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등 확산 지원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권향연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2366
------	----------------------	-----	---------	------	--------------

## □ 과제개요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20.8.5)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조사, 피해자 지원,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 등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설립) 스포츠윤리센터 설립\*('20.8.5) 및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 신고접수·상담, 사건 조사 및 처분요청, 선제적 예방을 위한 현장 인권감시관 투입, 피해자 지원 등 스포츠인권 업무 본격 추진('21년~)
  - \* (스포츠혁신위 권고 '19.5), 체육계에서 분리된, 독립성·전문성 갖춘 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설립
  - \*\* 신고 404건, 상담 1,116건, 단순문의 180건('20.9월~'21.10월)
- (기능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후속 개정을 통해 조사권,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권 등 기능·권한 강화('21.2.19~)

## 스포츠인권보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3차례 개정 사항('20~'21)

- ① 병상계 성폭력 사건('19.1)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설립, '20.8.5 시행)
- ②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20.7월) 계기 법 2차 개정(조사권 등 권한·기능 강화, '21.2.19 시행)
- ③ 3차 개정(체육지도자 채용시 징계이력 확인 등, '21.6.9 시행)

- (전문성 강화) 조사관('20년 출범시 13명→'21.10월 기준 23명), 변호사(2명, '21.7월~) 등 전문인력 충원 및 인권위('21.4월)·경찰청('21.7월) 등의 조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로 조사 전문성 강화

- (사건처리율 개선) 스포츠윤리센터 전문성 강화로 사건처리율 약 3.7배 개선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현황 비교('20, '21년)		
구 분	'20년	'21년(10월말 기준)
운영기간	'20.9~12월(4개월)	'21.1~10월(10개월)
인력(정원)	26명	40명
조사관 수(경력자수/비율)	13명(5명/ 38.5%)	23명(15명/ 65.2%)
예산	32억원	53억원
신고접수 건수	101건	303건
사건처리 건수	17건	188건
사건처리율	16.8%	62%

- (선제적 예방) 체육인 교육 개시\*, 인권감시관 위촉(30명, '21.7월) 및 현장 모니터링('21.10월~,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등) 등 예방 및 인권의식 제고
  - \* ▲체육지도자 교육('21.7~10, 1,793명) 및 재교육('21.7.15,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 ▲체육인(성)폭력 예방교육('21.7~11월, 3만1천명 수료 예정)
- (피해자 지원) 집중지원기간 운영('21.6~9, 기간 종료후 지속 지원 중), 피해자 지원기준 마련('21.6월), 안내서 제작 및 지속 지원
  - \* '21.10월말 기준, 35건 지원(의료 12, 법률 8, 심리상담 13, 주거지원 2건)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스포츠인권 중추기관으로써의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추진 내용
  - (조직 운영기반 확대) 인력 보강('21년 40명 → '22년 45명),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조사역량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 \* △프로그램(승부조작 조사, 심판지도자 교육 등), △횟수(7회 → 10회 내외)
  - (지역활동 강화) 지역사무소 확대 개설(3 → 5개소), 인권감시관 활동 확대(월1회 → 2회 이상)로 인권 존중 문화의 정착 촉진
  - (사건처리 실효성 강화) 조사체계 등 기능 개편, 사후관리 강화 등 체육계 공정성 확보 및 인권보호 제도의 실효성 강화
    - \*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정책 기능 개편, 체육단체 이행상황 수시 점검 등
  - (교육·홍보 강화) 체육인 교육 확대 및 인지도 제고 위한 국민 친화적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강화
    - \* 체육지도자 재교육 시행, 뉴미디어 짧은(숏폼) 콘텐츠, 홍보대사 등 활용

○ 추진 일정(안)

\* 추후 변동 가능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신고접수·상담, 피해자지원, 예방교육, 실태조사, 지역사무소 운영, 스포츠인권 홍보 등 업무 추진
2/4분기	- 스포츠인권 업무 지속 추진
3/4분기	- 지역사무소 개소(신규 2개소)
4/4분기	- 징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5,312	5,312	6,185	873	16.4
국비	5,312	5,312	6,185	873	16.4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신고사건 처리율	스포츠 윤리센터 개소 (’20.8.5)	예방 교육 실시 (10,000명)	신고사건 처리율 (55%)	(처리 건수 / 신고 사건 건수)×100

\* '20.9월 신고접수 개시 이후 처리율(50.7% / '20.8~'21.10기준)을 감안, 목표치 10% 상향 설정

기대효과

○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사건 조사를 통해 공정성 확보와 인권보호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조직 기반 확대, 조사 역량 등 전문성 강화로 스포츠 인권수호 전담기구로서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담당자	민수이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3115
------	------------------	-----	---------	------	--------------

## □ 과제개요

- 체육계 내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 제고 및 인식 개선 확산을 위해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연계상담’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9년~)
  - 폭력예방교육 지원이 시급한 선수촌·학교·단체 등 소속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 \* ('19년) 중앙 특화교육 → ('20년~) 17개 시·도(18개 권역) 교육으로 확대
    - \*\* ('19년) 32회 실시 → ('20년) 410회 실시 → ('21년) 398회 실시

## □ 2022년도 시행계획

- 체육계 내 성폭력 등에 대한 민감성 제고와 인식 개선 확산 추진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 \* 시도 교육청, 대한체육회, 체육 단체·연맹·협회 등 협업 교육대상 발굴
  -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집단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3/4분기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4/4분기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96	796	796	-	-
국비	796	796	796	-	-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예산의 일부를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3.6	84.1	84.5	참여자 대상 폭력예방 이해 증진, 인식변화, 실천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

□ 기대효과

○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로 체육계 내 폭력예방 공감대  
확산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체육인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	----------------	-----	--------------------	------	------------------------------

## □ 과제개요

-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영역별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실질적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 및 제재 규정 등 마련

## □ 그간의 추진실적

- 20대 국회 법률안 4건 의원발의
  - \* 임기만료 폐기 3건, 철회 1건
- 21대 국회 법률안 1건 의원발의
  - (주요내용)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유정주의원 대표발의)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관련 발의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
- 추진 내용 및 방법
  - 기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관련 입법 지원
  -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법안 발의 시, 우리부 의견제시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지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입법 지원
2/4분기	-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입법 지원
3/4분기	-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입법 지원
4/4분기	-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입법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양성평등기본법」 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근거 마련	신규	신규	시정명령권 근거 마련	시정명령권 근거 신설

기대효과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완전하지 못함
- 이에, 성희롱행위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도입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됨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관련 법안 발의 시 입법 지원 지속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이희연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2
------	----------------	-----	---------	------	--------------

### 3-2-1-②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이행력 제고

#### □ 과제개요

##### ○ 주요내용

- 취업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토록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 20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18.3월 의원발의) 임기만료 폐기  
\* 권미혁의원 발의안('18.3월), 8.28.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

##### ○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 검토

- 20대 국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기만료 폐기  
\* 임이자의원 발의안('18.5월)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가능 여부 연구용역 실시 ('18.12월)

#####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법률」 개정 완료 ('21.5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시행('22.5월)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지속 추진
  -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1.11.11.) 국회 환노위 계류 중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13조제4항이 사실상 취업규칙 기재의무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장 감독 시 동 의무의 이행 여부 집중 점검·지도
  - \*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는 동 조항의 효과성 분석 등을 전제로 신중히 검토

○ 추진 내용

- '22.5월 시행되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현장 안착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 사업장 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작성 및 게시여부 집중 점검·지도, 표준 지침(안) 배포 등 사업장 지원

○ 추진 방법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홍보 강화(리플릿, 포스터 배포 등)
-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22년 사업장 정기감독계획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점검 관련 사항 반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준비</li> <li>-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심의 지원</li> <li>-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li> </ul>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현장 안착</li> <li>-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심의 지원(계속)</li> <li>-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계속)</li> </ul>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심의 지원(계속)</li> <li>-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계속)</li> </ul>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고용평등법 의원(안) 심의 지원(계속)</li> <li>-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관련 사업장 점검·지도(계속)</li> </ul>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	법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작성 및 게시 여부 점검·지도			1천개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장 점검 결과

□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이 사실상 취업규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유도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 대한 제재 정비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제재 정비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전제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근로감독관 교육 등 시행 준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작성의무 관련 제도가 사업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지속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박원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7446
------	------------------	-----	---------	------	--------------

## □ 과제개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건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평등 근로감독 강화
- 성희롱사건 해결 이후 2차 피해 등에 대한 사후 행정지도 추진
- 성희롱 사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전문가 컨설팅 활성화
- 남녀고용평등 전담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추진
-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전문 상담기능 보강 등 피해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범위를 사외 전문가까지 확대 추진\* 검토하고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제고 지도

## □ 그간의 추진실적

- '18년부터 모든 근로감독\* 유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분야 점검
  - \* '18년 26,182개소, '19년 25,415개소, '20년 15,797개소, '21.10월 기준 15,246개소
  - ↳ '20년, '21년의 경우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감독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완료('19.9.1 시행)
  - \*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근거 마련
- 건강·고용보험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고용평등(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 \* 감독건수(개소) : '17년 555 → '18년 659 → '19년 700 → '20년 400 → '21.10월 663 (900개소 목표)
- 성희롱 사건 발생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활용토록 안내
- 전국 지방관서에 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18.9.1)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 2018년도(18회), 2019년도(7회), 2020년도(4회), 2021년도(2회)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대상 확대 및 여성 위촉 비율 저조 사업장 대상 위촉 지도
  - \* ('21.10월 기준) 4,896개소 위촉<여성 : 26.8%>
  - \*\* '16년~'18년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지도 및 확대 계획」 시달 및 '19년도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워크숍 시 여성 비율 제고 지도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범위 확대 법안 통과 추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용득의원 발의, '19.1.31) 환노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 고용평등상담실 전담인력 확충 등 상담기능 강화로 피해자 상담·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홍보를 통한 분쟁 사전예방 등 고용평등의식 확산 제고

\* 상담인력(명) : ('15) 15 → ('18) 21 → ('19) 31 → ('20) 31 → ('21.10) 35

\* 상담건수(건) : ('15) 6,783 → ('18) 9,895 → ('19) 10,829 → ('20) 11,328 → ('21.10) 9,631

\* 사업장 교육(개소, 명) : ('15) 114 / 8,009 → ('19) 571 / 23,186 → ('20) 280 / 8,860 → ('21.10) 142 / 5,037

- 또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운영('18~)으로 2차 피해 예방 등 심리 치유를 통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명, 횟수) : ('18) 42 / 331 → ('19) 118 / 831 → ('20) 120 / 809 → ('21.10) 111 / 621

- 간담회(7회)를 통한 연계·협업 강화, 전담인력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21.4~5, 2회),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21.9) 등 상담 지원의 질 제고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개정('21.10)을 통한 사업의 실효성 도모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직장문화개선 유도, 근로감독관 역량 및 성인지 감수성 강화

○ 추진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사업장의 경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조사 착수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사업장은 차년도 고용평등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근로감독 강화

- 사업장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도구를 개발, 사업장 감독 시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유발되는 조직문화 등에 대해 개선지도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업무 매뉴얼 보강

- 고용평등상담실 최소 인프라 확보(상담실별 전담인력 최소 2인) 및 상담 전문성 제고로 피해자 권리구제 및 분쟁 사전예방 기능 강화
- 고용평등상담실(상담기능) - 지방관서(사건조사·감독 기능)간 연계·협업 활성화,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로 피해자 상담·구제 실효성 제고
- 전담인력 대상 교육\* 추진, 수시 간담회 개최 및 현장 방문지도, 정책자료 수시 공유 등을 통한 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도모
- \*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교육, 상담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컨설팅 지원 등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여성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촉 확대 지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근로감독관 업무 매뉴얼 보강 및 관련 지침 시달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여성 비율 제고를 위한 위촉 확대 지도 공문 발송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2/4분기	-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 -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도구 개발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전담인력 대상 교육 및 간담회 추진)
3/4분기	-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계속) -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도구 사업장 점검 시 활용 개시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상담실-고평전담감독관 연계·협업 실태조사 등 현장 간담회 추진)
4/4분기	-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계속) -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도구 사업장 점검 시 활용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22년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23년도 운영기관 선정 계획 수립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1,929		2,846	917	47.5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국비)	966	966	1,200	234	24.2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실적(단위 : 건)	11,328	11,557 (예상치)	11,588	'22년도 운영기관 (21개소) 전체 상담실적
○ 성과목표치 산식 : 11,328건 ('20실적)+(최근 2년간 상담 실적 증가율×50%)				

□ 기대효과

-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기법, 감독관 역량 등의 강화로 해당 사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유도 효과도 기대
- 정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 부담이 적은 민간단체 고용평등 상담실의 특성을 적극 활용
  -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 및 분쟁 사전예방을 통한 고용평등의식 확산 제고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방고용노동관서 업무 관련 지속 보완
- 고용평등상담실 인프라 확충(상담실 추가 설치 등)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상담·지원기능 강화
  - 전담인력 대상 교육\*, 수시 간담회 개최 및 현장방문 지도, 정책자료 공유 등을 통한 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도모
  - \* 법령·지침 등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교육, 상담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컨설팅 지원 등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양성평등담당관실	담당자	박원아 서기관 장순남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46 044)202-7721
------	------------------------------	-----	--------------------	------	------------------------------

## □ 과제개요

- 사업장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표준 교육 동영상 제작('20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준 마련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19.12월, 21.12월)
- 인사 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21.11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10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내강사양성과정 마련
- 추진 방법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관련 과정 개설 위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사내강사양성과정 개설 협의·위탁
2/4분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사내강사양성과정 개설
3/4분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제작
4/4분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배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1,929		2,612	683	35.4
• 사업장 교육자료 제작 (일반회계)	79		79	-	-
국비	79		79	-	-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제작	1	1	1	교육영상 제작 여부

기대효과

- 사업장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내 강사에 대한 교육 실시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 제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제작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양성과정 기준 마련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박원아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7446
------	------------------	-----	---------	------	--------------

## □ 과제개요

-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등 교육 지원(고용부, 여가부)
  - 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및 교육 콘텐츠 제공·전문 강사 연계(여가부)

## □ 그간의 추진실적

- 교육 기회 및 접근성 취약 민간기업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 중앙(1개소) 및 지역(17개 시·도 18개소)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교육 추진
- 사회초년생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화교육’ 실시(’20년~)
  - 소규모 사업장,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등 대상 교육 지원
    - \* (’20년) 30회 실시 → (’21년) 115회 실시
-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보급, 수요자 중심의 효과성 있는 교육교재 활용 지원
  - 사회초년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안내(’20년)
  - 일반국민 누구나 여성폭력 감수성을 확인·제고할 수 있도록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개발·보급(’20년)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 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 &lt;추천콘텐츠 제공 현황&gt;

(’21년 10월, 단위 : 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총 330종	140	42	20	23	105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 2022년도 시행계획

- 소규모 사업장, 사회초년생 등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교육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통한 사업장 내 성폭력 예방인식 확산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소규모 사업장 및 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소규모 사업장 및 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3/4분기	- 소규모 사업장 및 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4/4분기	- 소규모 사업장 및 사회초년생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예산	집행	예산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96	796	796	-	-
국비	796	796	796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2022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3.6	83.7	83.8	참여자 대상 폭력예방 이해 증진, 인식변화, 실천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

기대효과

○ 민간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콘텐츠 제공에 따른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공감대 확산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소규모 사업장 등 민간기업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등 예방 콘텐츠 제공 및 전문 강사 연계 등 교육 지원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여성가족부 교육혁신팀		주나경 주무관		02)2100-6563

## □ 과제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 신고 및 3개월 내 여성가족부로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요청 시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 성폭력 피해자의 해고 외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 구체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요청 시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명시 및 각급 기관 통보·시행('20.1)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법」 개정('20.10.20)
-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통보 의무화 및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필요시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
  - \* 「성폭력방지법」 '21.1.12 개정/'21.7.13 시행,  
「양성평등기본법」 '21.4.20 개정/'21.10.21 시행
-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21.7.13 시행)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공공부문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시정·보완 요구 명령권 신설 검토 등 대응체계 내실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22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수립·시행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해 필요 시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요구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2년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배포·시행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2/4분기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3/4분기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4/4분기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20년 표준안 마련	'21년 표준안 마련	'22년 표준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여부

기대효과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조직 내 사건 은폐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시행 등 기대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주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 요구
- 시정·보완요구 이행사항 점검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이희연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2
------	----------------	-----	---------	------	--------------

## □ 과제개요

- 소청심사 민간위원에 성범죄 전문가 참여 등 성범죄 관련심사 실효성 강화
  - 공무원 성범죄 관련 소청사건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청사건에 대한 감경 결정의 엄정성 강화 등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비상임 민간위원에 성비위 관련 전문가\* 임명('20.5.4.) 및 신임 비상임 민간 위원으로 여성 위원\*\* 임용('21.1.4)
  - \* 이○○변호사(지자체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역임)
  - \*\* 지○○ 변호사(성범죄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자체 소청심사위원 역임)
  - ※ 성비위 사건 인용률  
( '17년) 29.3% → ( '18년) 17.0% → ( '19년) 14.7% → ( '20년) 10.5%
- 소청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청결정문 공개 지속적 확대
  - ※ 연도별 공개율 : ( '18년) 66.1% → ( '19년) 87.5% → ( '20년) 90.4%
- 성비위 감경 제한 및 고려요소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 반영 도모
  - ※ 상임위원 5명 중 1명, 비상임위원 7명 중 4명을 여성위원으로 임명·운영 (여성위원 비율 41.7%)
- 성비위를 포함한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비상임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부심제도 확대
  - ※ (종전) 배제징계(파면, 해임) → (개선) 중징계 전체(파면, 해임, 강등, 정직)
-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중징계 소청사건에 대한 감경시 의결정족수 강화(출석 1/2 → 출석 2/3 합의)
  - ※ 「국가공무원법」 개정('21.6.8. 공포 / '21.12.9. 시행)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임기만료인 비상임 민간위원 교체 시 성비위 및 여성폭력예방 전문가 우선 추천 추진
- 개인정보 보호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청 결정문 공개 지속 확대 추진(계속)
-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여성의 시각 반영을 위해 소청심사 회의시 반드시 여성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주심 또는 부심 중 반드시 1명은 여성 위원 배정  
-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성비위 사건 담당 주심 또는 부심 위원은 여성 위원이 맡을 수 있도록 사건 배정·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비위 사건에 여성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2/4분기	- 성비위 사건에 여성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3/4분기	- 비상임 위원 교체시 성비위 전문가 추천(7~8월) - 성비위 사건에 여성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4/4분기	- 성비위 사건에 여성 주심(부심) 위원 심사(연중)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여성위원의 성비위 사건 주심(또는 부심) 위원 참여도	-	(신설)	75%	'20년 실적 (70%)
○ 성과목표치 산식 : 성비위 사건 여성 위원 주심(부심) 사건 수 / 전체 성비위 사건 심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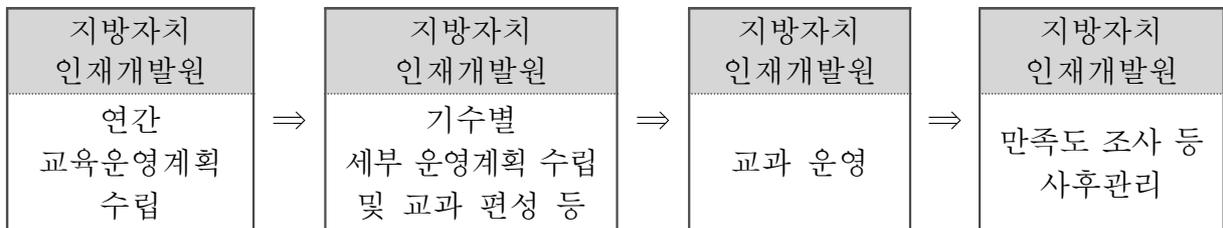
□ 기대효과

- 엄정한 소청심사 결정으로 외부로부터의 '체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하고 소청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청심사운영 내실화에 기여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담당자	차미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8665
------	------------------	-----	---------	------	--------------

## □ 과제개요

- (추진목적) 지자체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의식 내재화를 통해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주요내용) 지자체 고위공무원(3~4급) 및 5급 승진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시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과목 편성·운영
- (추진체계)



## □ 그간의 추진실적

- ‘고위정책 및 고급리더 과정’ 운영 시 폭력예방 교과목 편성·운영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실시
  - ※ (’20년) 과정별 2H/2개 과정 총 156명 이수
  - (’21년) 과정별 2H/2개 과정 총 156명 이수
- ‘5급 승진리더 과정’ 운영 시 폭력예방 교과목 편성·운영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실시
  - ※ (’20년) 기수별 2H/12개 기수 총 4,244명 이수
  - (’21년) 기수별 2H/13개 기수 총 4,348명 이수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지자체 고위공무원(3~4급) 및 5급 승진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등 실시
- 추진 내용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기본 교육과정 내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 교과목 편성·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5급승진자, 고위공무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등 실시
2/4분기	- 5급승진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등 실시
3/4분기	- 5급승진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등 실시
4/4분기	- 5급승진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등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여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 만족도	92.03점	93.5점	94점	'21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 성과목표치 산식 : 교과목별 만족도 평균				

기대효과

○ 지자체 공무원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자체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지속 운영 및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교과 발굴·운영 등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	담당자	김현동 주무관	전화번호	063)907-5153
------	-----------------------------	-----	---------	------	--------------

## □ 과제개요

-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조성
  -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직장교육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준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계속)
- 인권 및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모듈 개발·전파('18~'19년)
  -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탈피하여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한 수용성·효과성 높은 신규 교육과정 개발·운영
    - \* '18년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대상으로 시범 교육 실시 → '19년 각 부처 전파
-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신규자·승진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
  - \* 실시간 교육 이수자 : 5·7·9급 신규자 교육과정 1,197명 / 5급 승진자 1,719명

## □ 2022년도 시행계획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주요 시책교육으로 명시\*하여 조직 차원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추진
  - \* 「2022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각 부처·교육훈련기관에 안내
- 국가인재원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 편성·실시
  - \* 5급 승진자(1,700여명), 5급 신입관리자(400여명), 7급 신규자(400여명) 등 연간 3,000여명 대상
  - 각 부처 소속 교육훈련기관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도 부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권장·독려

○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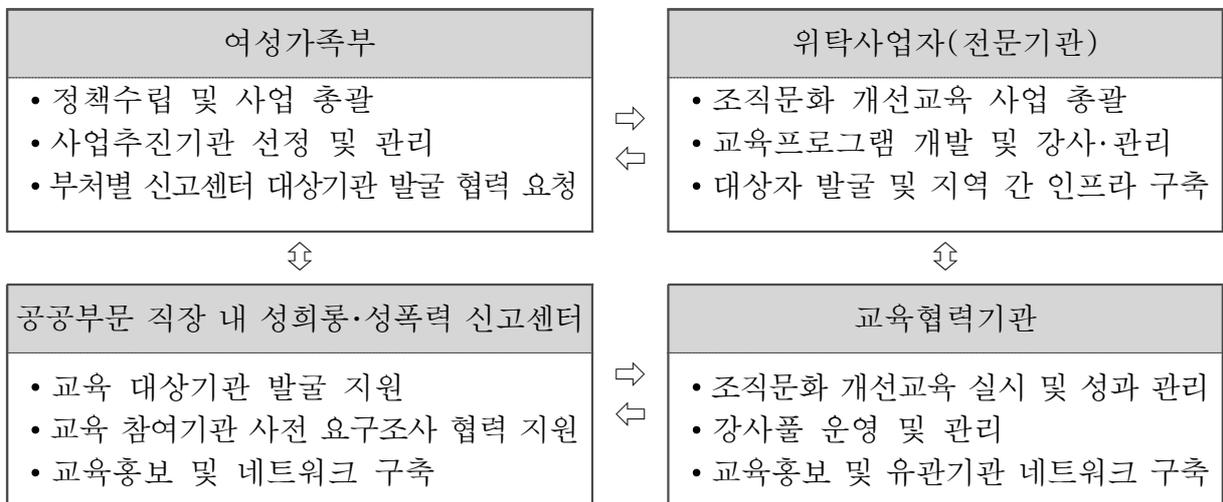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국가인재원 신입·승진 공무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양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명)	2,916명	3,000명	연간 예상 교육인원

담당부서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담당자	이지원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8224
------	----------------	-----	---------	------	--------------

## □ 과제개요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및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교육 기관 및 행위자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lt; 추진체계 &gt;



## □ 그간의 추진실적

- '19년 성희롱 재발방지 조직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18명, 조직문화 개선교육 55회 운영
- '20년 권역별 교육협력 기관 발굴·운영(6개 권역, 9개 기관) 등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40명, 조직문화 개선교육 88회 운영
- '21년 권역별 교육협력 기관 확충(6개 권역, 16개 기관) 등 교육 인프라 확대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54명, 조직문화 개선교육 88회 운영 ('21.11월말 기준)

## □ 2022년도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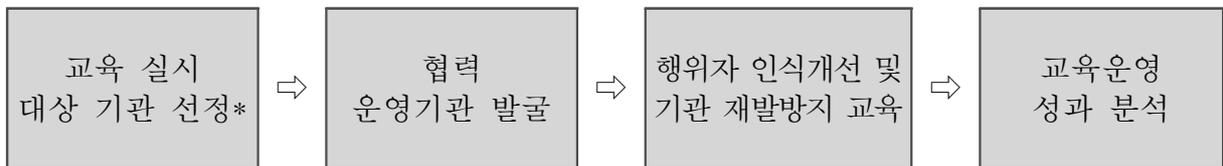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성희롱 행위자 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등 교육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강화

### ○ 추진 내용

- 조직문화 개선 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운영기관 발굴·운영
- 교육(상담) 전문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한 인력풀 구성
- 성희롱 행위자 등 인식개선 교육 및 조직 내 문화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등 사건 발생기관 대상 사업 연계 추진
-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교육 모니터링 등 운영 관리

### ○ 추진 방법



\* 사건발생기관, 신청기관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2년도 조직문화 개선교육 운영 및 교육 추진계획 마련 -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기관 선정 -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2/4분기	-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3/4분기	-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4/4분기	-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양성평등기금)	500	474	500	-	-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200	200	200	-	-
국비	200	200	200	-	-
지방비	-	-	-	-	-
기타	-	-	-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조직문화 개선 교육 만족도	80	84	84.5	'20년 신규지표로 전년 실적 대비 상향
○ 성희롱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참여자수	40	44	48	'21년 신규지표로 전년 실적 대비 상향
○ 기관재발방지 교육 운영 횟수	88	92	96	'21년 신규지표로 전년 실적 대비 상향

\* '21년도 실적은 목표치 기재

기대효과

- 사건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교육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임수연 사무관 전국혜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4 02)2100-6166
------	------------------	-----	--------------------	------	------------------------------

### 3-2-2-③ 기관의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 □ 과제개요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 피해자, 제보자의 신고사건 접수 및 상담, 관계기관 이송, 접수사건 처리 및 처리결과 모니터링

####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신고센터」 설치·운영('18.3.~)
- '기관장 전담신고 창구' 개설·운영('20.12.~)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신고센터 추진실적 >

(단위 : 건수, '18.3.8.~'21.12.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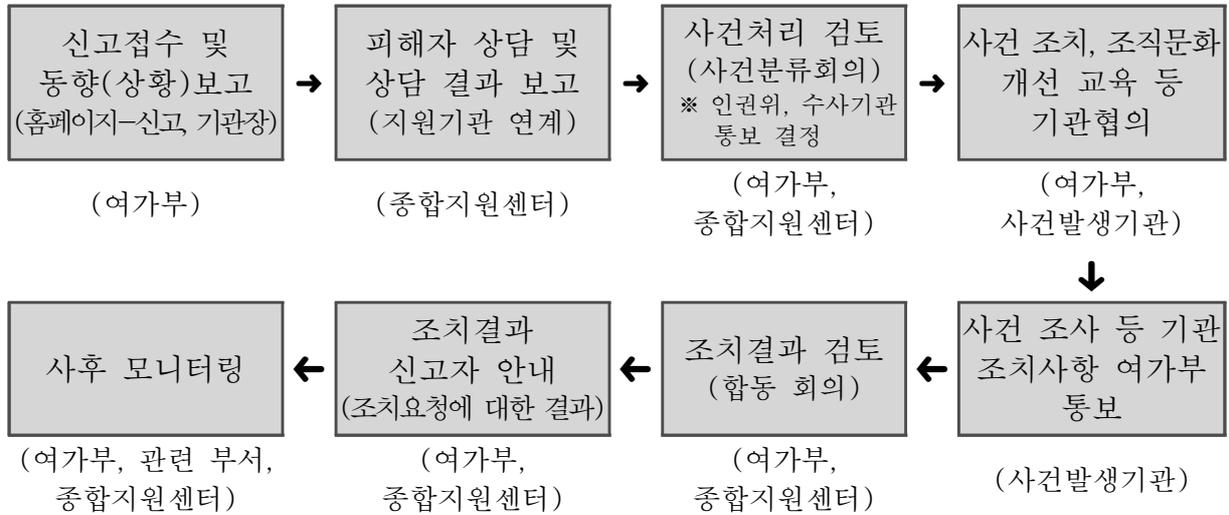
연도	총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소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합계	756	468	58	127	170	113	288
'18	360	234	26	50	85	73	126
'19	150	99	20	32	29	18	51
'20	118	64	5	26	21	12	54
'21	128	71	7	19	35	10	57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기관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
- 추진 내용
  -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자 교육 등 기관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연계·운영
  - \* 성희롱 행위자 및 사건발생기관의 관리자·실무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교육 실시

○ 추진 방법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기관 내 신고가 어려운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도모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프로그램 지속 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구	담당자	임수연 사무관 전국혜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4 02)2100-6166
------	------------------	-----	--------------------	------	------------------------------

### 3-2-3-① 군 성폭력 예방 강화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 군내 성폭력 실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계획 수립 및 맞춤형 교육 강화
- 주요내용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능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 주기적 성폭력 실태조사

####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21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시달('21.1월)
    - \*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현장중심의 성폭력 예방활동 추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
  -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 운영(2회) : 하절기 및 연말연시
    - \* 지휘관 특별 정신교육,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활동 추진
    - \* 성고충 처리체계 및 성폭력 관련 법규교육,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
- 현역 장병 휴대폰 사용 전면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한 근절대책 수립 / 추진('21.1월)
  - \* 국방조사본부 수사인력 보강,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 쏠 장군단 등 주요 직위자 대상 특별교육을 통해 성인지 역량 강화 및 조직 문화 개선 추진
-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 코로나19 및 교육 효과성 고려 성인지 의무교육 방법 개선\*
    - \* 기존 : 원격교육(국방망 및 인터넷 이용 국방부 성인지교육 동영상 시청), 소집교육(전문강사 초빙교육)
    - \* 개선 : 원격교육(동일) 및 부대별 선택교육(소집교육, 토론수업, 화상교육, 영화·도서·견학 등 간접체험 교육 중 선택1)

- 전문강사 및 군 전담교관 역량 강화
  - \* 전문강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3회), 전담교관 양성교육(7회) 실시
- 성인지 원격교육 동영상 콘텐츠 개발('21.10.~12월)
  - \* 4대폭력 예방, 성인지력 향상, 양성평등 등 7종 개발, '22년 활용 예정
- 국방부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12월~'22년 5월)
  - \* 성희롱·성폭력 예방 기본교육 / 토의식 교육,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 동성간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교육(전장병용, 관리자용)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 및 추진

- '22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 수립·시달
  - \* 성인지교육, 현장중심 성폭력예방,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 강화 등 포함
- 국방부 및 각 군 주관 예하부대 성폭력 예방활동 실태 점검
- 하절기 및 연말연시 성폭력 특별 강조기간 운영

### ○ 전 장병 맞춤형 성인지 교육 강화

- 연간 성인지 교육 지침 수립 및 성인지 의무교육 시행
  - \* 교육 미이수 간부 대상 진급 및 지휘관 보직 심사 시 제외
  - \* 코로나19 상황 고려 교육방법 융통성 부여 : 화상 / 소집교육, 체험교육, 자체토론 등
-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고려 전문강사·전담교관 역량 강화
  - \* 병사 대상 성인지 교육 전담교관 양성·보수과정 위탁개설(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민간 전문강사 군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 \* 강사 / 교관 강의역량 강화 위한 국방부 / 각 군 주관 모니터링 실시
  - \* 우수 강사 / 교관 포상을 통한 강의역량 제고 및 교육활동 활성화 유도
-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고려 계층 / 직책별 맞춤형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 초임자, 지휘관, 사건조사 담당자, 피해자지원 담당자 등 직책 고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 ○ 주기적 성폭력 실태조사(연 1회)

- 성폭력 실태조사(연구용역)를 통해 군 성폭력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폭력 관련 정책수요와 법규·제도 개선 수요를 도출
- 성폭력 실태 분석 및 주기적 평가회의(정기·수시)
  - \* 각 군 성폭력 사건 현황 종합 / 분석(월간) → 각 군 하달, 예방활동 시 참고
  - \* 군기강확립 협의체에서 분기 단위 군내 성폭력 실태 분석 및 예방대책 제시

- 성폭력 예방활동 이행실태 야전부대 현장점검(연중 지속)
-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15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 강력한 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 및 성폭력 사건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연내)
    - \*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및 신고 접수단계부터 관리,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의료, 법률 조언 등을 통합 지원
  - 사각지대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 △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 성고충전문상담관 적정소요 인원 반영 및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보장 △ 2차 피해 관련 처벌규정 신설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 △ 익명성 보장 및 신고전 피해자 지원기능을 갖춘 신고앱 개선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개선, 보고기준 정비 △ 관련 법령·규정 정비 등
  - 구성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군 맞춤·참여형 조직문화 개선 및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인지 교육	1,172	.	1,187	15	1.3%
○ 군 성폭력 실태조사	.	.	191	191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인지 교육 이수율	95%	95%	95%	교육 이수자/전 간부
○ 군 성폭력 사건 분석 연구용역	1건	.	.	연구용역 건수
○ 군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	1건	1건	연구용역 건수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전문강사·전담교관 역량 강화 및 강사 모니터링 : 지속
- 국방부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지속
- '21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대령(진) 노창석	전화번호	02)748-5107
------	-----	-----	-----------	------	-------------

## □ 과제개요

### ○ 사업목적

효과적인 군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제도·인력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함

### ○ 주요내용

- 피해자 지원 인력확대 및 역량강화
- 성폭력 피해는 양성평등계선 및 군사경찰·법무 등에서 접수하며, 수사 기관은 형사법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 \* 피·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에서 조사
  - \* 가해자 대면으로 인한 2차피해 방지,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회유, 소문유포 등 행위 차단
- 피해자 신상 및 사건 관련 비밀보장 엄수
- 가해자·피해자 분리(공간적) 및 신속·엄정한 후속조치
  - \* 성폭력 관련 보직조정 시 가해자 조정 원칙
- 피해자 중심의 인사관리 등 적극적 보호조치
  - \* 피해자 희망시 휴직 및 청원휴가 조치 (휴직기간 : 최대 2년 / 청원휴가 : 60일)
  - \* 신고접수와 동시 성고충전문상담관 / 양성평등담당관 지정 후 조력
- 성폭력 예방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보호 강화
  - \* 군내·외 상담 및 신고, 의료·법률지원 시스템 적극 활용
- 성폭력 징계 시 외부전문가(제한 시 성고충전문상담관) 참여 의무화
  - \* 민간인 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 그간의 추진실적

### ○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 등 상담인력 정원 확대

- \* 성고충전문상담관('20년 48명→'21년 50명) 확대 및 배치부대 기준을 현재 군단급→사단급 제대까지 확충 검토 추진
- \* 양성평등담당관 '현역 겸직→전담직위(7급)'로 전환 보충 : 21개 직위(해군 6, 공군 15)

-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 위탁 교육 시행 (연 1회)
  - \* 성폭력 피해사례 연구, 2차피해 이해 및 피해자 지원 등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이 통합 워크숍(연 1회)
  - \*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성고충전문상담관 직무역량 강화 및 심리소진방지 워크숍(연 1회)
  - \* 초빙강연·동료 슈퍼비전·토론 / 상담관 심리소진방지 프로그램 등
- 「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국방부 - 법무부 업무협약」('21.10.14.)을 통해 군내 성폭력 피해자도 법무부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채널 마련
  - \* 피해사실 상담 접수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법무부 스마일센터(전국 16개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전국 59개소)로 연계 지원
-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지침 우선 시행('21.9.1.)
  - \*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양성평등계선으로 보고 의무화, 신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여 상담·의료·법률 조언 등 필요한 사항 지원

## □ 2022년도 시행계획

-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운용 : '21년 47명 → '22년 103명
- 성고충전문상담관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민·관·이 통합 워크숍 개최
- '22년 「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성폭력 상담관 심리상태 유지를 위한 '심리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15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중 발생 가능한 2차 피해 예방 강조 및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2,459	2,459	3,907	1,448	58.9%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 증원	48명	50명	103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기대효과

- 성폭력 사건처리 및 상담지원 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 103명('22년) → 150명('23년)
- 민·관·이 협업 하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지속)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조누리 전문경력관	전화번호	02)748-5104
------	-----	-----	--------------	------	-------------

## □ 과제개요

## ○ 사업목적

-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 담당 인력 확충 및 업무 전문성 제고

## ○ 주요내용

- 성폭력 사건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 □ 그간의 추진실적

## ○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및 전담 수사인력 보강

-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 '20년 48명 → '21년 50명
- 전담 수사인력 (국방조사본부) : '20년 8명 → '21년 10명

## ○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근거 보완 및 직무역량 강화

- 「국방 양성평등지원에 관한 훈령」 개정('21.6.1.)
  - \* 성고충전문상담관 평가 및 재계약, 처우개선 및 행정지원 보완 등
- 직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대외기관 위탁교육(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성폭력 피해사례 연구, 디지털 성범죄 이해 및 피해자 지원 등

## ○ 성폭력 피해는 양성평등계선, 군사경찰·법무 등에서 접수하며, 수사기관은 형사법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 가·피해자를 우선 분리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에서 조사
- 여성 피해자는 여성수사관 조사가 원칙이며, 국선변호사 지원
  - \* 영관급 이상 주요 성폭력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군사경찰·검찰에서 전담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 보강

- \* '21년 50명 → '22년 103명 → '23년 150명(연도예산 및 '23~'27 중기계획 반영)

-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전문 수사인력 양성
  - 성폭력 사건 처리 관계자 민간전문기관(양성평등교육원) 교육 강화
    - \* 신규 임용 법무관(수사관) 대상 교육 편성, 임무 고려 맞춤형 교육
  - 국내·외 유관기관(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시교류 및 직무교육
- 성폭력 징계 시 외부전문가(제한시 성고충전문상담관) 참여 의무화
  - 민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민간 수사기관과의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 '22. 7. 1.부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른 민간 경찰과의 성폭력 사건 처리 협조체계 구축
  - 민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소요 발굴 및 검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전담 수사인력 확대(국 조사본부)	8명	10명		

기대효과

- 「군사법원법」 개정('21.7.1.) 대비 민간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성고충전문상담관 인력 확대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 지속 마련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대령(진) 노창석	전화번호	02)748-5107
------	-----	-----	-----------	------	-------------

## □ 과제개요

### ○ 사업목적

-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징계처분 결과 통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참여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여 투명성 제고

### ○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 개최 전 위원회 일정 안내하여 참여권 보장
- 징계위원회 참석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 가능
-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 제도 마련

## □ 그간의 추진실적

### ○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 피해자에게 개최 일시 안내
-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7조·제28조

### ○ 징계처분 결과 피해자 통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 \* 징계처분결과는 개인정보 해당, 타인공개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국방위 통과(2020.11.19.)
- \* 군인사법 국방위 소위 계류 중

## □ 2022년도 시행계획

### ○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추진

### ○ 하위법령 정비(군인 징계령,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 완료	국회 제출	개정 완료 및 하위법령 정비	하위법령 정비	국회 임기만료에 따른 재추진

□ 기대효과

-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처분결과 통지를 통해 피해자의 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제도 시행 강조 공문 하달 및 관리·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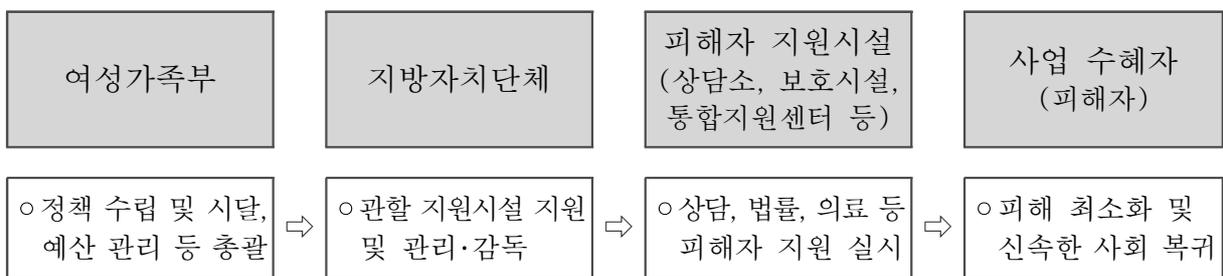
담당부서	국방부	담당자	소령 박승찬	전화번호	02)748-6818
------	-----	-----	--------	------	-------------

### 3-3-1-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 과제개요

- (목적)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의료·수사·법률·보호·숙식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추진체계

#### <지원 체계>



#### ○ 주요내용

<'21.7월 국비지원 기준, 단위:개소>

구분		주요 기능	지원 개소수	
성폭력 상담소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성폭력예방 및 홍보 등	104	81
	장애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23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34	17
	장애	장애인 피해자 대상 보호시설		8
	특별 지원	19세 미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4
	자립 지원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5
해바라기 센터	위기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서비스 제공(경찰 24시간 배치)	39	15
	아동	성폭력 피해 19세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경찰 출장)		7
	통합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 의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경찰 24시간 배치)		17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의 상담, 보호,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및 수사·재판 등 동행 지원 등

<상담소 운영 실적>

(단위 : 개소, 건, 명)

연도	개소수	상담실적			비고
		계	성폭상담	기타상담	
'19년	168	276,122	148,311	127,811	
'20년	169	258,410	153,221	105,189	
'21년		집	계	중	

-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피해자 의료·법률 지원 등

<보호시설 지원 실적>

(단위 : 건, %)

연도	총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학교 문제 지원	자립 지원	기타
	비율						
'19년	141,719	66,514	1,284	13,898	11,907	20,928	27,188
'20년	158,991	70,484	1,260	17,500	15,623	19,470	34,654
'21년			집	계	중		

- (해바라기센터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통합 제공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의료지원	심리지원	상담지원	수사·법률지원	동행 서비스	기타*
'19년	413,177	112,659	34,787	125,459	62,120	5,221	72,931
'20년	380,141	101,193	32,712	116,758	57,734	4,557	67,187
'21년			집	계	중		

\* 기타 : 정보제공, 사회적 지원(기관연계, 자조모임, 적응훈련), 가족개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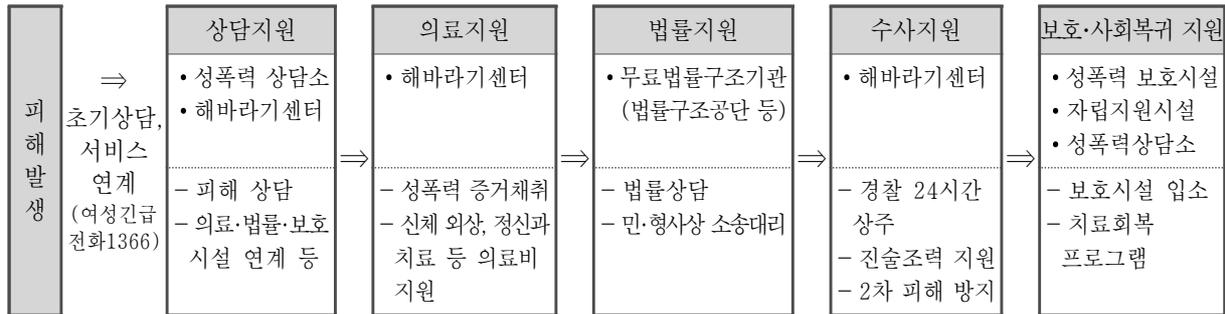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성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상담·의료·법률·수사·동행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종합형 서비스 지원

### ○ 추진 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한 상담, 의료, 법률 등의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개소(1개소) 및 성폭력상담소 신규 국비지원 (1개소)
- 해바라기센터 신규(이전) 설치 1개소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신규 인력 확충(총 27명)

### ○ 추진 방법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성폭력 피해자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개소(1개소) 및 성폭력상담소 신규 국비지원 (1개소)
- 해바라기센터 신규(이전) 설치 1개소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2/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추가 인력 배치 완료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3/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4/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개소(1개소) - 해바라기센터 신규(이전) 개소(1개소)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국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폭력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32,366	31,956	36,172	3,806	11.7%
국비	32,366	31,956	36,172	3,806	11.7%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천건)	322	집계중	338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의 성폭력 상담지원 건수의 총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년 실적대비 5%증가)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서비스 제공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을 통한 필요한 서비스 지속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서진희 사무관 정유진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6 02)2100-6395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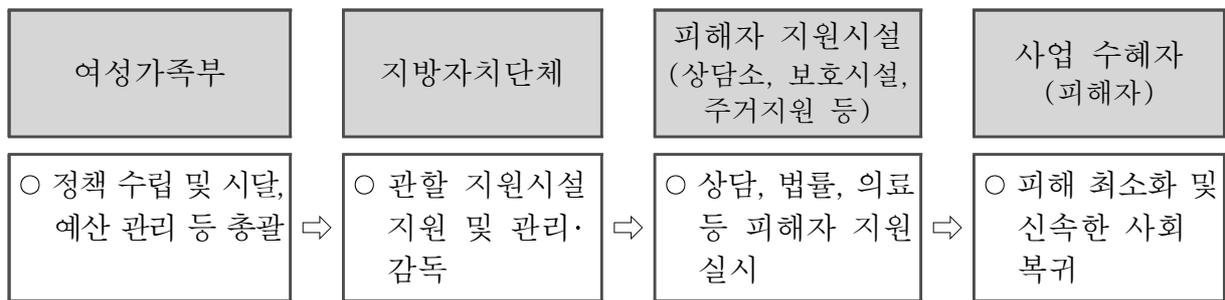
### 3-3-1-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상담·의료·보호 등을 지원하고, 무료법률지원으로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권익보호

○ (추진체계)

#### <지원 체계>



○ (주요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21년 7월 기준 / 단위 : 개소)

구 분		주 요 기 능	지 원 개 소 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365일 24시간 위기개입 상담(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7일 이내 긴급 보호), 지역관련 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17	
가정폭력 상담소	일반 (통합)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예방 및 홍보 등	128	124 (27)
	장애 (통합)			4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법률 지원, 자립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 입소기간 : 단기 6개월(3개월 연장가능), 장기 2년 이내	65	44
	가족			21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일반	폭력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2년(2년 연장가능)	25 (344호)	

- 가정폭력피해자 등 지원서비스

구분	내용	지원 실적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임산부·태아 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등	3,632명 (’21.6월)
치료회복프로그램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2,098명 (’21.6월)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가사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5,591건 (’21.6월)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를 통한 피해자 초기상담, 보호, 전문기관 연계 등 초기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국비지원 128개소) 및 상담원 추가 배치(’20년 43명, ’21년 43명)를 통한 피해자 상담지원 확대
  - 상담실적 : 205,536건(’21.6월 기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65개소), 상담원 추가 배치(’21년 65명) 및 입소 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지원실적 : 83,765건(’21.6월 기준)
- 피해자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4개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폭력 피해 형사사건 지원을 위한 내부규정 개정중
  -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가 고의·중과실이 아닌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적분쟁 발생시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제공(’21년~)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가정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상담·의료·법률·수사·동행지원 등 피해자 중심의 종합형 서비스 지원
- 추진 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및 운영개선을 시설평가 추진(3년 주기)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주여성 포함) 등
    - ’22년도 평가대비 인권진흥원 자체 지표개선 추진(~’21.11월)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점검 실시(5~8월)
  -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65개소), 주거지원시설 운영기관, 1366센터, 교육훈련시설 대상 정기 지자체 현장 점검 추진

○ 추진 방법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가정폭력 피해자 운영실적 관리(반기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 가정폭력 관련 지원 시설 현장점검(5~8월)
3/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4/4분기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등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양성평등기금)	33,145	33,027	36,176	3,031	9.1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실적 (천건)	799	740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실적, 1366 연계(지원) 실적, 가정폭력피해자(이주여성 포함) 보호시설 지원 합산

□ 기대효과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서비스 제공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사업 지속 운영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추가 배치(~23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김옥희 사무관 이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5 02)2100-6426
------	----------------	-----	--------------------	------	------------------------------

## □ 과제개요

- 스톱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식개선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18.2월)에 따라 스톱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긴급피난처 일시보호(최대 30일까지)지원
- 스톱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활용, 피해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21.4월~)
  - \*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 스톱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배포('21.9월)
  -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피해자 지원시설(617개소)에 온·오프라인 배포(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협업)
- 스톱킹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화를 위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 \* 입법예고('21.11.11~12.21.)
- 스톱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법률지원 수요 증가 예상으로 '22년 무료 법률지원사업 예산 증액
  - \* 스톱킹 일평균 신고현황('21, 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24건 → (시행 후 1개월) 102건
  - \*\*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 증액 : ('21) 2,941 → ('22) 3,195백만원 (254↑)
- 일반국민 대상 스톱킹·데이트폭력 관련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실시
  - \* '19년 총5,489회, '20년 5,241회, '21.9월말 기준 3,520회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스톱킹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18개소)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을 통해 온·오프 라인으로 긴급 상담 및 인근 지역 전문 상담소 연계
- 전국 18개 긴급피난처를 통해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법률 상담 및 치료회복 서비스 제공
-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예방 교육 확대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2/4분기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3/4분기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4/4분기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

○ 예산 현황 : 기포함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1366 상담 건수	11,440건	집계중	추후 설정	1366상담실적 통계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	<신규>	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제출여부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일시보호 등 지속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김윤경 사무관 김옥희 사무관	전화번호	2100-6422 2100-6425
------	----------------	-----	--------------------	------	------------------------

### □ 과제개요

- 신고접수 즉시 가·피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권리고지서’(관련절차, 지원기관 등 수록) 교부 등 필요정보 적시 제공
  -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한 상담·지원제도 등
-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지원 등 맞춤형 보호·지원 제공 및 사후관리

### □ 그간의 추진실적

- 「법 시행 前 스톱킹범죄 대응 강화방안」(’21. 5) 이행실태 점검·교육
  - △ 스톱킹행위자 서면경고 △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사후콜백 △ 여성안전 상담관 시범운영 △ 182상담원 교육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 「스토킹 대응 현장점검단」 운영(’21. 11)을 통해 교육현황, (긴급)응급·잠정 조치 신청, 유관기관 협업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를 점검
  - 초동조치 단계에서부터의 가·피해자 분리, 철저한 수사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 및 여성 경찰관이 상담·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피해자와 공감대 형성
  - 피해자 대상 2차 피해 안내문 교부 및 추가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팀장 면담 실시

### □ 2022년도 시행계획

- 전문기관 위탁교육 신설, 가·피해자의 행동·심리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 이해, 효과적인 상담·조사 등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성 제고
  - ※ 피해자상담·범죄심리학 인프라를 갖춘 대학과 협의, 세부 교육계획 수립
- 시·도청별 스톱킹 범죄 현황 및 정책 정보 공유, 사례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 △피해전담경찰관 지정 △여경 상담 등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의료·경제지원 등 다각적 보호조치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스토킹대응지침 시행 점검·교육 실시	-	쑤 관서 교육 완료	쑤 관서 점검·교육	

담당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이 결 경사	전화번호	02)3150-0903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박현철 경감		02)3150-1712

3-3-1-④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 과제개요

- (목적)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
-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추진체계)



□ 그간의 추진실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96개소)
  - 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진학교육),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제공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시설별	상담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시설 수	30	39	1	12	12	2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명)

연도	합계	상담소	일반·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 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21년 상반기	4,084	2,592	602	57	45	713	75
'20년	5,972	3,973	885	63	63	922	66
'19년	6,924	4,635	1,088	115	71	920	95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성매매피해자 자립·자활을 위한 종합적 지원서비스 제공(연중)
  -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의료·법률, 치료·회복을 통한 자립·자활 등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장점검(4~6월)
- 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조회(11월)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만족도 조사(2~10월) 및 결과 통보(12월)

### ○ 예산 현황

(국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양성평등기금)	15,702	15,702	17,758	2,056	13.1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131,000 (추정)	132,000	• 지난 4년간('17~'20) 추진실적 평균 (131,922건) 대비 약 0.1% 증가한 130,000건으로 목표 설정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취합중	90.7	• 지난 4년간('17~'20) 추진실적 평균 (90.2점) 대비 약 0.5점 증가한 90.7점으로 목표 설정

##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자활 지원 확대
  - 장애인 및 외국인 피해여성 증가에 따른 지원시설 지속 확충

##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정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8
------	----------------	-----	---------	------	--------------

### □ 과제개요

- 랜덤채팅앱 등 성매매로 유인된 청소년들이 피해 발생시부터 안정적인 생활과 심리적·정서적 치유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구축·운영

### □ 그간의 추진실적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 신설('20.11.20. 시행)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사업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기능을 통합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개편(21년~)
  - \* 전국 시·도별(16개소) 지원센터와 장애인 특성화지원센터(1개소) 설치·운영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등 피해발생 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 지원 강화
    - (중앙지원센터 운영) 지역센터 연계 및 총괄관리,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 협력 강화, 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성매매 예방 홍보 등
      - \* 중앙지원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 조기발견에서 긴급구조, 상담 및 치료·회복, 일시보호, 자립·자활 등 사회복귀까지 맞춤형 지원
      - \* 지역지원센터 : 전국 17개소
- 예산 현황 : 기포함
  - \* 세부사업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최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온라인 모니터링·아웃리치, 조기 발견·구조 등 성인될 때까지 종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운영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대중 사무관 김능인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35 02)2100-6446
------	----------------	-----	--------------------	------	------------------------------

### 3-3-1-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효율화 및 지원 강화

####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삭제지원 추진('20년~)
- 유포 불안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에 맞는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20년) 및 지원 실시('21년~)

#### □ 그간의 추진실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삭제지원 및 상담일지, 삭제이력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 ‘삭제지원시스템’ 구축('19)
  - \* 해외사이트, SNS, P2P에 유포된 피해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20~'21)
  - \* 피해영상물 자동수집 기능(크롤링) 연계 사이트 확대, 서버 증축 등
- 디지털 성폭력 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 디지털 성폭력 치유회복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 추진 내용
  - 피해영상물 자동수집 기능(크롤링) 연계 사이트 확대, 통계관리 기능 추가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 지자체 센터 등에서 ‘디지털 성폭력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등 홍보 확산
- 추진 방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2/4~4/4분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디지털 성폭력 치유회복 프로그램' 보급 확산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 사업  비예산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 개소)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 상담소 지정·운영	7	10	광역 자치단체별로 확대 예정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건수로 산출 * ('21) 7개소 → ('22) 10개소 → ('23) 13개소 → ('24) 17개소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보급·확산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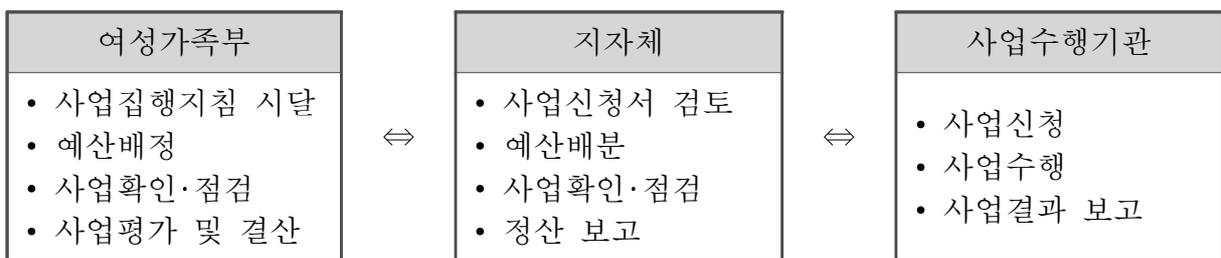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시스템' 기능 강화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보급·확산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김윤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2 02)2100-6163
------	------------------	-----	--------------------	------	------------------------------

### 3-3-2-①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가정구성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지원
- (추진체계) 중앙-지자체-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지원 추진



- (주요내용)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주거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지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자립역량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자립지원금 사용용도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등 개선
  - (사용용도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 변경
  - (지급절차 간소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시·군·구에서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자 결정 후 퇴소자에게 직접 지급 및 보호시설장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제\*를 도입
  -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구 심사위원회 심사항목 조정('21년 3개 분야 7개 항목→ 4개 항목)
- 가정폭력 피해자가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가능한 국토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전파 ('22년 지침 반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1인당 5백만원)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임대주택) 확대(↑10호)
  - \* 임대주택 지원현황 : ('20) 344호 → ('21) 354호
- 자립역량강화 시범사업(2개소) 운영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임대주택) 지원을 통한 주거지원(10호),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 등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 추진 내용
  - (주거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 지원 및 퇴소 시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
    - \* 보호시설 65개소 운영('21년), 임대주택 지원(354호)
  - (자립지원금 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 등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
    - \* 주거마련(월세, 보증금), 학자금,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
- 추진 방법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신규 기관 선정(1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운영실적(주거지원, 자립지원금) 관리(연중)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2/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3/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4/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 등 운영 지원(연중)

- 예산 현황 : 기반영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주거지원 임대주택 운영기관 확대(개소)	1	1	제도 운영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및 주거지원(임대주택 지원), 자립지원금지원 사업 지속 운영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김옥희 사무관 이윤희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25 02)2100-6426
------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근거 마련('19.7월) 및 우선공급 운영
  - 쪽방·고시원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포함·확대

## &lt;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gt;

- (근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지원대상)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침수우려 반지하 등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행정기관의 장·지자체 장·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추천한 사람 등
  - (자격요건)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우선 입주 및 보증금 감면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계약체결(상시신청, 즉시지원)

## □ 2022년도 시행계획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지침」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제도 운영
2/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제도 운영
3/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제도 운영
4/4분기	-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제도 운영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제도 운영 ○ 성과목표치 산식 : -	제도운영	제도운영	제도운영	제도운영

기대효과

- 주거가 불안정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일상생활 안정과 자립 도모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지속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긴급한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타 사항 (해당없음)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최단비 주무관	전화번호	044)201-4868
------	------------------	-----	---------	------	--------------

### □ 과제개요

-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

### □ 그간의 추진실적

- 집결지 성매매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지원(12개소)
- 심층상담 및 집결지 특성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이쉼터를 제공(열린터 운영, 10개소)

#### <성매매 집결지 지원 실적>

(단위 : 회, 건)

연도	운영 개소	아웃 리치(회)	개별 상담(건)	집단 상담(회)	의료 지원(건)	법률 지원(건)	직업 훈련(건)
'21년상반기	12	248	11,023	8	861	637	1,286
'20년	10	465	24,495	42	1,710	1,479	1,441
'19년	15	533	21,562	117	1,796	2,228	3,137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 추진
  - \* 성매매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서비스 제공
- 성매매집결지 '열린터' 운영
  - \* 심리·위기 상담, 긴급피난처 및 단기쉼터, 집결지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등
-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조사(5월)

#### ○ 예산 현황 : 기포함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 해당없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 실적에 포함됨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및 집결지 폐쇄 조치를 위한 관계부처 지속 협의

□ 기타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김정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8
------	----------------	-----	---------	------	--------------

## □ 과제개요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적근거의 일원화
  -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근거규정 마련 등
  -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 근거규정 마련(1999년~)
  - \* 성희롱 예방교육(1999년,(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성매매 예방교육(2004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교육(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합 폭력예방교육 근거규정 마련(2013년~)
  -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
  - \* 같은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7.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4.9.28.)
- 국회의원 발의(2021.3.25.) 성인지교육지원법 제정안 상임위 계류 중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의 일원화 관련 사항 검토
- 예산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법적근거의 일원화 관련 사항 검토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	----------------	-----	--------------------	------	------------------------------

## □ 과제개요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결과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 (추진절차)
    - 여성가족부 : 예방교육 운영지침 수립, 예방교육 점검(서면, 현장점검), 강사 양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부진기관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등
    - 각 기관 :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방교육 추진실적 제출

## □ 그간의 추진실적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의 예방교육 실적 점검 체계화('14년~)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15년~)
  -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별 맞춤형 개선책 제시
  - \* ('19년) 500개 → ('20년) 480개 → ('21년) 496개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예방교육 취약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450여 개 기관)
  - 컨설팅 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속)
3/4분기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계속)
4/4분기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현장점검 및 컨설팅)	329	293	329	-	-
국비	329	293	329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현장점검 대상 기관	480개	496개	450개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기대효과

○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내실화로 여성폭력방지 기반 구축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이행점검 내실화 지속 추진

- 제출실적에 대한 서면점검, 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및 기관별 맞춤형 개선책 제시, 사후관리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교육혁신팀	담당자	박건용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62
------	----------------	-----	---------	------	--------------

## □ 과제개요

- 중앙행정기관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이행상황 점검, 현장점검 등)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 \*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 여성가족부 → 관할 중앙행정기관
  - \* 각급학교(초중고 및 대학), 유치원 : 여성가족부 → 교육부(교육청)
  - \* 어린이집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지자체)
- 기관장 폭력예방교육 참여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보고대상 확대(2019년~)
  - \* 2018년 12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개정(시행 '19.6.19)
-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 상 기관 협조사항 반영(2020년~)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폭력예방교육 등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및 관리 요청
    -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는 성폭력 예방계획에 소속·산하기관 관리 사항 반영 등
  - 소속기관으로부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교육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아 지침 이행 독려
    - \* 상급기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소속기관 실적관리' 메뉴를 통해 소속기관 현황 조회 가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시 명단 공표 근거 마련(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021.10.21. 시행)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내용
  - 국무(차관)회의를 통한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결과 보고 등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지속 추진
  - 기관장 폭력예방교육 참여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속 추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국무·차관회의 상정	-	-	1회	국무·차관회의 상정 횟수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폭력예방교육 이행점검 소관부처 책무성 강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5
------	----------------	-----	---------	------	--------------

## □ 과제개요

- 폭력예방교육 전문인력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 그간의 추진실적

-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 성평등 관점을 바탕으로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전문적 수행이 가능한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 \* 활동인원 : ('17) 78명 → ('18) 166명 → ('19) 416명 → ('20) 715명 → ('21) 824명
  - 젠더기반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수행인력 양성과정 운영(93회, '21.12월 기준)
  - 특수직군 연계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5회, '21.12월 기준)
    - \* 여성변호사회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전문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63회, '21.12월 기준)
    - \* 강의 모니터링(246회), 맞춤형 전문강사 보수과정(17회)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DB(전문강사뱅크 사이트) 구축·운영

## □ 2022년도 시행계획

- 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 확대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연간 150시간 이수)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활동 인원>

(단위 : 명)

구분	'18	'19	'20	'21
인원	166	416	715	824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DB(전문강사뱅크 사이트) 구축·운영
  - 강의 모니터링, 맞춤형 전문강사 보수과정 등 운영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DB(전문강사뱅크 사이트) 구축·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 - 강의 모니터링, 전문강사 보수과정 실시
3/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계속) - 강의 모니터링, 전문강사 보수과정 실시(계속)
4/4분기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실시(계속) - 강의 모니터링, 전문강사 보수과정 실시(계속)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체예산으로 운영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명)	715	824	900	사업결과보고서

기대효과

○ 맞춤형 전문강사 역량강화로 폭력예방교육 전문인력 확대 및 질 제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 확대 및 관리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	----------------	-----	--------------------	------	------------------------------

## □ 과제개요

- 지역 현실과 이슈를 반영한 폭력예방교육의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 간 추진 체계 연계 필요성 검토

## □ 그간의 추진실적

- 17개 시·도별 학교, 직장 등에서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교육 소외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5,208회 실시(‘21.12월 기준)
  - \* 그 간 추진실적 : (‘18년) 5,363회 → (‘19년) 5,489회 → (‘20년) 5,241회
- 지역 강사 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 및 강의 품질 제고
  - \* 17개 시·도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DB 구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2022년도 시행계획

- 지역별 교육 취약계층 및 예방교육 필요 대상 적극 발굴로 교육 대상 사각지대 최소화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 및 강의 품질 제고
  - (중앙 지원 기관) 지역기관 대상 강의 모니터링, 컨설팅, 사업 평가 및 워크숍 실시를 통한 환류 및 우수 사례 발굴·확산
  - (지역 지원 기관) 지역 기관 별 강사 풀 구축, 강사 소모임 운영 및 강의 자체 점검 등을 통한 지역 강사·강의 관리체계 운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체계>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성평등 교육 간 추진 체계 연계 필요 검토 등을 통한 교육 추진력 제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2/4분기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3/4분기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4/4분기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계속) - 사업평가 및 사업 결과보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796	796	796	-	-
국비	796	796	796	-	-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개선도(점)	83.6	84.1	84.5	참여자 대상 폭력예방 이해 증진, 인식변화, 실천의지 등을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

□ 기대효과

- 지역사회 폭력예방 인식 개선 도모
-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역 기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성평등 교육과 추진 체계 연계  
강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담당자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42 02)2100-6445
------	----------------	-----	--------------------	------	------------------------------

##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확대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알맞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8개 시·도)
  - \* (교육실적) ('18) 15,198명 → ('19) 15,365명 → ('20) 14,466명 → ('21.10) 12,186명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성교육 실시(17개 시·도)
  - \* (교육실적) ('18) 2,824명 → ('19) 2,859명 → ('20) 2,853명 → ('21.10) 2,215명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성 인권 교육 내실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 향유 문화 확산
- 추진 내용
  -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콘텐츠 강화를 통한 교육인원 확대
- 추진 방법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운영(연중)
  - 학교 성 인권 교육 개편 교재 활용을 통한 교육 콘텐츠 강화('21.下)
    - \* 초등저·고학년, 중등용, 고등용 등 총 4종
  -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3, 12월),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5~10월), 우수사례 선정(12월) 및 공유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선정, 착수워크숍 실시 - 성 인권 교육 실시
2/4분기	- 성 인권 교육 실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3/4분기	- 성 인권 교육 실시, 학교 성 인권 교육 개편 교재 전면 활용
4/4분기	- 성 인권 교육 실시, 우수사례 선정, 평가워크숍 실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3,376	3,253	3,380	504	14.9
국비	556	545	556	-	-
지방비	448	448	452	4	0.9
기타	-	-	-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성 인권 교육 실적(명)	17,319	14,401*	17,100	사업결과 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22년도 중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실인원 기준)				

\* '21.10월 기준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배양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인지 감수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단계적인 강사 역량 향상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사업 내실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김영화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02)2100-6407
------	--------------------	-----	--------------------	------	------------------------------

## □ 과제개요

- 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웹드라마,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및 모바일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등
  -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기본·심화 등 단계별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미투 운동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한 핵심 콘텐츠 제공
  - 경찰, 검찰 등 법 집행과정에서의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 표준 강의안(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용),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 □ 그간의 추진실적

-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된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지원
  -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20.8월), 폭력예방교육 표준 콘텐츠 및 일반국민 대상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등 개발('20.12월)
- 수사기관 대상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강의안 및 교재 등 개발('20)
- 초중고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온라인 플랫폼 개발('21)
  - \* 학습자 수요를 고려하여 게임, 드라마, 예능 등의 다양한 형태 활용
- 고위직 대상 위계·위력에 의한 인식 차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토론중심의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21)
- 분야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자체 제작 콘텐츠 및 타부처·민간 기관이 개발한 콘텐츠를 추천콘텐츠로 선정·보급

## &lt;추천콘텐츠 제공 현황&gt;

('21년 10월, 단위 : 종)

구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총 330종	140	42	20	23	105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 등을 통해 보급

## □ 2022년도 시행계획

- 시의성 높은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대상의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의 특성고려, 교육 분야별 콘텐츠 활용가이드 및 주요 이슈, 사례중심의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 신입직원(청년),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기관담당자 등 인식개선 및 특화교육과정 개발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지속 개발
    - \* 청소년, 대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2/4분기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3/4분기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계속)
4/4분기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계속) -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결과보고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	증 감	
	예산	집행		증감액	증감률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1,205	1,205	1,205	-	-
국비	1,205	1,205	1,205	-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맞춤형 콘텐츠 개발	20종	21종	20종	예산 및 콘텐츠 개발 계획

□ 기대효과

-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보급
- 교육대상에 대한 수요분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시의성 있는 교육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보급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교육혁신팀	담당자	주나경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63
------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체험 중심의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주요내용)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인지적 성교육 실시 \* 청소년성문화센터 57개소  
\* (교육실적) ('20) 1,031천명 / ('21.상반기 기준) 681천명
-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 교재·교구 교체 지원  
\* '20, 21년 각 20개소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및 방법
  -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춘 성교육 실시 및 이동형 센터 교구 교체 지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실시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성문화센터 사업 1차 보조금 교부 및 아동·청소년 성교육 실시 - 교재교구 교체 보조금 교부 - 청소년성문화센터 매뉴얼 개발 공모 및 보조금 교부
2/4분기	- 성문화센터사업 2차 보조금 교부
3/4분기	- 성문화센터사업 3차 보조금 교부
4/4분기	- 성문화센터 현장점검 및 결과조치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청소년육성기금)	5,669	5,669	5,968	299	5.3
국비	4,570	4,570	4,764	194	4.2
• 기금(청소년육성기금)	4,570	4,570	4,764	194	4.2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아동·청소년 성교육 참여인원(천명)				
○ 성과목표치 산식 : 최근 5년간 센터 교육참여율*을 β분포 방식으로 계산한 표준치  *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시스템 (6세~19세 아동·청소년 수×100)	1,031천명	681천명*	1,299천명	○ 최근 5년간 실적치의 베타분포방식 표준치

\* 21.7월 기준

□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 및 성범죄 피해 예방
- 매뉴얼, 정형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 교육서비스 제공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증액 및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실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정수경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03 02)2100-6405
------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 예방·홍보 강화(여가부)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신규 실시('19년~)
  - 폭력 유형별 예방 홍보 영상 제작 및 방송사업자 등 송출 요청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20년~)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

## □ 그간의 추진실적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 성희롱·성폭력 근절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 2차 피해 방지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7월~11월), 긴급전화센터 1366 홍보 콘텐츠 제작(7월~11월), 웹포스터 제작(7월~11월), 유튜브, TV 등을 통해 콘텐츠 확산(12월)
- 여성폭력 추방주간 계기 다양한 행사와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 여성긴급전화 1366 홍보 영상 송출(유튜브, 버스 등) 및 가정폭력 근절 셀럽(연예인 등) 캠페인 홍보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유튜브) 및 이주여성 폭력 예방 안내서 제작·배포(13개 국어)
  -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 교통방송 라디오캠페인('20.3.30~), 지면광고(매일경제, 서울신문), 지하철 및 KBS TV 자막 광고, 웹포스터, 인스타툰, 카드뉴스 등 활용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작·배포('20.4.8)
  -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영상(4편) 제작·송출('21.12)
    - \* (주제) 온라인 그루밍,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합성물, 경찰 위장수사 등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도원결의(2편)' 제작·송출(문체부 협업, '21.9~ 11월)
- \* 배우 곽도원 출연으로(1인 3역)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 검찰, 판사가 불법 촬영물의 시청, 소지는 불법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상시)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 홍보물·동영상 제작, 캠페인, 이벤트 등 추진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업 홍보 추진
  -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관련 부처별 정책 홍보, 홍보물 제작 및 확산, 캠페인 전개
- 여성폭력 추방주간 계기 다양한 행사와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지속 전개
- 이주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일반국민 대상 이주여성 인식 개선 홍보, 폭력피해 이주여성 피해자 대상 지원 등 홍보 강화
-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홍보·캠페인 전개(상시)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인식 개선도	83.6	84.1	84.5	사업결과 보고서

## □ 기대효과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이희연 사무관 김병수 주무관	02)2100-6392 02)2100-6429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송재언 사무관 최수린 주무관	02)2100-6442 02)2100-6445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김지연 사무관 김윤정 주무관	02)2100-6162 02)2100-6163

### 3-4-2-②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 □ 과제개요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운영

#### □ 그간의 추진실적

- 2020년부터 ‘제1회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과 통합하여 운영(11.25~12.1), 2021년 ‘제2회 여성폭력 추방 주간’ 운영
- 여성폭력 추방주간계기 온오프라인 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전개(11월~12월)
  - 여성폭력 추방주간 주제영상 제작·송출, 온라인기념식 및 토론회(11.25),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11월~12월), 기념영상 및 포스터 대중교통 홍보(KTX, 지하철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 여성폭력 관련 정보 및 예방 영상 자료, 온라인 캠페인 운영 등
- 여성폭력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폭력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및 대국민 참여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방지 콘텐츠 공모전 실시
  -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 계기 광고 등 캠페인 실시
- 예산 현황 : 기반영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여성폭력 추방주간 및 예방홍보 사업	1회	1회	1회	사업결과보고서

□ 기대효과

- 성매매 추방주간 및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을 통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정보를 알리고 대국민 인식개선에 기여
-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이벤트 및 다양한 채널(대중교통, 공중파, SNS 등)을 활용해 영상 송출, 여성폭력에 대한 국민 관심을 견인, 주체적인 참여 기회 마련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추방주간(11.25~12.1.) 전후로 여성폭력방지 홍보캠페인 추진(매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김창후 사무관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06 02)2100-6307
------	----------------	-----	--------------------	------	------------------------------

4-1-1-①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

□ 과제개요

- 성차별적 인식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젠더폭력을 방지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

□ 그간의 추진실적

-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 또는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
  - \* 박광온 의원안(‘17. 7. 발의) 등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 현재 류호정 의원안(‘20. 8. 발의)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형법」 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	관련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관련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법률 개정	검토 자료, 법률 개정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경화 검사	전화번호	02)2110-3564
------	--------------	-----	--------	------	--------------

### □ 과제개요

-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관한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해외 입법례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법체계 연구 등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 \* 홍철호('18. 3. 발의) 등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 / 백혜련 의원안('20. 7. 발의), 류호정 의원안('20. 8. 발의), 소병철 의원안('21. 9. 발의)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관련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법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검토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검토 사항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경화 검사	전화번호	02)2110-3564
------	--------------	-----	--------	------	--------------

## 4-1-1-③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개선 방안 마련

###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 성범죄 자료·해외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방안 마련
  - 법정형 강화, 처벌대상 확대, 공소시효 정지·폐지 등

### □ 그간의 추진실적

- '19. 8.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
- '20. 5. ▲의제강간 연령 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간음·추행죄 공소시효 폐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법정형 상향(벌금형 삭제하여 징역형만 가능) 등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성폭력처벌법」 개정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 완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의제강간 연령 상향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이경화 검사 (형법) 장태형 검사(성폭법)	전화번호	02)2110-3564 02)2110-3558
------	-----------	-----	----------------------------	------	------------------------------

###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서 ‘공박한 상태’에 관한 입증 실효성과 관련하여,
  -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현재 만 13세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연령 상향과 관련한 형법상 개정 방향을 고려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 제기

### □ 그간의 추진실적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8조의2 신설('19.1월)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
- 형법 개정을 통해 의제강간 보호 연령 확대 완료('20.5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형법상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 상향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개정 실익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
2/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 계속
3/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 계속
4/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 계속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 형법상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 상향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개정 실익 검토하여 법 체계 상 적합성 제고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 계속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 □ 과제개요

- 지나치게 복잡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통합·정비하여 국민 입장에서 처벌 대상을 알기 쉽게 하면서 처벌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 검토

\*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규정 분산

## □ 그간의 추진실적

- '20. 5. 형법 및 성폭력 관련 특별법 처벌규정 재정비를 위해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대응 TF' 안건으로 상정, 추진방안 논의
- '20. 7. 법제 통합·재정비를 위한 개정 초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 시행 ('20.12. 결과 회신)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연구용역 결과 면밀히 분석한 후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형법」, 「성폭력 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상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통합 방안 추진 검토

\* 법무부 소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처벌규정 통합안을 마련하되, 「청소년성보호법」까지 통합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 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 통합안 검토	관계부처(여가부 등)와 추진 방안 협의, 연구용역 발주	연구용역 결과 분석	관계부처(여가부 등)와 추진 방안 협의	검토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검토 자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장태형 검사	전화번호	02)2110-3558
------	--------------	-----	--------	------	--------------

## □ 과제개요

- 성폭력 범죄의 행위 태양, 피·가해자 특성 등을 기준으로 각 법률(형법·성폭력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구분되어 있는 처벌 규정 통합 검토

## □ 그간의 추진실적

-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관련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는 개정안 발의(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18.8월,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2/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계속
3/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계속
4/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계속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 기대효과

- 처벌 규정 통합 실익 및 법 체계 상 정비 검토

##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필요성 검토 계속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 □ 과제개요

-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 및 병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 확대 등
-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전문가 지원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 □ 그간의 추진실적

- 보건의료기관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수립 및 사건 발생 시 조치 규정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19.10.24. 시행)
-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대응 교육 실시 및 의료인 성폭력 예방·관리 매뉴얼 마련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의료기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병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19.6월, '21년 연중)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복지부·병협 공동 발간) 하여 전국 병원에 배포('18.12월), 인권침해 예방 영상 제작('21.10월)
-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지정 및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운영('20년~)
  -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등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20.12월)
  -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하고 상담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추진 중('21.8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추가 배포
    - \* 기 개정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추가 배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인식 전환 강화

-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및 상담체계 내실화 등 기능 강화
  - 인권침해 상담 가이드·매뉴얼 제작, 교육 표준안 제작 등 상담센터 전문성 강화
  - 인권침해 예방 홍보영상,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센터 홍보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대응 매뉴얼 추가 배포 및 인권교육 수요조사 및 대응교육 실시
  - \* 대한병원협회 협력을 통한 일반, 심화 교육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대응 매뉴얼 추가 배포 및 인권교육 수요조사 - 인권침해 상담 가이드·매뉴얼 제작 및 예방 홍보영상 제작
2/4분기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일반, 심화) - 인권침해 상담지원 및 교육
3/4분기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일반, 심화) - 인권침해 상담지원 및 교육
4/4분기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일반, 심화) - 인권침해 상담지원 및 교육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의료인력양성및적정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328	200	612	284	86.6%
국비	328	200	612	284	86.6%

○ 성과지표

성과목표(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①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 및 배포(완료)	매뉴얼 개정·배포 (완료)	매뉴얼 개정·배포 (완료)	-	-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심화 교육 실시(연 2회)(추가)	-	-	심화교육 실시(연 2회)	교육 결과보고서
○ 인권침해 상담 매뉴얼 및 홍보영상 제작(각 1건)(추가)	-	-	인권침해상담 매뉴얼(1건) 홍보영상(1건)	인권침해상담 매뉴얼, 홍보영상

□ 기대효과

-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의료인 인권교육 강화 및 홍보를 통해 의료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자	진상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243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주정민 사무관		044)202-2692

## 4-1-2-①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대상 범위 확대
- 가정폭력 범죄 유죄 판결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 규정 신설 및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 추가하고, 가정폭력 범죄 유죄 판결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 규정 신설 및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20.10.20. 공포, '21.1.21. 시행)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 완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장태형 검사	전화번호	02)2110-3558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및 피해자 등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도모

□ 그간의 추진실적

- '19. 3., '19. 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2차 피해 방지 교육,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 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19. 11.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정폭력 공동연구 결과 발표
  -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초부터 전문연구검사와 실무협약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하여 연구결과 발표
- '20.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 가정폭력 사건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검사 결정전조사 제도 도입
- '20. 6.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개정
  - 가정폭력 상담(교육)위탁서 서식 개정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작업 진행
- '21. 11. 전국 여성·아동범죄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개최
  -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등 관련 주요 쟁점, 수정·보완 사항 정리 등 논의

□ 2022년도 시행계획

- 가정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전국 청 배포 및 적극 활용(연중)
  - 기존 가정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제작·배포하여 관련 수사에 적극 활용
- 가정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이행 강화 및 지속적 점검·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사범 엄정 대응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해	당	없	음	
국비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가정폭력사범 기소율(%)		9.16%		
○ 성과목표치 산식 : 처분인원 대비 기소인원 비율	10.14%	('21.1.~ '21.10.)	10.00%	

□ 기대효과

-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및 피해자 등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도모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가정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이행 강화 및 지속적 점검·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사범 엄정 대응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과제개요

- 가해자의 신속한 격리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법 체포 추가’
-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 추가
-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에서 특정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추가
- 임시조치 요청주체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서 ‘가정구성원’까지 확대

□ 그간의 추진실적

-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하고, 임시조치에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위탁’을 추가하며,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에서 특정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추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20.10.20. 공포, ’21.1.21. 시행)
-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송기헌 의원 등 대표발의(’19.11. 및 ’20.9.)
    - \* ’19.11. 발의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후 ’20.9. 재발의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신청권자의 범위를 가정구성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 지속추진
    - \*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자에 ‘가정구성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우 ’20.9.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신청권자의 범위를 가정구성원까지 확대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실제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절차가 남용되어 가정의 해체를 부추길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입법 내용에서 제외됨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장태형 검사	전화번호	02)2110-3558
------	--------------	-----	--------	------	--------------

## 4-1-2-④ 임시조치 집행력 제고를 통한 피해자 안전 확보

### □ 과제개요

-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로 처벌 강화
-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그간의 추진실적

-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로 처벌 강화, 접근금지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20.10.20. 공포, '21.1.21. 시행)
-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송기헌 의원 등 대표발의('19.11. 및 '20.9.)
  - \* '19. 11. 발의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후 '20.9. 재발의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장태형 검사	전화번호	02)2110-3558
------	--------------	-----	--------	------	--------------

## 4-1-2-⑤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및 기간 확대

### □ 과제개요

-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6개월 → 1년) 및 총 처분기간(2년 → 3년) 연장

###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합산 처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20.10.20. 공포, '21.1.21. 시행)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완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 완료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과제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입법 완료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장태형 검사	전화번호	02)2110-3558
------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폭행, 존속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여부 검토

##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 범죄(폭행, 존속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 이태규('17.12.), 고용진('19.3.), 채이배('19.5.), 송희경('19.7.) 의원 등 대표발의
    -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각 법안은 폐기
  - 고용진('21.1.), 강선우('21.3.) 대표발의
    - \* 현재 법사위 1소위 계류 중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국회 입법 논의 적극 지원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입법 논의 지원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법률 개정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장태형 검사	전화번호	02)2110-3558
------	--------------	-----	--------	------	--------------

## □ 논의배경

- 「가정폭력처벌법」 상 피해자 의사 존중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형법」에 폭행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존재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 후 입건,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 사건 처리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존속)폭행, (존속)협박, 명예훼손

## □ 필요성

- 피해자는 부부관계, 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 보복 우려 등으로 가해자 처벌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폭력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학습된 무기력 증후군 등이 있을 수 있음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2022년도 시행계획 : 과제 종료

- 가정폭력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개정 지원

\*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비예산 사업

##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김윤경 사무관	전화번호	2100-6422
------	----------------	-----	---------	------	-----------

## □ 과제개요

- 스톱킹 죄목 신설 및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가해자를 처벌 하도록 규정
-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규정 마련
- 스톱킹범죄 전담 경찰관·검사 지정 및 피해자 조사

## □ 그간의 추진실적

- 스톱킹처벌법안 제정 추진
  - '18. 5. 10. 「스토킹처벌법」 정부안 입법예고 실시
  - '18. 6.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등 의견 반영·협의 진행
  - '19. 9. 「스토킹처벌법」 법제처 심사 의뢰
  - '20. 6. 법제처 심사 완료
  - '20. 9. 차관회의 의결
  - '20. 11. 27. 재입법예고
    - \* 차관회의 의결되었으나, 관련부처 이견 해소를 위해 추가 의견조율 진행
  - '20. 12. 24. 차관회의 의결
  - '20. 12. 29. 국무회의 의결 후 「스토킹처벌법」 정부안 12. 30. 국회 제출
  - '21. 3. 24. 「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1. 4. 20. 「스토킹처벌법」 공포
  - '21. 7. 6.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공포
  - '21. 9. 24.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관련된 수사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령안 공포
  - '21. 10. 21. 「스토킹처벌법」 등 시행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를 추적·관찰한 후 전문가 의견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스토킹처벌법」 제정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스토킹처벌법」 제정 완료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 추적·관찰	검토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검토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장태형 검사	전화번호	02)2110-3558
------	--------------	-----	--------	------	--------------

### □ 과제개요

-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 방안 검토

### □ 그간의 추진실적

-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 박광온('17.8.), 표창원('17.8.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표창원('17.9. ※폭력행위처벌법), 신보라('17.11.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원 등 대표발의
    -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각 법안은 폐기
  - 윤영석('20. 11.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원 대표발의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데이트 관계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해외입법례 등을 토대로 21대 국회에 발의된 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가정폭력처벌법 적용범위를 동거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관련 법안 국회 논의 지원, 해외 입법례, 논문 등 검토	검토 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검토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장태형 검사	전화번호	02)2110-3558
------	--------------	-----	--------	------	--------------

#### 4-1-4-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공백 보완

##### □ 과제개요

- 합성사진(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물 등 개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성적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검토

##### □ 그간의 추진실적

- 입법 완료
  - '20. 3. 5.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 3. 17. 개정 「성폭력처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20. 3. 24. 개정 「성폭력처벌법」 공포
    - \* '20. 6. 25. 시행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 완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입법 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과제완료)
○ 성과목표치 산식 : 법률 개정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장태형 검사	전화번호	02)2110-3558
------	--------------	-----	--------	------	--------------

## 4-1-4-② 신중 온라인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검토

### □ 과제개요

- 영상·사진外 온라인을 통한 문자 형태의 성폭력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의 온라인 여성폭력 방지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18. 12. 불법촬영물 처벌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
  -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그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 상한 상향
  - 유포의 객체에 복제물 추가
- '20. 5. 중대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비·음모 규정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 완료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및 경찰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지원('21.9. 시행)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과제 지속 추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문자 형태의 성폭력 등 신중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필요성 검토	관련 법안 검토, 국회 논의 지원			

담당부서	법무부 형사법제과	담당자	장태형 검사	전화번호	02)2110-3558
------	--------------	-----	--------	------	--------------

## 4-1-4-③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과

### □ 과제개요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추진
  - \*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가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18.9월)
  - \* 성폭력방지법 개정('18.3.13.), 시행('18.9.14)
- 구상권 청구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추진('20.12월)
  - \* 여가위 소위 계류중
- 디지털 성범죄 발생·검거 및 신고 현황 분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체계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21.6~12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삭제지원 소요비용 청구 등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입법 보완사항 검토
- 추진 내용
  - 구상권 행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자료 요청 권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
- 추진 방법 : 입법 추진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4/4분기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입법 보완사항 검토 - 관계부처 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 회)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0	2	구상권 관련 입법 추진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 관계기관 업무협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산출

기대효과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범죄 유발요인 억제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입법 추진 검토 등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김윤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2 02)2100-6163
------	------------------	-----	--------------------	------	------------------------------

## □ 과제개요

- ‘온라인 그루밍’ 관련 정의·구성요건 등 종합적 검토 및 실제사례 등을 통한 범죄특성 현황 분석 등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신종 온라인 성범죄 대응 관련 연구 2건 추진 등 ‘온라인 그루밍(성적 목적의 유인·길들이기)’에 대한 논의 추진
-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권인숙('20.6월)·진선미의원('20.8월) 대표발의), 개정 완료('21.3월)
-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험 요인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21.9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온라인 그루밍 및 메타버스 상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범죄 발생 동향 및 추세 등 모니터링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연구
2/4분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연구 계속
3/4분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연구 계속
4/4분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연구 계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50	45	50	-	-
국비	50	45	50	-	-
• 일반회계	50	45	50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연구	연구 추진	연구 완료	연구 추진	○ 연구 완료 여부
○ 성과목표치 산식 : 연구 완료 여부				

기대효과

○ 온라인 그루밍 및 메타버스 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발생  
추세 등 현황 파악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계속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 □ 과제개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서 ‘궁박한 상태’에 관한 입증 실효성과 관련하여,
  -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현재 만 13세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연령 상향과 관련한 형법상 개정 방향을 고려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 제기

## □ 그간의 추진실적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8조의2 신설('19.1월)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
- 형법 개정을 통해 의제강간 보호 연령 확대 완료('20.5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형법상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 상향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개정 실익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
2/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 계속
3/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 계속
4/4분기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 계속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 형법상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 상향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개정 실익 검토하여 법 체계 상 적합성 제고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검토 계속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차효인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05
------	--------------------	-----	---------	------	--------------

## □ 과제개요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 마련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민법 제766조 제3항 신설)
-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권리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미성년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 그간의 추진실적 : 과제 완결

- '18. 3. 법무부, 범정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미성년자 성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유예 특례 도입 추진 결정
- '18. 3. ~ 5. 학계 의견 수렴 등 개정안 마련
- '18. 6. 입법예고(6.11. ~ 7.23.) 및 관계부처 협의(6.11. ~ 7.9.)
- '18. 8. 31. 법률안 국회 제출(11.9. 법사위 소위 회부)
- '18. 11.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법원행정처 법안 설명
- '19. 3.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실, 주요 당 간사실 법안 설명
- '20. 5. 21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재추진
- '20. 5. ~ 6. 입법예고(5.19. ~ 6.8.) 및 관계부처 협의(5.19. ~ 5.29.)
- '20. 7. 3. 법률안 국회 제출
- '20. 9. 24. 국회 본회의 통과
- '20. 10. 20. 개정 법률 조항(민법 제766조 제3항) 시행

2022년도 시행계획

- 과제 완결(법률안 통과 및 시행)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0년)	목표치 (2021년)	산출근거
○ 국회 법안 통과(100점)	법률 개정	과제 완결	법률안 통과 및 시행

2021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과제 완결. 이후 추진계획 없음

기타 사항

- 과제 완결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고은섭 법무관	전화번호	02)2110-3799
------	---------------	-----	---------	------	--------------

### □ 성매매 수요차단으로의 정책 전환

- 성매매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지속적 단속 추진
  - 성매매 관련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지도·단속 (사업정지, 경고·시정조치)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안정법 위반사항 적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21년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법 위반 138건 적발('20년 137건)
    - \* (20년) 등록취소 25, 사업정지 14, 경고·시정 93, 과태료 5
    - (21년) 등록취소 16, 사업정지 41, 경고·시정 78, 과태료 3
  - '21년 직업정보제공사업 법 위반 20건 적발('20년 81건)
    - \* (20년) 사업정지 13, 경고·시정 68
    - (21년) 사업정지 4, 경고·시정 16
  - '21년 거짓구인광고 신고포상금 7건 지급('20년 3건)
    - ※ 성매매 관련 위반사례는 없음
- 유흥업소[보도방]의 코로나19 방역, 불법직업소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찰·자치단체·지방고용노동관서 합동단속 실시('21.7월, 3회)

### □ 2022년도 시행계획

- 성매매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직업소개사업소 등에 대한 단속 및 자치단체 협력 강화
  - 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청 지도단속 강화 협조 지속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유흥업소 불법 구인광고 지도단속 강화 지속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2/4분기	- 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3/4분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4/4분기	- 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지도단속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직업안정법 위반 적발 (건수)	218	158	200	2년 실적평균 대비 5% 상향
○ 성과목표치 산식 : 직업안정법 위반 적발 건수				

기대효과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지도·단속(사업정지, 경고·시정조치) 강화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 건전성 제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사항

- 성매매 단속은 수사권이 없는 자치단체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진 함에는 한계가 있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이계승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333
------	-------------------	-----	---------	------	--------------

#### 4-1-6-① 성매매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지속적 단속 추진

##### □ 시·도경찰청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 및 성매매 단속 강화

- <풍속수사팀 확대운영> △실업주 추적 △건물주 입건 △범죄수익금 환수 등 재영업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풍속수사팀 운영 확대

- 풍속수사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中 15개청 167명 운영 중, 단계적 확대추진
- 단속·수사체계를 일원화한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으로 단속, 수사 부서에서의 반복 조사 등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침해 방지 추진

- 풍속수사팀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금(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추적수사 기법 및 사이버수사 등 교육 강화

- <성매매 단속 강화> 온라인 이용 성매매 등 접근 경로 변화에 맞춰 테마별 (온·오프라인 성매매 등) 단속 및 범죄수익금 환수 등 근원적 차단 활동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21년)

- 시·도경찰청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20년 14개청 → '21년 15개청) 및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으로 2,916건 단속, 6,627명 검거(구속 192명)
- 범죄수익금 환수 등 재영업 행위 억제 등 근원적 차단 활동 추진
  - ※ 기소 전 몰수보전(251건, 217억), 과세자료 통보(360건, 2,671억)
- 관계부처(여가부·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합동, 성매매집결지 점검 지속 실시
  - ※ 적극적인 단속, 재개발 추진 등으로 업소수 감소('20년 519개 → '21.11월 241개)

##### □ 2022년도 시행계획

- <성매매 단속 강화> 성매매 플랫폼 변화에 맞춰 온라인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 및 관계기능·부처(여가부, 지자체 등) 합동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온라인 성매매	① 성매매알선사이트 연계 오피스텔·성매매업소 단속(4~5월)
	②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진 추적수사 및 사이트 폐쇄(연중)
	③ 성매매광고차단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성매매알선 광고 차단(연중)
오프라인 성매매	① 지역협의체(여가부·지자체·교육부 등) 합동 성매매집결지 등 점검·단속(연중)
	② 교육청·지자체와 협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폐쇄조치(3월, 9월)

- <근원적 차단 활동> △알선자 추적 △건물주 입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과세자료 통보(국세청) 등 적극 추진으로 불법 성매매업소 재영업 차단
- <풍속수사팀 역량 강화> △범죄수익금 환수 △성매매사이트 운영진 검거 등  
성매매 단속 후 추적수사 및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  
※ 풍속단속·수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등 확대(경찰인재개발원, 연 12회 180명)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성매매 사범 단속(건)	2,916	3,061	KICS 통계

담당부서	경찰청 생활질서과	담당자	송두한 경위	전화번호	02)3150-1396
------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 12. 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성매매 범죄 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구매자들의 처벌 환경 조성 필요

## □ 그간의 추진실적

- '19. 3., '19. 10. 여성·아동분야 타겟형 교육 실시
  - 성매매 등 성폭력 사건처리기준 철저 준수 및 성폭력·아동학대 수사시 유의사항 등 전국 여성·아동 전담검사 대상으로 타겟형 교육 실시
- '20. 6.,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성매매 등 성폭력사건 형사절차 개관 및 수사시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
- '20. 11. 성폭력·아동학대 관련 사건 고소인(고발인) 통지시스템 개선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 관련시스템 개선
- '21. 7~.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아동범죄 대응 TF’ 구성·운영
  - 성매매 등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작업 진행
- '21. 3., 10. 여성·아동분야 저년차 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인신매매 수사실무 등 성매매 관련 교육 실시

## □ 2022년도 시행계획

-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배포 및 적극 활용(연중)
  - 기존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고 책자로 제작·배포하여 관련 수사에 적극 활용

- 아동·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일선청 사건처리지침 송부(연중)
  -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행위 등은 원칙적 구공판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이 16세 미만이거나 재범인 경우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의 사건처리지침 준수를 지시하여 아동·청소년 상대 성구매자 엄정 대응
-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로 범행 동기 차단(연중)
  -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한 철저한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박탈, 동기 차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해	당	없	음	
국비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구매자 기소율(%)	33.29%	29.58%	33.00%	검찰통계 시스템
○ 성과목표치 산식 : 처분인원 대비 기소인원 비율		('21.1.~'21.10.)		

기대효과

- 성구매자 등 성매매 사범 엄정 대응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대검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대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도모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관리)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피해자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지원)
- (주요내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보호(지원)시설 등 폭력유형별 지원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서비스 점점 확대
    - \* 성폭력피해 상담소 : ('21년) 168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21년) 35개소
    - 해바라기센터 : ('21년) 39개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종사자 확대로 피해자 지원 서비스 내실화('19년)
    - \* 성폭력피해 상담소(104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30명),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39명)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개소, 그룹홈 1개소 신규 설치로 지원서비스 기반 확대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피해자 접근성 제고(연중)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추가 인력 확충(연중)
- 추진 내용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확대(1개소)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추가 인력 확충(총 27명)

-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신규(이전)설치 1개소
  - \*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추가 인력 확충(총 33명)

○ 추진 방법

-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개소 1개소
- 해바라기센터 신규(이전) 설치 1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예산 교부(매분기별)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li> <li>-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li> <li>-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1/4분기)</li> </ul>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li> <li>-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li> <li>-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해바라기센터 추가 인력 배치 완료</li> <li>-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2/4분기)</li> </ul>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li> <li>-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li> <li>-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3/4분기)</li> </ul>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li> <li>-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리·운영 지원(계속)</li> <li>-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개소(1개소)</li> <li>- 해바라기센터 신규(이전) 개소(1개소)</li> <li>-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기관 운영 지원 예산교부(4/4분기)</li> </ul>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국비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성폭력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32,366	31,956	36,172	3,806	11.7%
국비	32,366	31,956	36,172	3,806	11.7%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양성평등기금)	6,410	6,297	7,548	1,138	17
국비	6,410	6,297	7,548	1,138	17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피해자의 시설 접근성 제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시설 접근성 강화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 제고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서진희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96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정유진 사무관		02)2100-6395
			양현순 서기관		02)2100-6424
			최윤미 주무관		02)2100-6428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전반적인 지원서비스의 수준 제고
  -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소진방지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적정한 근로환경 제공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관리)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서비스 지원, 사업정산 보고 등)
- (주요내용) 종사자의 유형별, 경력별 맞춤형 보수교육 실시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운영(총 4,873명 수료)
  - 여성폭력방지 전문상담원 양성(92명 수료)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4,781명 수료)
    - \* (성매매방지) 보수교육 698명 수료
    - \* (성폭력방지) 보수교육 927명 수료
    - \* (해바라기센터) 보수교육 638명 수료
    - \* (가정폭력방지) 보수교육 1,715명 수료
    - \* (여성긴급전화1366) 보수교육 566명 수료
    -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수교육 189명 수료
    - \* (기타 :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보수교육 48명 수료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대상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진 방지 및 사기진작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운영
    - \* 4회, 66명 참여('21년 하반기 운영)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 사항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운영
-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 대상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진 방지 및 사기진작

○ 추진 내용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자살예방교육\* 등 실시(연중)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대상 직무 역량강화교육,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등 실시(~'22.12월)

\* 보수교육 사업 진흥원 이관 및 예산증액에 따라 게이트 키퍼 등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

○ 추진 방법

- 여성폭력방지 전문상담원 양성(진흥원)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진흥원)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연중)
2/4분기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연중)
3/4분기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연중)
4/4분기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연중)

○ 예산 현황 : 기반영

- ※ 종사자 보수교육 예산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음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 진흥원 이관('22)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수료자 수	4,781	5,020	보수교육 수료자 수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속 추진
- 입소자의 심리적 불안, 정신장애로 인한 종사자 소진예방 지원금 인상 등 현실화 방안 마련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자	김은신 사무관 장좌영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98 02)2100-6397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김옥희 사무관 이윤혁 주무관		02)2100-6425 02)2100-6426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조 린 서기관		02)2100-6435

### □ 과제개요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 상담 및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을 통해 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심리·법률·의료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 및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개선 등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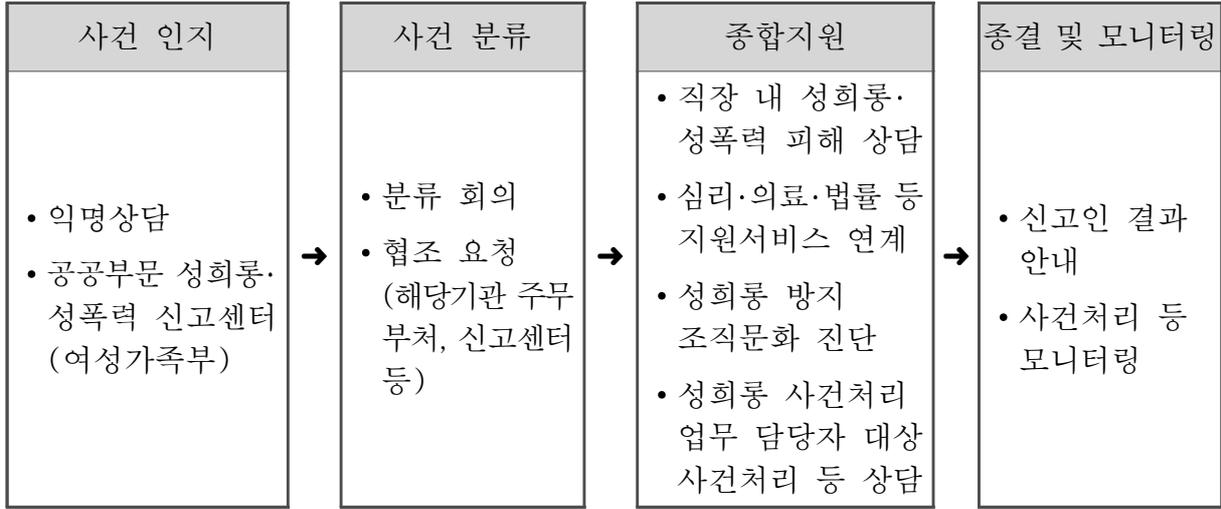
- '20. 1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
- '20. 3월 : 종합지원센터 본격 운영, 컨설팅 및 사건처리지원단 접수·공모
- '20. 12월 : 기관장 사건 전담신고 창구 개설 · 운영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시행('21.10.21.~)에 따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신설 등 공공부문 기관 내 성희롱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 집중 추진
- 추진 내용
  - 익명상담전화(02-735-7544) 운영
  - 피해자 지원 연계 : 피해자 초기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 등 지원기관 연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기관 내 성희롱 예방과 사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 사건처리 상담 : 성희롱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사건처리 절차 상담, 전문기관 정보 제공 등

○ 추진 방법

- 피해자 보호 종합 지원 및 사건처리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li> <li>- 성희롱 조직문화 진단 수요 파악 및 운영</li> <li>-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li> </ul>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li> <li>-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li> <li>-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li> </ul>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li> <li>-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li> <li>-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li> </ul>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지원 서비스 연계</li> <li>-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li> <li>- 기관 내 사건처리 업무 담당자 대상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등 상담</li> </ul>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금 재원으로 추진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건수	-	-	100개소	'22년 신규지표 (사업결과보고서)

□ 기대효과

-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초기상담 등 피해자 중심의 신고시스템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종합 지원
- 공공기관 등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역량 강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	임수연 사무관 전국혜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64 02)2100-6166
------	------------------	-----	--------------------	------	------------------------------

## □ 과제개요

- 젠더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범부처 통합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이행점검의 주기적 환류를 통한 정책 이행력 제고
  - 5년 단위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부처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의 체계적인 환류체계 구축

## □ 그간의 추진실적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심의·확정('20.2월)
- 2020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0.5월)
  - \* 18개 부처 128개 과제, 17개 시·도 시행계획 확정
-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21.3월)
  - \* 19개 부처 119개 과제, 17개 시·도 시행계획 확정
- 2020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21.4~10월)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추진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분석·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 추진 내용 및 방법
  - 기본계획 과제 이행력 제고, 정책 추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지침 보완·개선
    - \* '20년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 반영하여 분석·평가 지표, 작성항목 보완 등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022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안) 마련('22.2월)
2/4분기	-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지침 안내('22.4월)
3/4분기	-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22.7~9월)
4/4분기	-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 공유 및 2023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안내('22.10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1,865	1,640	2,341	476	25.5
국비	1,865	1,640	2,341	476	25.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분석·평가 지침 개정	-	분석·평가 지침 마련	분석·평가 지침 개정 * '20년 분석·평가 결과 반영	분석·평가 지침(공문)
○ 성과목표치 산식 : -				

기대효과

○ 부처별 여성폭력방지정책 이행력 제고를 통해 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의 여성폭력 방지체계 구축 강화,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매년)

기타 사항

○ 관련 부처·기관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분석·평가 결과 적극 반영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김창후 사무관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06 02)2100-6307
------	----------------	-----	--------------------	------	------------------------------

## 4-3-2-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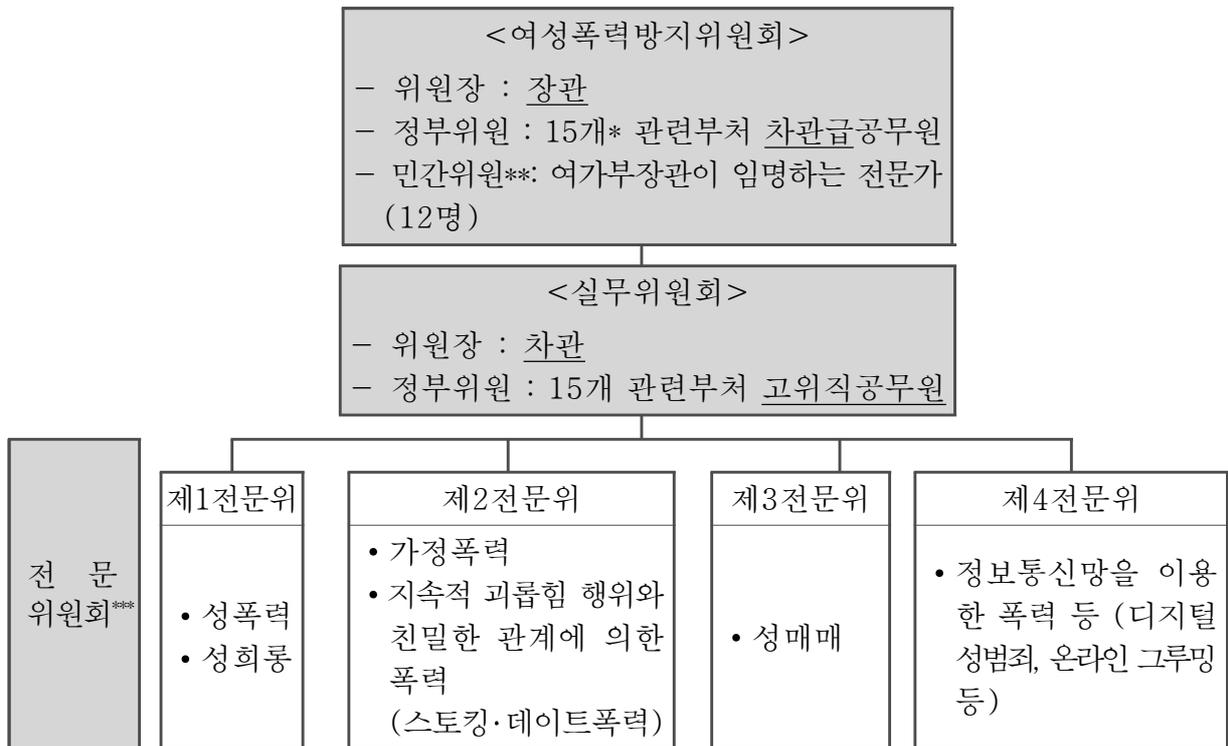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운영
  - 여성가족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각종 대책 이행점검

### □ 그간의 추진실적

####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 15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운영('20.2월~)
  - \*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경찰청
- \*\*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대표성 여부 및 성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 고려 총 12명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구성(임기 : 2년)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상 여성폭력 정의(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를 기반으로 4개로 구분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실적

차수	구분	일시	검토내용
제1차	실무위원회	202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li> <li>○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계획</li> </ul>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0.2.20.	
제2차	실무위원회	2020.5.12. ~5.15.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li> <li>○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부처별 현황 및 이행계획</li> </ul>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0.5.21.	
제3차	실무위원회	2020.11.2. ~11.3.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안)</li> <li>○ 2020년 지자체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li> <li>○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결과</li> <li>○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하반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li> </ul>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0.11.6.	
제4차	실무위원회	2021.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li> <li>○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li> <li>○ 부처별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li> <li>○ 여성폭력 통계 구축방안</li> </ul>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1.3.29. ~3.30. (서면)	
제5차	실무위원회	2021.10.15. ~10.18.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li> <li>○ 스톱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li> <li>○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점검 결과</li> <li>○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li> <li>○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li> <li>○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li> </ul>
	여성폭력방지위원회	2021.10.26.	

– 여성폭력방지 전문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일시	검토내용
전문 위원회	제1전문위 (성희롱·성폭력), 제4전문위 (정보통신망 이용 폭력)	2020.6.30.	○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점검 등 ○ 21대 국회 미투 법안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주요 부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점검 결과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공유 금지 관련 검토
	제2전문위 (가정폭력)	2020.8.7.	○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및 사각 지대 해소 방안 ○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
	제3전문위 (성매매)	2020.9.16. ~9.29.	○ 부처별 성매매방지 실적 및 추진계획 ○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전문 위원회	제1차 (가정폭력)	2021.4.18.	○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개선 및 추진 실적
	2차 (성매매)	2021.6.11.	○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 및 계획 ○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

※ 필요 시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분석평가, 주요 정책 이행점검 등 여성폭력방지정책 이행력 제고

○ 추진 일정(안)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4/4분기	–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6회	4회	4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공문
○ 성과목표치 산식 :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운영 개최 횟수				

□ 기대효과

-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부처 간 연계·협력 및 정부위원, 민간위원의 심의·조정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과성 제고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조정 활성화

□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정보희 서기관 우희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82 02)2100-6383
------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각종서비스 연계,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으로 수행

## □ 그간의 추진실적

- 특수법인 설립 법적근거(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정·공포('18.12.18)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전환('19.12.19)

## □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구축 및 협력

- 피해자 지원시설 네트워크 구축
  -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망 활성화
  - 피해자 지원 정책·제도 제안 등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실시
  - 전문가 자문 및 전담팀 운영을 통한 위기 개입 및 대응 강화
- 피해자 지원시설 기관역량 강화
  - 지원역량 상향 표준화를 위한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 여성폭력 종합지원 정보 안내 및 지원사례 공유 확산
- 피해자 지원 통계 및 실적관리
  - 폭력피해 유형별 피해자 지원 실적관리

- 여성폭력방지 정책연구 및 홍보

- 여성폭력방지 정책연구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여성폭력 예방 및 홍보
  -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대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여성폭력 피해 지원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확산

- 여성폭력방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시스템(24시간) 운영을 통한 피해 상담 접근성 향상
- 해바라기센터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해바라기센터 업무효율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 여성폭력피해자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운영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종사자 보수교육 운영
- 종사자 대리외상 해소 및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폭력 방지 종합교육 체계 수립 및 교육내실화를 위한 연구 추진

-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 디지털 성범죄 대응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확대
- 성폭력 등 발생기관 재발방지
  -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파견 및 사건처리지원단 운영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운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연구 등

-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
  - 일본군'위안부' 관련자료 조사 및 교육홍보 등 실시
- 일본군'위안부' 문제관련 민간단체 공모사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 실시
- 일본군'위안부' 문제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아시아 분쟁지역의 전시 성폭력 문제와 함께 학술적으로 조망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지원 (일반회계)	14,574	14,574	14,846	272	1.9
국비	14,574	14,574	14,846	272	1.9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폭력 등 재발방지 컨설팅 파견기관 수(개소)	94	201	210	전년 실적 대비 약 5% 증가된 수치로 선정

기대효과

-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담기구 운영으로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각종서비스 연계,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계속)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김창후 사무관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06 02)2100-6307
------	----------------	-----	--------------------	------	------------------------------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지역사회 단위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시설과 지자체, 경찰 간 연계 지원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사업대상)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경찰(지방청, 경찰서)
- (주요내용) 가정폭력 등 전반에 대한 사건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지자체, 경찰 대상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운영 방안 및 정책·제도 개선 방안 도출

### □ 그간의 추진실적

- 피해발생 초기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협업 워크숍 개최('20년 총 17회)
  -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참석
- 폭력피해 대응강화 협업 워크숍 개최('21년 총 10회)
  -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참석

### □ 2022년도 시행계획

#### ○ 추진 내용

- 여성폭력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참여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연 10회)

####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경찰, 지자체, 피해자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워크숍, 회의 개최
2/4분기	- 경찰, 지자체, 피해자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워크숍, 회의 개최
3/4분기	- 경찰, 지자체, 피해자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워크숍, 회의 개최
4/4분기	- 경찰, 지자체, 피해자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워크숍, 회의 개최

○ 예산 현황 : 기포함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예산에 포함되어 집행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회의)	17회	10회	10회	네트워크 워크숍, 회의 개최

□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초기 대응력 강화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 협업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담당자	박윤희 주무관 최윤미 주무관	전화번호	2100-6423 2100-6428
------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월 시행)」상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등 여성폭력 통계를 수집·산출하여 공표
  - \* △ 여성폭력 통계 범위·목록 분류 및 체계 구성, △ 관련 통계 수집·산출 및 관리, △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쉬운 형태로 여성폭력통계 정보 제공

##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통계 구축 및 운영 위탁 추진을 통한 ‘여성폭력 통계 지표 체계(안)\*’ 마련('20년)
  - \* 여성폭력 발생·피해·지원 관련하여 수집·산출이 필요한 여성폭력 통계 범위·목록 분류
- 여성폭력통계 지표 체계(안)에 따른 통계 수집,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 여성폭력유형별(이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아내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등) 범죄 통계 산출 가능하도록 범죄통계원표 개정 요청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 발생·피해·피해자 지원 관련 통계를 망라한 ‘여성폭력통계’ 구축
- 추진 내용 및 방법
  - '22년 여성폭력통계 지표 체계에 따른 수사·사법기관, 피해자 지원 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여성폭력 관련 통계 수집
    - \*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위탁사업 추진
  - 알기 쉬운 형태로 여성폭력통계 수록한 보고서\* 마련
    - \* 여성폭력 지표별 통계정보, 최근 지표 동향을 다양한 도표·그래프, 알기 쉬운 설명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관계부처·기관별 생산하는 여성폭력통계 수집
2/4분기	-
3/4분기	- 여성폭력통계 정리·검토 및 보완 요청
4/4분기	-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마련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1,865	1,640	2,341	476	25.5
국비	1,865	1,640	2,341	476	25.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여성폭력 통계 보고서 마련	통계 목록·체계 (안) 마련	여성폭력통계 운용지침 마련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마련	여성폭력통계 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				

기대효과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및 통계 기반 정책 설계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통계 구축 및 운영 위탁(계속)
- 여성폭력통계 공표('25년)

## □ 기타 사항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신규 여성폭력통계\* 생산을 위해 관련 부처·기관에서의 통계원표 및 시스템 개선 추진 필요
  - \*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
- 여성폭력 발생통계의 경우, 신고·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정확한 통계 생산·관리가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기관에서의 협조 필요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김창후 사무관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06 02)2100-6307
------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19.12.25.)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검찰청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 □ 그간의 추진실적

- '19. 7.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포럼 개최
  - 전문연구검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 연구진행하여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 및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등의 주제로 연구결과 발표
- '20. 5. 디지털·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사범 통계 구축
  - 기존 검찰통계사무규정 내 성폭력사범의 일부로 분류되었던, 디지털·성착취물 관련 성범죄사범을 단일사범으로 분류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반포,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 등) 7개 대표죄명으로 구성하여 통계 구축
- '21.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세부 죄명 신설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 대응하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통계 죄명 신설

### □ 2022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통계 구축(연중)
  -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여성폭력 통계 구축 노력
- 유관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 협업시스템 강화(연중)
  - 여성폭력 통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여성 폭력 통계 개선 방안 공동 연구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해	당	없	음	
국비					
지방비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여성폭력통계 신설(건)	1	1	1	검찰통계시스템

기대효과

○ 여성폭력 통계 구축을 통해 여성폭력 실태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사항

○ 현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진행으로 별도의 검찰통계시스템 개선 어려움

○ 통계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타기관에 일부 통계 제공 어려움

담당부서	대검 형사4과	담당자	고성민 수사관	전화번호	02)3480-2527
------	---------	-----	---------	------	--------------

####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법무부)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19.12.25.시행) 및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여성폭력 통계 구축

##### □ 그간의 추진실적

- '21. 2. 여성통계 지표 구축에 따른 의견제출(여성가족부)
- '21. 4. 여성폭력통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참석(여성가족부)
- '21. 10. 여성폭력통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참석(여성가족부)

##### □ 2022년도 시행계획

- 여성폭력 통계 구축(연중)
  - 신상정보등록시스템을 활용한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 등의 유형별 현황
  - 성폭력,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현황
  - 성폭력,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진술조력인 지원 현황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폭력유형별, 성별, 시도별, 의료비, 자립지원 등 지원 현황
- 예산현황 : 해당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21년)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 여성폭력 통계항목 개편(회)	1회	1회	- 연중 통계자료 제출

##### □ 기대효과

- 여성폭력 관련 통계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법률 및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정재훈 계장	전화번호	02)2110-3998
------	-------------------	-----	--------	------	--------------

####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 □ 과제개요

- 경찰청 여성관련 통계 현황을 파악, 여가부 여성폭력 통계 구축 관련 부처 간 통계지표 등을 공유하여 여성안전 정책 추진에 기여

#####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 통계 구축 관련 여가부 주재 관계부처 논의 참석(4·10월)
  - 경찰청 통계 현황 및 피의자·피해자간 관계 구분 세분화 필요 의견 제출

• (경찰청 통계 현황) KICS 원표 기반 범죄통계시스템(CSS)을 통해 생산 증으로 최종 및 가해자 기준의 총계위주의 통계 산출 가능할 뿐 여성폭력 통계 관련 세분화된 통계 산출 불가

- 범죄통계시스템(CSS) 개선사업에 따른 여성폭력 관련 개선 필요사안 검토
  - '22년 경찰청 소관기능에서 경찰청 통계 개선사업 추진 예정

##### □ 2022년도 시행계획

- (관계부처 협업 강화) 여가부 범죄통계 구축 관련 회의체·의견 조회 등에 경찰청 안을 적극 제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 (경찰청 통계 개선 사업) 여성폭력·성별 통계 등 원표 세분화 등을 요청·개선안 반영 추진
  - 여성폭력 통계 관련 △가·피해자간 관계 세분화 △살인범죄에 대한 선행행위 유형별 통계 생산 등 요청 예정
- 성과지표
  - 해당 없음 -

담당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담당자	김지윤 경사	전화번호	02)3150-0904
------	----------------	-----	--------	------	--------------

#### 4-3-4-① 여성폭력 통계 구축

##### □ 과제개요

- 성폭력 등 여성 관련 범죄통계의 신뢰도 제고
  - 여성대상 범죄현황 파악 및 예방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인 범죄통계의 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의 공동 대응 필요
  - 국내 범죄통계 문제점 파악 및 효율적인 통계 구축을 위한 한국범죄분류체계 개발 추진

#####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 관련 범죄통계 분류체계 개발
  -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의 국제범죄분류(이하 ICCS\*) 채택 및 이행 권고에 따른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개발 추진(1단계, '17~'20년)
    -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 성범죄(ICCS 대분류 03)를 포함한 한국범죄분류 개발연구('20)
  - 국제범죄분류체계 및 국내 죄명코드 연계율 제고 등 한국범죄분류체계(안) 고도화 1차년도 개발연구('21)
- 여성 관련 범죄통계 작성기관 협력체계 구축
  - 범죄통계 관련 분류체계 개선, 국제범죄분류와 한국범죄분류체계 간 여성 관련 범죄 연계 타당성 검토, 자료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관 협업\* 실시
    - \* '한국범죄분류체계 개발 T/F협의체 운영(성범죄 분야 등)'('20.7., '20.9., '20.11.), '통계청-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분류 공동 세미나'('20.11.)
    - '통계청-대한범죄학회-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21.11.)
    -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부처(법무부,대검찰청,통계청)간 실무협의회'('21.12.)

##### □ 2022년도 시행계획

- 한국범죄분류체계(안) 일반분류 제정 연구\* 실시
  - 국제범죄분류체계(대분류 03 성범죄 등)와 연계된 국내 죄명코드의 적합성 검토, 신규 범죄명 추가방안 등 연구 추진(~'22)
    - \* 2023년 일반분류 제정 예정

- 국내외 관련 기관·기구 협업 강화 및 이용자 인식 제고
  - 한국범죄분류체계 합의점 도출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국제기구(UNODC) 국제범죄분류 개선 제안 검토
  - 한국범죄분류 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분류항목 해설서 제공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사항 없음

기대효과

- 국제표준분류 기반의 한국형 범죄분류개발로 일관성 있는 국내 여성폭력 범죄 통계 제공 및 국제비교성 제고

담당부서	통계청	담당자	최종희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2180
------	-----	-----	---------	------	--------------

## □ 과제개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19.12월 시행)」 상 여성폭력의 지역별·연령별·직업별 분포, 여성폭력의 발생원인·배경, 여성폭력의 유형·특성·빈도 등에 대해 조사\*
  - \*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 실시

## □ 그간의 추진실적

- 문항 개발, 표본설계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사전연구 추진(’20년)
- 개별법에서 누락된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 최초 실시(’21년)
  - \* 조사표 확정 및 표본설계(8월), 통계작성 승인(9월, 통계청), 조사 실시(9~10월, 만 19세 이상 여성, 표본 7천명)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공표
    - \* 스토킹·데이트 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피해 경험을 최초 공표
- 추진 내용 및 방법
  -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 \* 폭력 양상별(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통제, 스토킹) 피해경험과 가해자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친밀한 관계, 데이트 폭력 실태 분석
  - 보도자료 배포 및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 통해 공개
  -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성폭력통계’ 지표에 반영 여부 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통계청 협조
2/4분기	-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도자료 배포
3/4분기	-
4/4분기	-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1,865	1,640	2,341	476	25.5
국비	1,865	1,640	2,341	476	25.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	사전연구 실시	본조사 실시	결과 공표	보도자료
○ 성과목표치 산식 : -				

기대효과

- 주요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여성폭력 양상별 피해 경험 분석을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조사 통계 생산
- 스토킹, 데이트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폭력 피해 등 그간 개별법에서 누락되었던 여성폭력 실태 파악을 통해 여성폭력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24년)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김창후 사무관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06 02)2100-6307
------	----------------	-----	--------------------	------	------------------------------

## □ 과제개요

- 기본계획 이행평가 및 정책 추진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 그간의 추진실적

- 여성폭력방지정책 평가지표 신규 개발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를 위한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략센터’ 운영 예산 확보(150백만원)
-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지표 개발
  - \* 시행계획 대비 이행정도, 추진성과, 성과목표달성도, 예산집행달성도

##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 추진 내용 및 방법
  -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석·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연구 추진
    -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성과지표(안) 개발·검토
- 추진 일정

시기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1/4분기	-
2/4분기	-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지침 안내('22.4월)
3/4분기	-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실시('22.7~9월)
4/4분기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성과지표(안) 마련('22.12월)

○ 예산 현황

- 예산사업 여부 :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예산(b)	증 감	
	예산(a)	집행(a')		증감액 (c=b-a)	증감률 (c/a×100)
○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1,865	1,640	2,341	476	25.5
국비	1,865	1,640	2,341	476	25.5

○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목표치 (2022년)	산출근거
	(2020년)	(2021년)		
○ 성과지표명 : 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	분석·평가 지표 개발	기본계획 성과지표 개발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 성과목표치 산식 : -				

기대효과

○ 여성폭력방지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 측정 및 환류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2023년도 이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 및 환류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담당자	김창후 사무관 김민형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06 02)2100-6307
------	----------------	-----	--------------------	------	------------------------------